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체계 현황 및 확대방안

연구 책임 심 선 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연구 지원 황 나 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Gyeonggi-do Women & Family Foundation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체계 현황 및 확대방안

발행인 김혜순

발행일 2023년 10월 31일

발행처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전화 031)220-3900

홈페이지 www.gwff.kr

인쇄 디자인펌킨

I S B N 978-89-6432-638-1 93330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연구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배경과 목적

- 경기도에서는 2021년 8월 10일, 「경기도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부터 공동대응팀을 구축하여 운영 중임. 2021년 부천시, 하남시, 2022년에는 김포시, 안산시, 2023년에는 파주시, 화성시, 과천시, 오산시가 선정되어 현재 8개의 시군에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운영 중임.
- 2023년 1월,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구축은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26년까지 31개의 시군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공동대응팀이 구축되고 운영된지 3년차가 되는 시점에서 공동대응팀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검토하고, 공동대응팀이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나. 연구의 내용과 방법

-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먼저 기존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현황과 변화 등을 정리함. 둘째, 경기도의 공동대응팀 구축과정과 지원 실적 등을 검토하고 분석함. 셋째, 공동대응팀 소속 APO,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 그리고 공동대응팀 총괄 운영 및 시군의 담당자, 지역의 유관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대응팀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함. 이를 기반으로 공동대응팀의 확대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주요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 서면조사 및 면접조사, 전문가 자문회의임. 문헌연구로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 공동대응팀 구축 과정과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 등을 검토함. 서면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공동대응팀의 주요 업무 내용, 업무 진행 과정, 주요 협력체계, 운영 상의 어려움이나 한계 등을 조사함. 그리고 중간 보고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여 연구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연구에 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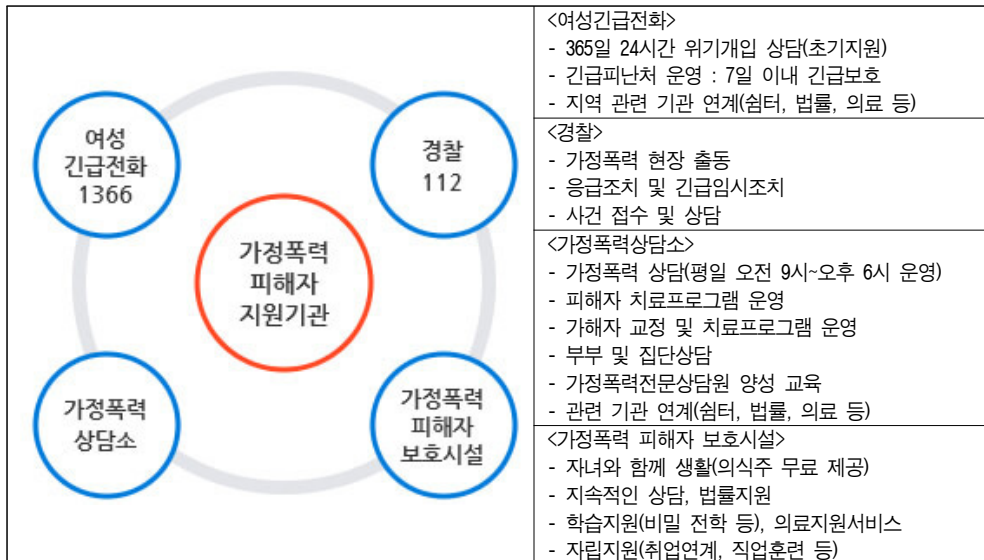
2.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구축과 기반 강화

가. 폭력 유형별로 구축된 피해자 지원체계

1)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 1980년대부터 가정폭력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가시화되면서 여성운동계, 여성(학)계 등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켰고, 법제정 운동, 인식개선 활동 등이 이루어짐.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97년 11월 18일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과 ‘가정폭력피해자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 이 제정되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기 시작함.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는 대표적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경찰(APO),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음.

[그림 1]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sp/hrp/sp_hrp_f004.do)

2)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도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음.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1980-90년대 여성운동의 한 형태로 시작하여 여성주의 상담을 표방하는 민간 상담소에서 시작되었다가 1994년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의 지원이 증가하고 국가 주도형 기관들이 설립되고 확장되는 형태가 되었음(박선영 외, 2018: 63).
-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에 근거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법 제11조와 제13조에서 각 시설의 주요 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상담, 보호시설로 연계, 의료지원, 법률지원,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성폭력 보호시설은 숙식 제공을 기반으로 성폭력 상담소와 유사한 지원업무를 수행함.

[그림 2]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상담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기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 심신 회복을 위한 심리 치료 프로그램 • 피해자가족까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상담 • 무료변론이나 고소대리 등 소송지원 • 「무료법률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개 감염 질병검사 및 예방치료 •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의 임신중단 지원 • 진단서 발급비용 및 기타 법적증거 확보(응급키트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 지원 • 치료 및 돌봄이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간병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사업'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폭력 피해 여성과 그의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저가에 공급 • 2008년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임대주택 24호를 공급하면서 시범적으로 실시. • 2022년 12월 기준, 전국에 354호의 주거 지원시설이 운영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비,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 •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 보호시설 퇴소 시 1인당 500만원의 '차립지원금'을 제공 • 피해자의 자녀 및 형제자매 등의 돌봄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

주. 여성가족부(2023). 「2023년 여성이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정리.

나.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체계의 구축과 변화

1) 통합지원체계의 필요성 대두

- 각각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피해의 회복과 일상적 삶으로 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왔지만, 한 기관에서 모든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거치면서 피해 상황을 여러 번 이야기해야하는 어려움 등이 문제로 대두됨. 다른 기관으로 연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되거나 추가적인 피해(2차 피해, 3차 피해 등)가 발생하고, 긴급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통합지원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2) 해바라기센터 설립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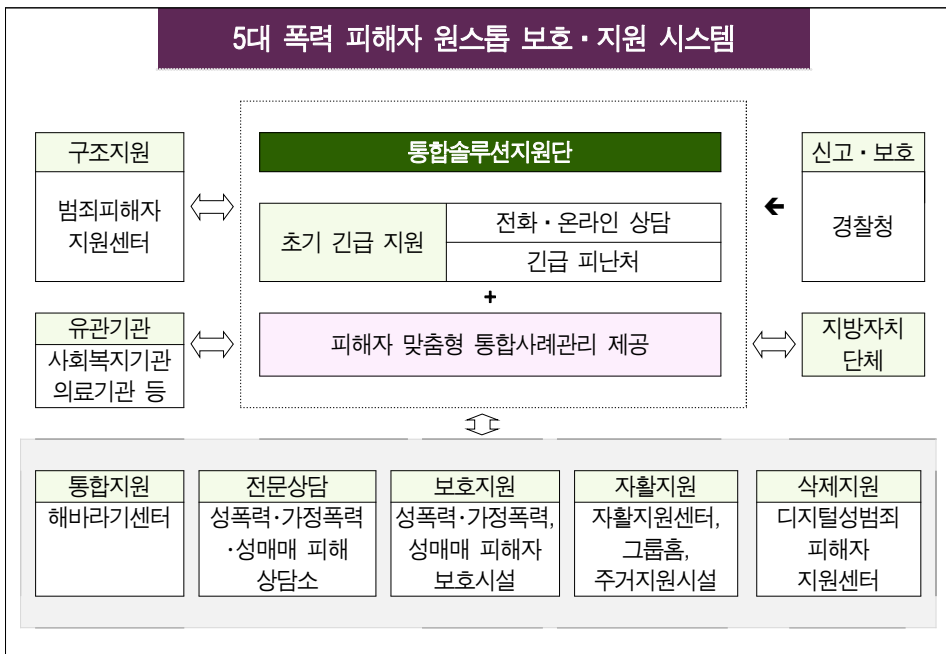
- 2004년 「성폭력방지법」 제18조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기관 설치 운영에 근거를 두고, 해바라기센터가 설립됨. 정부가 민간기관과 협약하여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가 처음으로 개소하였고, 이후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전국에 39개가 운영 중임(여성가족부, 2023).
- 해바라기센터는 3개의 유형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위기 상황의 대응이 중심이 되는 ‘위기지원형’, 19세미만 아동·청소년 및 지적장애인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지원에 초점을 두는 ‘아동·청소년형’, 위기상황 대처 후 상담 및 치료 등 기타 지원까지 제공하는 ‘통합형’으로 구분됨. 초기에는 성폭력 통합센터로서의 기능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을 포괄하여 지원하고 있음.

3) 초기 대응체계로서 여성긴급전화 1366과 그 기능의 확대

- 여성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체계로서 여성긴급전화 1366이 있음. 여성긴급전화 1366은 초기에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어 현재에도 「가정폭력처벌법」을 근거로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여성 폭력의 유형이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여성폭력을 포괄하여 지원하고 있음. 여성긴급전화 1366은 전국에 18개가 운영 중이며, 초기대응체계로서 모든 형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신고 접수 및 관련기관 연계, 긴급구조를 수행하고 있음.

- 지난 4월 26일, 정부(여성가족부)는 ‘5대 폭력’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로서 ‘통합솔루션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으며, 사업 수행기관으로 1366센터를 지정함. 5대 폭력은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로, 통합솔루션지원단을 통해 5대 폭력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현재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와 경기센터에서 사업을 수행 중으로 여성폭력 피해 통합사례관리 역량을 갖춘 전담인력 2명을 배치하여, 피해자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림 3] 5대 폭력 통합지원 사업체계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4.26.(최종검색일: 2023.9.13.)

다.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등장과 재편

1) 서울시의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 가정폭력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로서 서울시에서는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2018년 4월 서울경찰청과 MOU를 체결하면서 가정폭력 신고 사례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10월에 센터를 개소하여 시범운영을 시작함. 2019년에는 5개의 구에 추가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2020년 7월에는 10개구에 추가 설치하여 25개구 전 지역에 설치할 계획을 밝힘(서울시, 2020). 2021년 말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30개 경찰서)에서 모두 운영 중임(경찰청, 2022: 102-103).
-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경찰(APO)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가정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 가정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됨. 상담원, 통합사례관리사, 경찰(APO)이 한 팀을 이루어 가정폭력 피해를 지원하고 위기가정 발굴 및 사후 관리 등을 수행하는 구조임.

[그림 4]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조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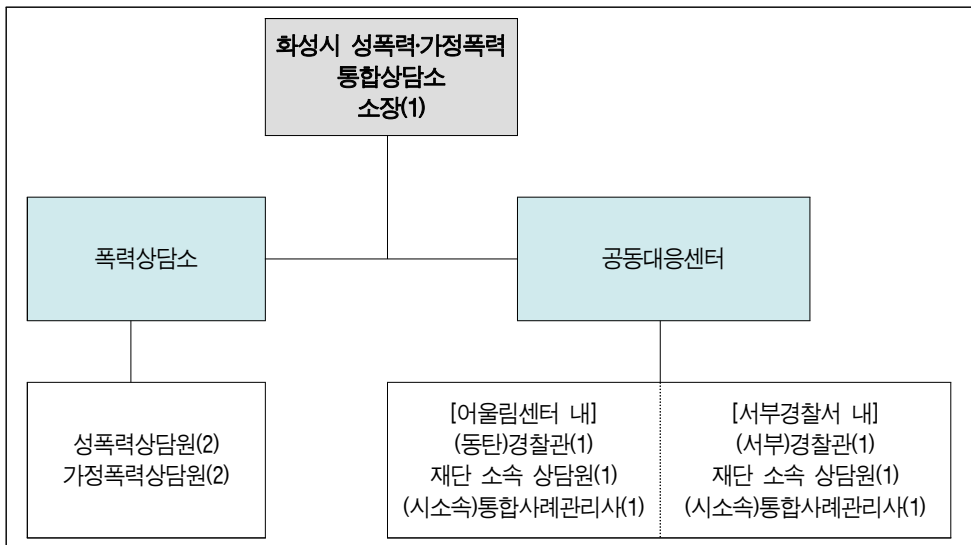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2020.7.17.). 서울시-경찰청, 25개 전 자치구에 가정폭력·학대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보도자료. (p4)

2) 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 2019년, 화성시에서는 서울시의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벤치마킹하여 공공형 통합상담소를 설립함(정혜원, 2021; 김중곤, 2022).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가 가정폭력 통합지원체계라면 화성시는 가정폭력뿐 아니라 성폭력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 경찰이 팀을 이루어 폭력 피해 사건을 논의하고 지원한다는 점은 유사함.

[그림 5] 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조직도



주. 시 ⇨ 화성동탄경찰서: 동탄 호수공원 어울림센터(통합상담소) 내 경찰관 파견 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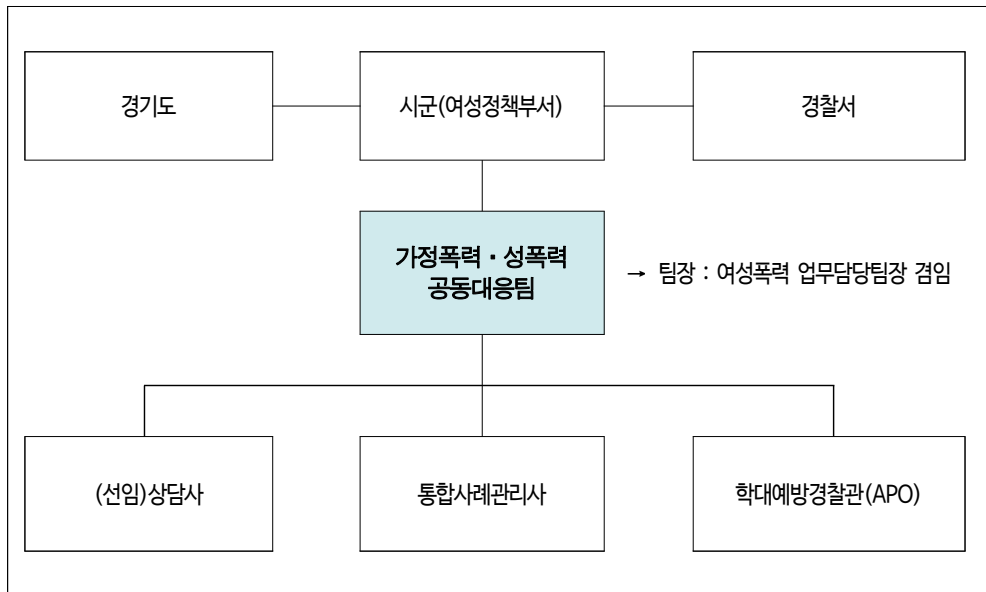
시 ⇨ 화성서부경찰서: 서부경찰서 내 상담원, 통합사례관리사 파견 근무

출처. 화성시 공동대응팀 내부자료

3) 경기도의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 2021년, 경기도에서는 공공기반의 상담소인 ‘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와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참조하여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구축함. 공동대응팀 구축 시 화성시나 서울시의 사례를 참조하였고, 인적 구성, 주요 기능, 운영체계 등에서 이들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은 경기도, 시군, 경찰(APO)의 협력을 기반으로 구축됨. 구체적인 인적 구성은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 APO이며, 시군의 여성폭력 업무 담당 팀장이 공동대응팀의 팀장을 겸임하는 구조임. 팀장이 부재한 경우에는 상담사가 팀장 역할을 대리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APO는 해당 시군의 경찰서에서 배치하게 되며, 시군의 경찰서 상황에 따라 공동대응팀 APO의 인력 규모는 상이할 수 있음.

[그림 6]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조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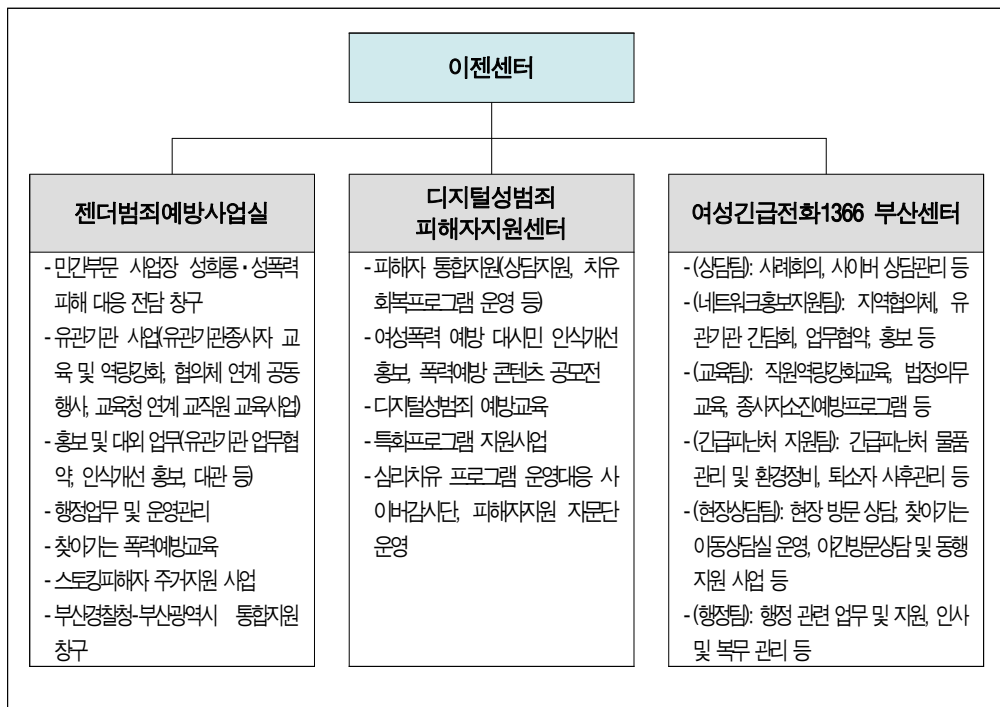


출처: 경기도.(2023).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지침. (2차개정판). p15.

4) 부산시의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젠센터)

- 부산의 경우, 지난 2022년 9월에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합센터로서 ‘여성폭력 방지종합지원센터’ 를 개소함. 2021년 2월부터 부산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2021년 12월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를 일부 개정하여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운영 사무 위탁 계약, 건물 내부 리모델링, 신규 인력 채용 과정을 거쳐서 9월에 개소함.
-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는 1개의 실과 2개의 센터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젠더범죄예방 사업실’ 에서는 민간부문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과 교육 등을 담당함.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기관으로서 삭제지원, 상담지원, 수사재판 지원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업무를 수행함.

[그림 7] 이젠센터 조직도



출처: 이젠 센터(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egen.or.kr/introduce/org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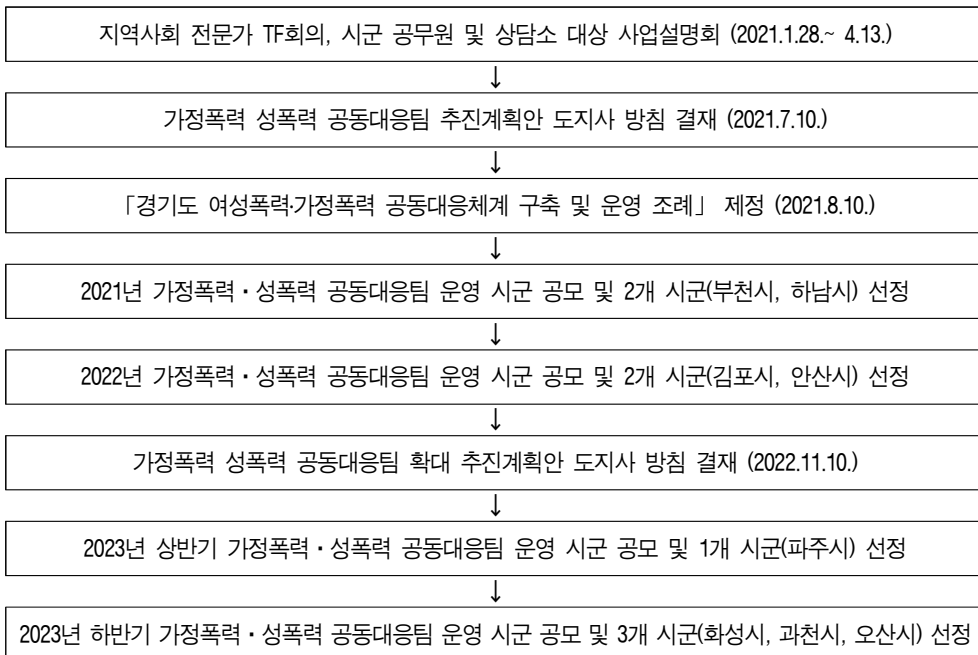
3.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구축과 운영 현황

가.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구축과 기본 구조

1) 공동대응팀 구축 배경과 추진 과정

-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다양한 형태로 변이되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에서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대응체계를 고민해왔음. 2021년 1월부터 준비작업을 시작하여, 2021년 8월에는 「경기도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도의 공모사업의 형태로 2021년 공동대응팀이 출범함.
- 2021년인 첫 해에는 ‘부천시’와 ‘하남시’가 선정되었고, 그 다음 해인 2022년에는 ‘김포시’와 ‘안산시’가 선정되었음. 2023년 상반기에는 ‘파주시’가 선정되었고, 하반기에는 화성시, 과천시, 오산시가 추가되어 현재 8개의 시군에서 공동대응팀을 구축 및 운영 중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8]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구축 과정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2023.10.11. 제공)

2) 공동대응팀의 인적 구성과 주요 담당 업무

-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은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 학대예방경찰관(APO)으로 구성되며 각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APO는 112 신고 사건을 1차적으로 정리하고, 동의한 사건에 대해서는 정리한 내용을 상담사에게 전달함.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상담사나 통합사례관리사와 가정을 방문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APO가 직접 관리함.
 - 상담사의 경우는 동의한 사건에 대한 초기 상담을 진행함. APO가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상담을 진행하여 상담기록지를 작성하고 심층적인 상담이나 기타 다른 복지서비스 등 연계가 필요한지를 파악하여 이후 절차를 진행함.
 - 통합사례관리사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발굴하거나 연계하는 역할을 함. 폭력 피해자의 경우 피해 상황을 벗어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뿐 아니라 생계비, 의료비 등 기타 복지 지원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상황뿐 아니라 피해자의 삶 전반의 상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을 연계함.

[표 1] 공동대응팀 내 구성원별 주요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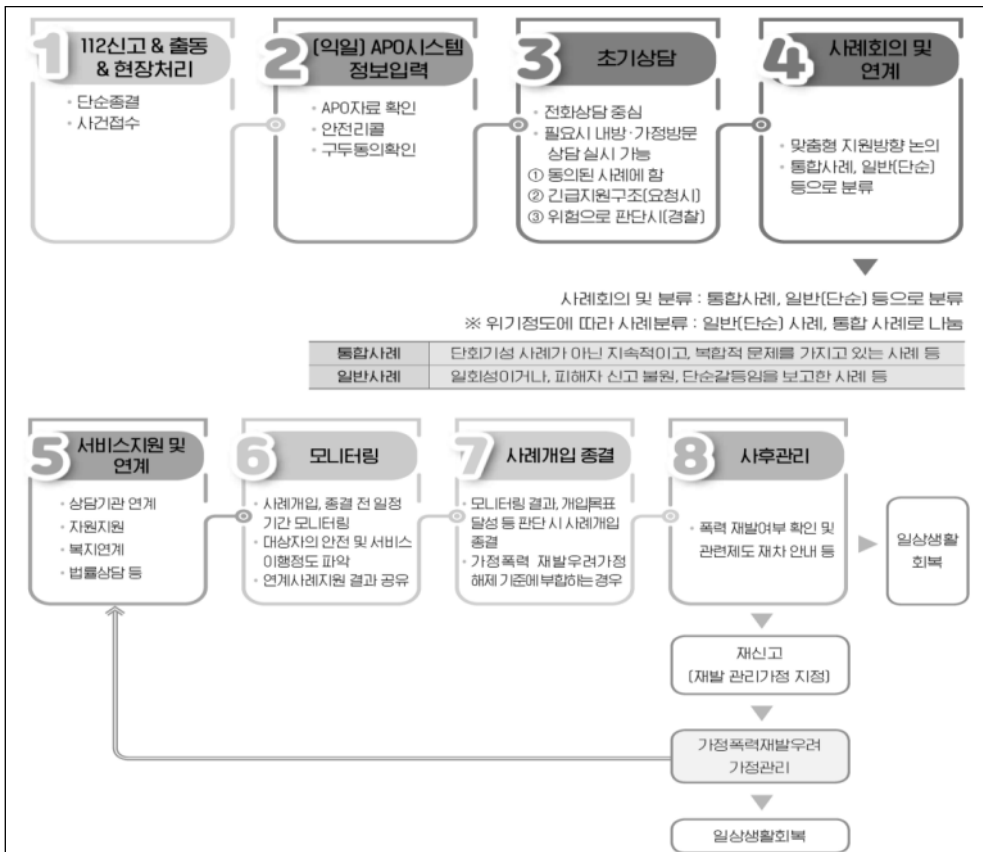
경찰(APO)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2신고 사건 접수 및 처리 - 다음날 APO 시스템에 사건을 입력 - 입력된 사건을 중심으로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와 사례(분류) 회의 - 재발우려가정 관리: 동의한 사례는 상담사에게 전달, 비동의 사례는 직접 관리 - 사례(분류) 회의, 필요 시 추가 회의 -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방문(상담사 또는 통합사례관리사와 동행) - 신고된 사건의 동의 절차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한 사례에 대한 상담 및 상담 기록지 작성 -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 연계 의뢰서 작성 및 공문발송 - 초기 상담 후 통합사례관리사와 지원 방향에 대한 논의 - 사례(분류) 회의, 필요 시 추가 회의 - 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연락이 되지 않을 시 APO와 가정방문 - 대상자 상담 후 경제적 지원 또는 피해자지원 필요시 통합사례관리사와 상담사가 추가 방문 - 기타 행정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지원 및 각종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 재발우려가정 관리 - 피해자 가정(현장)방문 및 동행지원 - 일반(단순) 사례의 경우 통합사례관리사가 초기 상담 진행 - 사례(분류) 회의, 필요 시 추가 회의 - 민간상담소 등 지원 가능한 연계 기관 발굴 - 기타 행정 업무

주. 경기도(2023).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지침」과 본 연구의 서면조사의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함.

3) 공동대응팀의 업무 수행 절차

□ 공동대응팀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음. 경찰 112에 사건이 신고되면,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현장 및 전후 상황을 판단하여 현장에서 종결하거나 신고접수를 함. 신고접수된 사건은 다음날 APO 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입력하고,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 원하는 후속조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함 (안전 리콜). 이 과정에서 상담 등 기타 추가 지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동의한 사례에 한해 공동대응팀의 ‘상담사’ 혹은 ‘통합사례관리사’에게 연결하여 상담을 진행한 후, 공동대응팀 내에서 사례회의를 통해 이후의 지원방향을 논의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게 됨.

[그림 9]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지원과정



출처. 경기도. (2023).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지침. (2차개정판). p28.

나. 공동대응팀 운영 현황

1) 공동대응팀 개소 현황

- 2023년 10월 현재, 공동대응팀을 구축 및 운영 중인 시군은 총 8개라고 할 수 있음. 5개 지역은 이미 개소하여 운영 중이고, 3개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 선정되어 개소할 예정임. 공동대응팀을 가장 먼저 구축한 지역은 ‘부천시’ 로 2022년 1월 4일 개소함. 그 다음은 ‘하남시’, ‘김포시’, ‘안산시’, ‘파주시’ 순으로 개소함. 2023년 하반기에는 ‘화성시’, ‘과천시’, ‘오산시’ 가 새롭게 선정됨. 각 시군마다 개소한 시기, 시군의 총괄부서, 인력규모, 설치된 장소 등은 상이함.

[표 2]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 시군 개요

구분	담당부서	선정 년도	모델형	장소	면적	운영인력 ('23년)
부천	여성정책과	2022	공공형	부천시 별관 행정타운	66㎡ (20평)	8명 -경찰관 3명 -상담사 3명 -통합사례관리사 2명
하남	여성보육과	2022	공공형	청사 본관(2층) →2024년 1월 여성회관	31㎡ (10평)	3명 -경찰관 1명 -상담사 1명 -통합사례관리사 1명
김포	여성가족과	2022	공공형	김포시 별관 (사우로 39)	60㎡ (18평)	3명 -경찰관 1명 -상담사 1명 -통합사례관리사 1명
안산	여성가족과	2022	공공형	안산시청사 내 2별관	66㎡ (20평)	6명 -경찰관 2명 -상담사 2명 -통합사례관리사 2명
파주	여성가족과	2023	공공형	파주시청내 별관 →12월 파주시 외청 이전	31㎡ (20평)	3명 -경찰관 1명 -상담사 1명 -통합사례관리사 1명
화성	여성가족과	2023	공공형	동탄 공동대응팀 (동탄 7동 어울림센터)	31㎡ (15평)	3명 -경찰관 1명 -상담사 1명 -통합사례관리사 1명
				서부 공동대응팀 (남양읍 모두누리센터)	31㎡ (10평)	3명 -경찰관 1명 -상담사 1명 -통합사례관리사 1명
과천	가족아동과	2023	공공형	과천지식타운 내	31㎡ (20평)	3명 -경찰관 1명 -상담사 2명
오산	가족보육과	2023	공공형	오산시코딩에듀랩 1층	110.14㎡ (34평)	3명 -경찰관 1명 -상담사 2명

출처.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 운영사업 개요)

2) 공동대응팀의 운영 예산

- 공동대응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지원은 도비와 시군비가 3:7로 배분되는 구조임. 공동대응팀 운영을 시작하는 첫해에는 사무실, 사무관련 기자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에서 100%(3천 만원) 지원해주고, 운영비는 도와 시군에서 3:7로 배분하여 지원하는 구조임.
- 2023년 9월 기준, 공동대응팀을 운영 중인 시군의 총 예산 규모는, 2022년에는 4개의 시군에 300,000천원이었고, 이 가운데 도비 132,000천원, 시비 168,000천원이었음. 2023년에는 5개의 시군에 1,015,000천원이었고, 도비는 388,500천원, 시비는 626,500천원이었음. 운영 인력도 2022년 총 19명에서 2023년에는 총 28명으로 증가하는 등 공동대응팀 운영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표 3] 공동대응팀 운영개요

시군	2022년	2023년
운영시군	부천시, 하남시, 김포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김포시, 안산시, 파주시
운영예산	300,000천원 (도비 132,000천원 / 시비 168,000천원)	1,015,000천원 (도비 388,500천원 / 시비 626,500천원)
운영인력	총 19명 (팀장 4명, 상담사 5명, 통합사례관리사 4명, 경찰 6명)	총 28명 (팀장 5명, 상담사 8명, 통합사례관리사 7명, 경찰 8명)

출처. 경기도(2022). 2022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실적 보고. (2022년 12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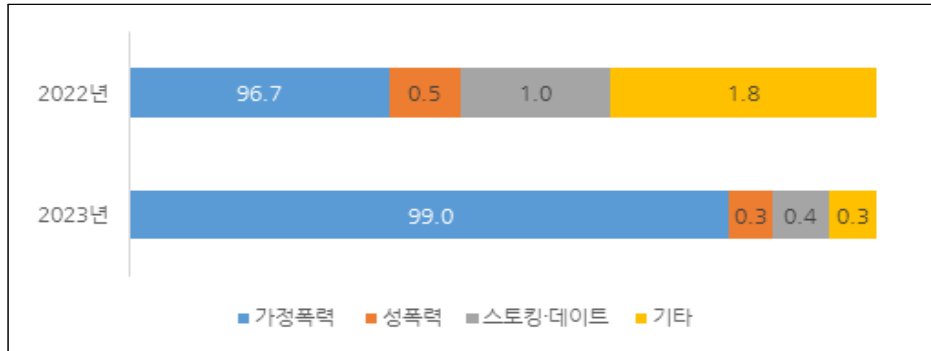
경기도(2023). 2023년 상반기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실적 보고. (2023년 6월 30일 기준)

3) 공동대응팀 운영 실적

- 공동대응팀을 개소하여 일정한 성과를 축적하고 있는 4개의 시군을 중심으로 지원사례의 폭력 유형, 지원대상의 특성, 지원사례의 연령대, 혼인 상황, 지원내용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폭력 유형) 폭력 유형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데이트, 기타’로 분류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가정폭력’의 비중이 96.7%, 2023년 상반기에는 99.0%로 가정폭력 사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10] 지원사례의 폭력 유형(2022~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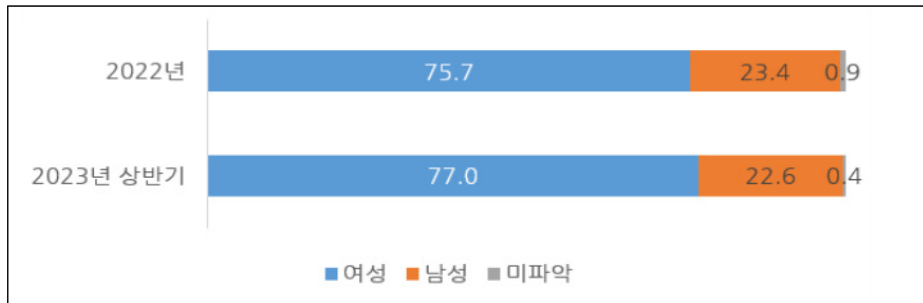
(단위: %)



- (성별) 지원사례의 성별 비율은 2022년에는 전체 지원사례 가운데 ‘여성’ 이 75.7%(2,858명), ‘남성’ 이 23.4%(881명)이었고, 2023년 상반기에는 ‘여성’ 이 77.0%(4,712명), ‘남성’ 이 22.6%(1,386명)이었음.

[그림 11] 지원사례의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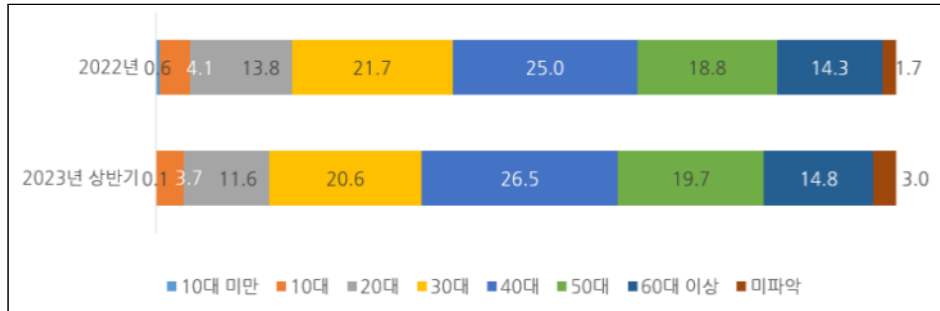
(단위: %)



- (연령) 지원사례의 연령대 분포를 보면, 2022년에는 전체 지원사례 가운데 ‘40대’ 25%(945명), ‘30대’ 21.7%(817명), ‘50대’ 18.8%(709명)의 순으로 나타났고, 2023년 상반기에는 ‘40대’ 26.5%(1,622명), ‘30대’ 20.6%(1,261명), ‘50대’ 19.7%(1,207명)으로 구체적인 비율은 차이가 있었지만 높게 나타난 연령대 순서는 유사했음.

[그림 12] 연도별 지원사례의 연령대(2022년과 2023년 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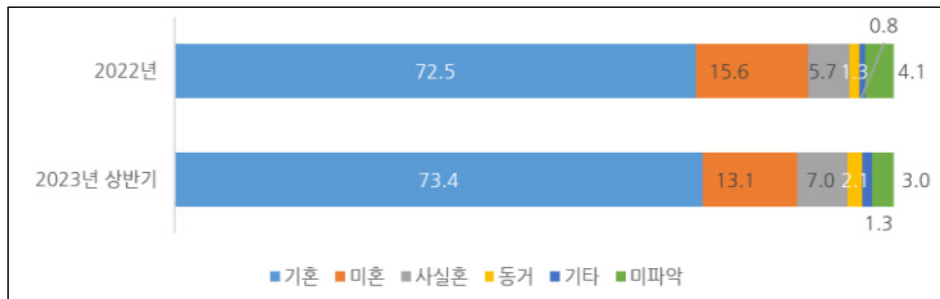
(단위: %)



- (혼인 상황) 지원사례의 혼인 상황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전체 지원사례 가운데 ‘기혼’ 72.5%(2,735명), 미혼 15.6%(588명), 사실혼 5.7%(216명)이었고, 2023년 상반기에는 데기혼 73.4%(4,493명), 미혼 13.1%(803명), 사실혼 7.0%(428명)으로 기혼, 미혼, 사실혼의 순서인 것은 동일했으나 사실혼의 비율이 5.7%에서 7.0%로 다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13] 지원사례의 혼인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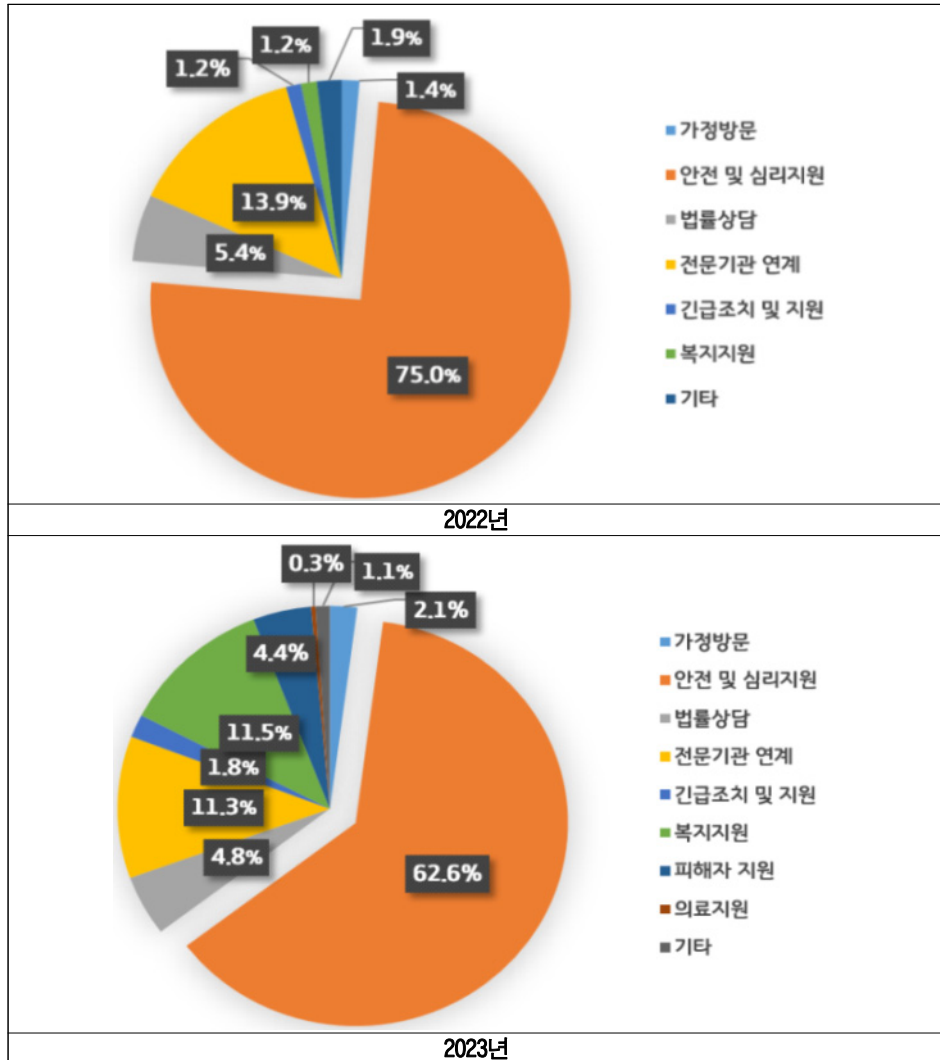
(단위: %)



- (장애여부) 지원사례의 장애 여부를 살펴보면, 2022년에는 비장애인 비율이 전체 지원사례 가운데 82.7%(3,120명), 2023년 상반기에는 전체 지원사례 가운데 94.7%였음.
- (지원내용) 2022년의 지원 내용 현황을 살펴보면, 안전 및 심리지원이 7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문기관 연계가 13.9%로 다음이었음. 2023년에는 ‘피해자지원’과 ‘의료지원’이 추가되었으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원은 안전 및 심리지원으로 62.6%였고, 복지지원 11.5%, 전문기관 연계 11.3%로 그 다음 순이었음.

[그림 14] 지원내용

(단위: %)



- 공동대응팀에서 지원하는 폭력 유형 가운데 성폭력 사례는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2022년 전체 지원 건수가 33건이었다면, 2023년 상반기의 지원 건수가 31건으로 전체적으로 매우 적은 비율이지만 다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그리고 성폭력에 비해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사례가 조금 더 많았는데, 스토킹·데이트폭력의 경우 2022년에는 76건으로 나타났고, 2023년 상반기에는 41건으로 나타났음.

4.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 현황과 과제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가. 조사 개요

1) 서면조사

-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이 설치되어 운영 중인 시군의 공동대응팀 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공동대응팀 업무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 조사는 7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했으며, 서면조사의 형태로 진행함.
- 서면조사 참여자는 모두 23명으로, 직군별로는 경찰관 9명, 상담사 7명, 통합사례관리자 7명이었음. 연령은 20대 1명, 30대 8명, 40대 6명, 50대 6명, 60대 2명으로 20대에서 60대까지 분포되어 있었지만, 30대-50대의 비중이 높았고, 성별은 여성 20명, 남성 3명으로 여성이 다수였음.

[표 4] 서면조사 응답자 특성(개요)

(단위: 명)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23	20	3
연령	20대	1	1	0
	30대	8	6	2
	40대	6	5	1
	50대	6	6	0
	60대	2	2	0
직렬	경찰관	9	6	3
	상담사	7	7	0
	통합사례관리사	7	7	0

2) 면접조사

- 도 및 시군의 공동대응팀 총괄 관리자, 공동대응팀 소속 업무 담당자, 지역의 여성폭력 및 기타 유관기관 관계자, 공동대응팀의 법률상담 변호사 등 다양한 위치에서 공동대응팀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함. 면접조사는 7월 6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하였고, 면접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개별과 집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함.
- 면접 참여자는 총 12명이었음. 공동대응팀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4명, 공동대응팀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 2명, 지역의 상담소 및 기타 유관기관의 관계자 6명이었음. 성별은 모두 여성이었고, 연령은 30대 1명, 40대 4명, 50대 5명, 60대 2명이었음.

[표 5] 면접조사 참여자 현황

(단위: 명)

면접조사 참여자	직위	성별	공동대응팀/폭력피해 지원 관련 경력		연령	기타
			현 근무지/기관 경력	유사기관 경력		
A	주무관	여성	1년 10개월	18년 9개월	50대	개별
B	주무관	여성	3년 4개월	없음	40대	집단
C	주무관	여성	3년 5개월	7년 9개월	40대	집단
D	주무관	여성	1년	12년 1개월	30대	집단
E	팀장	여성	1년	20년	50대	개별
F	변호사	여성	2년 5개월	6년 3개월	40대	집단
G	변호사	여성	8개월	2년 2개월	40대	집단
H	팀장	여성	14년	없음	50대	개별
I	소장	여성	17년 8개월	없음	50대	집단
J	소장	여성	22년 3개월	없음	60대	집단
K	소장	여성	4년 5개월	1년 3개월	60대	집단
L	소장	여성	7년	20년	50대	집단

나. 조사 결과 분석

1) 공동대응팀 구축과 피해자 지원체계의 확대

- 신고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다음 날 콜백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지원을 안내하는 것은 공동대응팀의 주요한 임무임. 공동대응팀은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었고, 경찰 신고사례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찰에서도 폭력 피해 사건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고, 사건 발생 상황에서 경찰의 사건 판단이나 초기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보완한 피해자 지원체계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음.
- 새로운 피해자 지원체계가 구축되면서 기존의 피해자 지원기관들은 자신들이 해오던 역할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음. 상담소의 예산 지원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에 시군에서 받던 예산이 감축될 가능성도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 상담 업무 등을 통합한 형태의 피해자 지원기관들이 구축되면서 피해자 지원기관들의 운영방식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음.

2) 공동대응팀의 주요 업무와 강점

- 공동대응팀의 가장 큰 강점은 모든 신고사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임. 동의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만, 동의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동대응팀에서 빠르게 개입하여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임. 초기 대응과정에서 초기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 초기 대응을 위한 상담의 범위나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일괄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음. 현재 공동대응팀에서는 초기 상담, 그리고 상황에 따라 2~3회 정도까지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으로 연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의 상담소와 업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측면도 있었음.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는 법률자문이 필요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피해자에게 법률지원을 하고 있음. 공동대응팀의 경우도 법무부의 법률홈다터제도를 연결하여 기초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었음. 공동대응팀의 법률상담지원은 지역의 상담소에게도 개방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었음. 지역의 변호사풀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군에서 연계한 변호사 인력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지역의 상담소에서도 도움이 되는

일일 수 있으며, 기초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사건 해결 방식에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공동대응팀은 민·관·경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건 발생 상황부터 복지지원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음. 공동대응팀의 통합사례관리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정보시스템)에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보장급여 수급 여부 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음.
- 시군에서 운영하는 팀이라는 점에서 공동대응팀이 유관기관들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데 강점이 있었음. 시군 기반의 기관이라는 점에서 다른 기관에서 좀 더 믿음을 갖고 협조해주기도 했으며, 공동대응팀이 연계하고 있는 기관은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 가족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행정기관, 아동보호시설, 노인상담기관, 의료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민간 기관 등으로 다양했음. 이러한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형성하면서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공동대응팀의 주요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음.

3) 공동대응팀 운영의 실재와 쟁점

- 공동대응팀을 운영 중인 시군의 지원 실적을 보면, 가정폭력 사건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기본적으로 가정폭력 신고 사건의 비율이 높고, 가정폭력 사건의 재발관리 및 예방 차원에서 APO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스토킹범죄, 디지털성범죄, 데이트폭력 등 폭력의 양상이 변화되고 이에 따라 피해자 지원체제도 새롭게 구축되거나 정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공동대응팀의 지원 대상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이외에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기타 폭력 등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공동대응팀의 출발 당시에는 안전 확인 및 기초상담에 초점을 두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지만, 사건의 특성이나 피해자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을 결정하게 되면서 피해자 지원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게 구성되고 있었음. 현재 피해자 지원 내용을 보면 내방상담, 가정방문, 상담기관 연계, 법률상담, 동행지원, 보호시설 연계, 취업기관 연계 등 다양했음. 공동대응팀이 경찰,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라는 각자 다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해왔던 직군들이 결합된 팀이고, 초기 개입 및 지원과정에서 지원범위가 확장되기도 하는

데, 앞으로의 공동대응팀의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데 지원범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공동대응팀의 사례를 기록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상담 통계 시스템이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담사나 통합사례관리사들은 실적 정리 작업 시 일일이 수작업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음. 사례회의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각자 기록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회의가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사건에 대한 정보가 종합적으로 파악되지 않거나 서로 충분히 공유되지 않을 수 있음. 경기도에서도 통합정보시스템의 필요성을 느끼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다만 예산을 확보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에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상황임.
- 경찰이 공동대응팀에서 사건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신고자/피해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함.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입이나 조치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임.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시 반드시 동의 절차를 거쳐야함. 경기도에서는 비동의 사건에 대한 처리 방침을 고민해왔고, 개인정보 비동의자 정보관리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를 기반으로 비동의사건의 경우도 가명처리 등의 방식으로 사례를 기록하거나 관리하고자 함.

4) 공동대응팀 내부 운영상의 어려움

- 공동대응팀의 조직체계는 시군의 여성관련부서의 팀장이 공동대응팀 팀장을 겸임하는 체계로 되어 있으나 시군에 따라 팀장이 공동대응팀 업무에 관여하는 정도가 차이가 있었음. 공동대응팀 소속 인력은 팀장이나 다른 공무원들과는 다른 공간(별도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공동대응팀 소속 인력이 다른 공무원들과 소통이나 교류를 할 수 있는 물적 환경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팀장 역할을 수행하는 관리자 또한 다른 공간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대응팀 업무에 대한 조정이나 개입, 인력에 대한 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음.
- 사례 관련 회의를 할 때 경찰,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의 각자의 배경과 지원 경험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례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이러한 입장이나 판단의 차이는 지원 방향을 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음.

5.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확대 방안

가. 경기도의 공동대응팀 운영 모델(안)과 쟁점

- 공동대응팀은 공공 기반 모델로서 출발함. 공공의 자원을 활용하여 피해자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시군-경찰이 수평적인 구조로 협력하는 체계임.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각 시군마다 여성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인프라, 지역의 인구 규모 및 특성, 경찰 신고 건수 등 차이가 있었고, 공동대응팀 운영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경기도에서는 2023년 하반기에 공동대응팀을 공모하면서 3개의 모델안을 제시하면서 공동대응팀 운영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3개의 모델안은 ‘공공 기반 모델’, ‘민관 협력 기반 모델’, ‘민간 기반 모델’임.
 - 공공 기반 모델은 공동대응팀의 기본 모델로 현재 구축 및 운영 중인 8개의 시군이 모두 이러한 모델에 기반해 있음. 도-시군-경찰서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공동대응팀의 실질적 운영은 시군에서 하는 형태임. 공공 기반 모델의 특징은 여성폭력 업무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에서 폭력 피해자 지원업무를 한다는 점임.
 - 민관 협력 기반 모델은 공공형 모델과 민간 모델을 결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음. 시군에서 운영 또는 위탁관리하는 기관(복지관, 가족센터, 재단, 여성비전센터 등)이 사업팀으로서 공동대응팀을 위탁 운영하는 방식임. 여성폭력 피해 상담소의 업무를 제도권으로 유입하는 형태로 공공형 모델의 이점을 일부 활용할 수 있는 형태임.
 - 민간 기반 모델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군의 상담소가 공동대응팀을 운영하는 형태임. 기존의 피해자 지원기관의 지원 경험과 상담소의 역할을 공동대응팀으로 흡수하여 가용 인력이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음. 민간 상담소 내의 팀으로 공동대응팀이 위치하게 되며, 새롭게 시도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표 6] 경기도 공동대응팀 운영 모델(안)

구 분	공공 기반 모델	민·관 협력 기반 모델	민간 기반 모델
사업 운영 주체	- 시·군 (여성폭력사업 담당과)	- 시·군에서 운영 또는 위탁관리하는 기관(복지관, 가족센터, 재단, 여성비전센터 등)	- 지역의 상담소
주요 업무	- 112 신고사건 - 일반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업무	- 112 신고사건 - 지역사회 솔루션 전담	- 112 신고사건
설치 장소	- 청사, 공공기관, 시·군에서 관리하는 건물(가족센터, 행복센터, 복지관, 공공여성공간 등)	- 위탁 관리하는 기관이 사용하는 공간	- 상담소 내
인력 구성 및 규모	- 상담사 1명 - 통합관리사 1명 - 경찰 1명(상근)	- 상담사 1명 - 통합사례관리사 1명 - 경찰 1명(비상근)	- 상담사 1명 - 통합사례관리사 1명 - 경찰 1명(비상근)
※ 시군 상황, 범죄발생률, 경찰서 수 등에 따라 인력은 차등 지원되며, 직군별 종사자 수도 변경가능			
행복이음 정보시스템	- 접근 가능(통합사례관리사가 사용)	- 접근 가능(통합사례관리사가 사용)	- 접근 불가(공동대응팀 거점센터에서 열람지원)
종사자 채용 및 관리	-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 공무원, 기간제 등 정원(외)인력	- 위탁 관리하는 기관의 정원(외)인력	- 상담소 인력(계약직) ※ 업무지시 시군, 도에서 직접 수행

주.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정리함.

나. 공동대응팀의 안정적인 구축과 확대 방안

1) 시군의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운영모델안 도입

- 공동대응팀 구축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시군별로 공동대응팀 구축에 대한 의견, 공동대응팀 운영 환경, 지역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현황 등이 상이했음. 폭력 피해 지원 수요,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 등이 다르게 나타나면서 공동대응팀 운영에도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음.
- 공공 기반 모델로서 지역사회의 피해자 지원기관의 허브 역할에 중심을 둘 수 있고, 민간 협력 기반 모델로서 위탁 운영 법인의 피해자 지원기관을 역할과 기능을 확장하는 형태로서 공동대응팀 구축을 시도할 수 있음. 새로운 피해자 지원기관이 설립되고 공공 기반의 지원체계들이 구축되는 등 기존의 피해자 지원체계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공동대응팀도 시군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기획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지원하는 폭력 유형을 특화한 공동대응팀 인력 구성

- 현재 공동대응팀이 지원하는 폭력의 유형은 대부분 가정폭력에 집중되어 있지만, 법률 상담 사례 가운데 20대 상담사례 중에는 스토킹이나 디지털 성폭력 비중이 일정한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공동대응팀이 지원할 사례 가운데 다른 유형의 폭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없지 않음.
- 시군의 상황이나 특성도 상이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 지원에 더 집중하는 방향이 적합한 시군이 있을 수 있고, 좀 더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포괄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 적합한 시군도 있을 수 있음. 현재 공동대응팀의 지원 폭력 유형을 검토하고, 특정 폭력 유형에 특화된 형태로 시군마다 공동대응팀 인력 구성 등을 차별화할 수 있음.

3) 공동대응팀 인력규모 확대 및 안정화

- 공동대응팀의 기본 조직체계는 시군의 여성관련부서 팀장이 공동대응팀 팀장을 겸임하는 체계로 설계됨. 공동대응팀은 시군의 다른 부서와 다른 공간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공동대응팀의 총괄 책임자인 팀장의 경우도 공동대응팀 사무실 내에서 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동대응팀 소속 인력과 일상적인 접촉이나 대면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공동대응팀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포괄하는 폭력 유형이나 지원 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동대응팀의 인력 구조를 안정화하고, 공동대응팀 내부 인력의 업무 범위와 권한 배분 등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4) 초기 대응 및 지원 범위의 기준 정비

- 지난 3년간 공동대응팀의 운영 실적을 보면, 지원 범위는 매우 광범위했음. 공동대응팀의 지원 범위는 공동대응팀이 앞으로 어떠한 기능을 하는 피해자 지원기관(지원체계)로서 자리를 잡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부분임.
- 2023년 하반기에 여성가족부에서 ‘여성긴급전화 1366’에 통합솔루션지원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하면서 이후 여성긴급전화 1366의 기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음.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지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의 기능 및 역할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범위나 지원방식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통합)사례회의 체계화 및 전문성 강화

- 공동대응팀의 핵심 기능은 사례 판정과 사후 관리라고 할 수 있음. 경찰이 신고 상황에서 사건의 위험성, 재발가능성 등을 판단하지만 공동대응팀으로 전달된 사건의 경우 팀 내에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방향을 논의하게 됨.
- 사례회의는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타인의 삶에 일정한 형태로 개입하게 되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므로 사례회의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사례회의의 주체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

6) 지원사례 기록과 관리의 지속 및 체계화

- 업무 담당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의 구축은, 피해자 지원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피해자 지원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음. 피해자 관련 정보가 종합적으로 파악되지 않거나 충분히 공유되지 않을 때 지원의 방향,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활용하거나 공유하기 전에는 반드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함. 특히 폭력 피해 상황과 같은 정보 등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일 수 있고, 이러한 정보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때 또 다른 피해(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지원사례 기록 및 관리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7) 지역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과 협력 관계 강화

-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성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이 대두되면서 각각의 폭력 유형에 맞는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피해자 지원기관들이 구축되고 있음. 새롭게 구축되는 공공기반의 피해자 지원체계는 인력구조, 예산, 사무실 등 물적 환경 등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음.
- 지역의 상담소 등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오랜 시간 폭력 피해 상담 및 지원을 수행하면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있을 수 있음. 이러한 기존의 기관들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다양한 기관들과 안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유관기관의 유형별로 협력 체계 방식을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함. 공동대응팀의 협력 기관은 폭력피해지원뿐 아니라 정신복지관련기관, 아동·청소년 및 노인 관련 시설, 취업지원기관 등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관별 특성을 기반으로 협력 방식도 좀 더 다양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목 차

제 1 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 방법	5
3. 연구 추진 체계	6
제 2 장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구축과 기반 강화	7
1. 폭력 유형별로 구축된 피해자 지원체계	9
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9
나.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13
2.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체계의 구축	15
가. 해바라기센터	15
나. 여성긴급전화 1366: 5대 폭력 통합지원체계(통합솔루션지원단)	19
다.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등장과 재편	22
3. 소결	29
제 3 장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구축과 운영 현황	31
1.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구축과 기본 구조	33
가. 공동대응팀 구축 배경과 추진 과정	33
나. 공동대응팀의 인적 구성과 주요 담당 업무	35
다. 공동대응팀의 업무 수행 절차	37
2. 공동대응팀 운영 현황	40

가. 공동대응팀 개소 현황	40
나. 공동대응팀의 운영 예산	42
다. 공동대응팀 운영 실적	43
3. 소결	70

제 4 장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 현황과 과제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73

1. 조사 개요	75
가. 서면조사	75
나. 면접조사	77
2. 조사 결과 분석	79
가. 공동대응팀 구축과 피해자 지원체계의 확대	79
나. 공동대응팀의 주요 업무와 강점	82
다. 공동대응팀 운영의 실재와 쟁점	90
라. 공동대응팀 운영상의 어려움과 개선방향	95
3. 소결	101

제 5 장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확대 방안..... 103

1. 공동대응팀 운영 모델(안)과 쟁점	105
가. 공동대응팀 운영 모델(안)의 기본 구조와 특성	105
나. 3개의 모델(안) 비교 및 쟁점	109
2. 공동대응팀의 안정적인 구축과 확대 방안	112
가. 시군의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운영모델안 도입	112
나. 지원하는 폭력 유형을 특화한 공동대응팀 인력 구성	113
다. 공동대응팀 인력규모의 확대 및 안정화	116
라. 초기 대응 및 지원 범위의 기준 정비	117
마. (통합)사례회의의 체계화 및 전문성 강화	118
바. 지원사례 기록과 관리의 지속 및 체계화	119
사. 지역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과 협력 관계 강화	120

참고문헌 123

부록 125

1. 서면조사지 125

2. 경기도 인구통계(2022) 125

표 목 차

[표 2-1] 해바라기센터 유형	16
[표 2-2] 전국의 해바라기센터 운영 유형 및 현황	17
[표 2-3] 경기도 해바라기센터 현황	18
[표 2-4] 여성긴급전화 1366 설치 및 운영 현황	20
[표 3-1] 공동대응팀 소속 APO,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의 주요 업무	36
[표 3-2] 법률홈닥터 제도+공동대응팀 법률지원	39
[표 3-3]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 시군 개요	41
[표 3-4] 공동대응팀 운영개요	42
[표 3-5] 2023~2024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예산 지원 기준	42
[표 3-6] 공동대응팀 지원사례 정보 입력(일반사항)	43
[표 3-7] 폭력 유형별 분류 및 입력 정보	44
[표 3-8] 공동대응팀 지원사례별 지원 내용(공통)	44
[표 3-9] 경기도 인구통계	45
[표 3-10] 지원사례의 폭력 유형	46
[표 3-11] 지원사례의 성별	47
[표 3-12] 지원사례의 연령대	49
[표 3-13] 지원사례의 혼인 상황	50
[표 3-14] 사실혼 여부 판단 체크리스트	51
[표 3-15] 장애 여부	52
[표 3-16] 지원내용	53
[표 3-17] 지원내용 목록	55
[표 3-18] 가정폭력 피해 유형 (중복응답)	56
[표 3-19] 가정폭력 요인 (중복응답)	57
[표 3-20] 가정폭력 피해 상태 (중복응답)	58

[표 3-21] 경찰의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선정 및 해제 기준	59
[표 3-22] 가정폭력 재발위험성 등급별 신고 인원	60
[표 3-23]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중복응답)(2022)	61
[표 3-24]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중복응답)(2023)	62
[표 3-25] 성폭력 피해 유형 (중복응답)	63
[표 3-26] 성폭력 피해 상태 (중복응답)	63
[표 3-27] 성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중복응답)(2022)	64
[표 3-28] 성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중복응답)(2023)	64
[표 3-29]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유형 (중복응답)	65
[표 3-30]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상태 (중복응답)	65
[표 3-31]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중복응답)(2022)	66
[표 3-32]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중복응답)(2023)	66
[표 3-33] 협력기관 유형과 연계 건수	67
[표 3-34] 2022년 각 시군의 공동대응팀 추진 내용 요약	69
[표 4-1] 주요 조사 내용(서면조사)	75
[표 4-2] 서면조사 응답자 특성(개요)	76
[표 4-3] 서면조사 응답자 특성	76
[표 4-4] 주요 조사 내용(면접조사)	77
[표 4-5] 면접조사 참여자 현황	78
[표 5-1] 경기도 공동대응팀 운영 모델(안)	109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	6
[그림 2-1]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10
[그림 2-2]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14
[그림 3-3]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정	19
[그림 2-4] 5대 폭력 통합지원 사업체계	21
[그림 2-5] 여성폭력 피해 통합지원 절차	21
[그림 2-6]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조직체계	23
[그림 2-7]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지원체계	24
[그림 2-8]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협력체계	25
[그림 2-9] 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조직도	26
[그림 2-10]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조직체계	27
[그림 2-11] 이젠센터 조직도	28
[그림 3-1]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구축 과정	34
[그림 3-2]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지원과정	38
[그림 3-3] 지원사례의 폭력 유형(2022~2023)	46
[그림 3-4] 지원사례의 성별	47
[그림 3-5] 연도별 지원사례의 연령대(2022년과 2023년 상반기)	48
[그림 3-6] 지원사례의 연령대별 비교(2022년과 2023년 상반기)	48
[그림 3-7] 지원사례의 혼인 상황	49
[그림 3-8] 지원사례의 혼인 상황	50
[그림 3-9] 지원내용	54
[그림 3-10] 가정폭력 재발위험성 등급별 신고 인원	60

[그림 5-1] 공공 기반 모델 조직도	105
[그림 5-2] 민관 협력 기반 모델 조직도	106
[그림 5-3] 민간 기반 모델 조직도	107
[그림 5-4] 공공기반 모델(안): 지역의 피해자지원기관의 허브(hub)	113
[그림 5-5] 폭력 유형별 팀 구축(안)	115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연구 추진 체계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경기도에서는 2021년 8월 10일, 「경기도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본 조례에 의하면, ‘여성폭력·가정폭력 대응체계’는 “경기도와 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이 협업하여 피해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부터 전문기관 연계, 복지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통합 사례관리 등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제2조). 그리고 공동대응체계의 주요 기능은 “1. 피해자 조기발견 및 초기개입 시스템 구축, 2. 피해자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 및 복지서비스 지원, 3. 2차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4. 여성폭력·가정폭력 통합사례 관리, 5. 여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행하는 것이다(제5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1980년대 여성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민간단체의 상담소를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신상숙, 2008; 박선영 외, 2018; 유정민, 2020). 그러나 폭력 피해자가 상담소, 경찰서, 병원 등 각각의 기관마다 방문하여 사건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여러 기관을 거치면서 2차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통합적 지원의 필요성 아래 정부가 지원하는 여성 피해자 지원센터가 출범하게 되었다(박선영 외, 2018; 유정민, 20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제18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 상담, 치료, 법률상담 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이하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건의 해결을 위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들이 증가해왔으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이나 제도 등도 확대되어왔다. 현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는 가정폭력 피해 지원기관,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디지털 성범죄 지원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를 주요한 축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피해자 지원기관들은 주요하게 지원하는 폭력의 유형, 주요 지원 내용 및 방식, 기관의 주요 기능 등이 다르게 구축되면서 하나의 기관에서 모든 지원이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통합지원센터로서 해바라기센터가 구축되었고, 다양한 기관들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신준섭, 2015; 박선영 외, 2018; 유정민, 2020; 원혜옥, 2021; 김중근, 2022).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은 각 기관별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안정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 경찰, 의료기관, 지역의 상담소와 보호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업무가 이루어져왔지만, 각 기관이 분리된 공간에서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 시 협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은, 서로 다른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루어 사건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개입하고, 적절한 지원방향을 결정함으로써 피해자 지원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통합적 지원’을 시도한다(경기도, 2021).¹⁾

경기도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공동대응팀 구축을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하였고, 하반기에 선정 공고문을 통해 2개의 시군을 선정하였다. 2021년에 부천시, 하남시에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이 구축되었고, 2022년에는 김포시, 안산시에 추가로 구축되었다. 그리고 2023년 상반기에 파주시가 선정되었고, 하반기에 화성시, 과천시, 오산시가 추가로 선정되었다.

2023년 1월 민선 8기 경기도지사의 295개의 공약이 최종 확정되었는데(도지사 보도자료 2023.1.9.),²⁾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경기’ 분야에서 156번 과제로 “가정폭력, 성평등 등 젠더폭력 공동대응체계 확대 구축”이 포함되었다.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에 의하면,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체계는 신고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초기 상담 대응과 기관 연계 및 복지 지원을 통해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상담전문가, 통합사례관리사, 전담경찰관의 공동대응체계를 기반으로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³⁾

이 연구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선정되고, 2026년까지 31개 시군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시군을 중심으로 공동대응팀의 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공동대응팀이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해본다.

1) 2021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시군 선정 공고문(2021.9.15.)

2) 도지사 보도자료(2023.1.9.) 경기도 열린도지사실 (governor.gg.go.kr/governor-news/press/?pageid=25&uid=L3922&mode=document)

3) 경기도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2023), p375-376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가. 연구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구축되어 있는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공동대응팀의 확대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폭력 피해 통합적 지원체계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검토한다.

둘째, 공동대응팀의 구축 과정과 운영 현황을 살펴본다. 공동대응팀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과정, 공동대응팀의 조직체계 및 예산, 공동대응팀의 지원현황 등을 검토하고 분석한다.

셋째, 공동대응팀 소속 인력(경찰,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 공동대응팀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업무 담당자, 지역의 유관기관 관계자 등 공동대응팀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공동대응팀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나. 연구 방법

이 연구의 주요 방법은 문헌연구, 서면조사 및 면접조사, 전문가 자문회의이다.

먼저 문헌연구로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및 관련 정책 자료 등을 검토한다. 그리고 경기도의 공동대응팀 구축과정, 공동대응팀 운영 시군의 운영 실적 등 공동대응팀 구축과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한다.

다음으로 서면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공동대응팀 실질적인 운영 현황과 운영 상의 어려움 등을 파악한다. 서면조사는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소속 인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현재 운영 중인 시군의 공동대응팀 소속 경찰,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를 대상으로 주요 담당 업무, 협력체계 등 공동대응팀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다. 면접조사는 공동대응팀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시군의 담당자, 도의 사업 담당자, 공동대응팀과 일정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관기관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대응팀 구축과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다.

그리고 중간보고회,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여 연구의 전체적인 구성과 방향, 제언, 연구 결과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에 반영한다.

3. 연구 추진 체계

이 연구는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는 연구로, 연구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한 후 연구의 주요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한다. 연구계획보고회를 개최하고,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의 내용과 방향 등을 재정립한다.

다음으로 문헌연구를 진행한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추가 검토하고, 행정자료 등을 수집하고 검토한다. 그 다음은 관계자들 대상 서면조사 및 면접조사를 진행하여 연구를 위한 1차 자료를 수집한다.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다. 보고서 초안 및 조사 결과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중간보고서를 완성하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 중간보고회의 자문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보고서를 집필한다.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

1단계 : 연구 설계	연구 설계	⇨	▷ 연구 방향 및 내용 구성
	연구계획보고회		▷ 선행연구 검토 및 정리
2단계 : 문헌 연구 및 조사 연구 진행	문헌 연구	⇨	▷ 선행연구 및 행정자료 검토
	조사 설계 및 준비		▷ 선행연구의 주요 조사 내용 검토
	조사 진행		▷ 본 조사를 위한 질문지 개발·구성
3단계 : 조사 자료 수집 및 분석	조사 원료 및 분석	⇨	▷ 면접 대상 섭외 및 면접 진행
	중간보고서 집필		▷ 조사 자료 수집 및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 조사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집필
4단계 : 보고서 자문	중간보고회	⇨	▷ 전문가 자문 의견 수렴
	최종보고서 작성		▷ 주요 연구 결과 발표 및 전문가 자문
5단계 : 보고서 수정 및 완료	최종보고서 작성	⇨	▷ 자문의견 검토 및 반영
			▷ 최종 보고서 작성

II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구축과 기반 강화

1. 폭력 유형별로 구축된 피해자 지원체계
2.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체계의 구축
3. 소결

1. 폭력 유형별로 구축된 피해자 지원체계⁴⁾

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한국사회에서 가정폭력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이다. 1983년 ‘여성의전화’라는 단체가 설립되면서 여성폭력추방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피해자 지원 제도가 구축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이현숙, 정춘숙, 1999; 허민숙, 2012).

가정이라는 공간은 험난하고 고된 사회적 삶으로부터 벗어나, 지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하는 안식처이자 사랑이 충만한 공간으로 인식되어왔다. 근대 이후 사랑, 연애, 결혼으로 이어지는 낭만적 이데올로기가 등장하면서 연애와 가족 등은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삶의 의미를 찾게 하는 중심축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에 대한 인식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를 비가시화 시키며, 가정에 대한 이상적 이미지를 강화시키는데 기여했다. 이러한 가정에 대한 이미지 속에서 가정폭력이 사회적인 문제이자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갖기 쉽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의전화를 시작으로 여성단체들이 연이어 설립되고, 가정폭력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가시화되면서 여성운동계, 여성(학)계 등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며, 법정정 운동, 인식개선활동 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97년 11월 18일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과 ‘가정폭력피해자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 이 제정되었다.⁵⁾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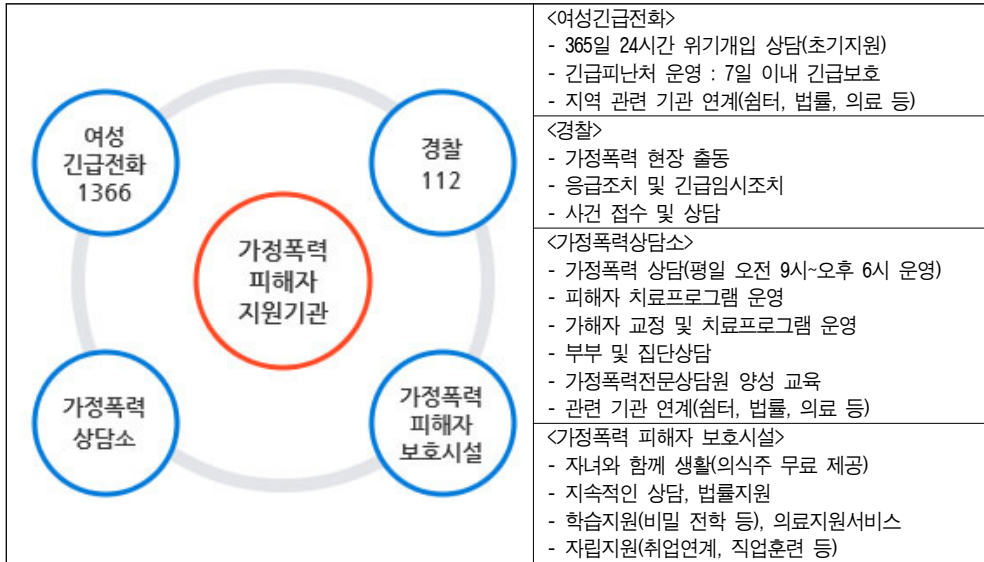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면서 가해자처벌뿐 아니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할 수 있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는 대표적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경찰(APO),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다.

4) 한국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는 폭력 유형에 따라 개별법이 제정되면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지원체제로 구축되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에 대한 연구로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중심으로 개별법 기반의 지원체계 구축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5) 법 시행은 1998년 7월1일.

6) 성폭력 사건, 성희롱 사건 등이 잇따라 사회적으로 가시화되면서 1993년 성폭력 특별법,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는 데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폭력으로 인식하고, 처벌을 필요로 하는 범죄라는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1]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sp/hrp/sp_hrp_f004.do)

먼저 ‘여성긴급전화 1366’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창구로서 초기 지원 및 지원 연계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6에 따라 설치·운영 중으로, 주요 업무는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관련 기관 연계, 긴급 구조라고 할 수 있다.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핫라인(전화)로서 위급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는 언제든지 전화를 통해 상담이나 긴급 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구조된 피해자를 일정기간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며, 긴급피난처가 필요한 피해자의 경우 최대 7일까지 긴급피난처(긴급보호시설)를 이용할 수 있다.

‘경찰’은 112에 신고된 사건을 접수하고 응급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한다. 112신고는 가정폭력 발생 시 대표적인 신고체계로, 가정폭력 신고를 받으면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는 점차 증가해왔으며, 관련조항이 개정되면서 위급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에 대해 경찰의 응급조치, 임시조치 등이 가능해졌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서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은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1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

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5.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하도록 하고 있다.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의 분리
 - 1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5.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 [전문개정 2011. 4. 12.]

또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기 어려운 경우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는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이다.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1. 7. 25.]

제29조(임시조치)

-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가정폭력 상담소’와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대표적인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다. 가정폭력 상담소와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국비 및 지방비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상담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 동반자녀지원, 자립지원 등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하면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되는데, 이 때 가정구성원은 전, 현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 포함),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동거하는 친족을 의미한다(제2조). 가정구성원의 범위가 부부뿐 아니라 자녀, 부모, 동거하는 친족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은 부부사이의 폭력뿐 아니라 가족 내의 구성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의 경우 ‘신고의무’ 규정도 존재한다. 「가정폭력처벌법」 제4조에서는 누구나 가정폭력 사건을 접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관련 기관이나 노인 관련 기관의 종사자, 아동이나 노인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종사자 등은 가정폭력의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이 아동이나 노인 대상 폭력, 기타 가족 구성원 사이의 폭력까지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범위도 확장된다고 할 수 있는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은 자녀의 학습 관련 지원 등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는 아동이나 노인 등의 지원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대응체계와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분절되어 있어서 가정폭력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데 일정한 제약이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는데(정연주 외, 2022),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해나가는 것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다.

나.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도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1980~90년대 여성운동의 한 형태로 시작하여 여성주의 상담을 표방하는 민간 상담소에서 시작되었다가 1994년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의 지원이 증가하고 국가 주도형 기관들이 설립되고 확장되는 형태로 변화되어왔다(박선영 외, 2018: 63).

성폭력 피해 지원체계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에 근거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법 제11조와 제13조에서 각 시설의 주요 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상담, 보호시설로 연계, 의료 지원, 법률지원,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성폭력 보호시설은 숙식 제공을 기반으로 성폭력 상담소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상담 및 심리 치료, 의료지원, 법률지원, 주거지원, 취업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담·심리 치료지원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피해 상황이나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다. 법률지원의 경우는 법률상담, 무료변론이나 고소대리 등 소송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무료법률지원 사업과 법무부의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의료지원의 경우 의료상담, 성폭력 피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한다. 성폭력 피해로 인해 의료기관에 치료 중으로 가족으로부터 간병을 받기 어려운 경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간병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폭력 피해 여성들이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피해를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주거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거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사업’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일부를 폭력 피해 여성과 그의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저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피해자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해 생계비, 교육훈련비 등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그림 2-2]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상담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기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 심신 회복을 위한 심리 치료 프로그램 • 피해자가족까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상담 • 무료변론이나 고소대리 등 소송지원 • 「무료법률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개 감염 질병검사 및 예방치료 •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의 임신중단 지원 • 진단서 발급비용 및 기타 법적증거 확보(응급키트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 지원 • 치료 및 돌봄이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간병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사업'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폭력 피해 여성과 그의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저가에 공급 • 2008년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임대주택 24호를 공급하면서 시범적으로 실시. • 2022년 12월 기준, 전국에 354호의 주거 지원시설이 운영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비,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 •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 보호시설 퇴소 시 1인당 500만원의 '자립지원금'을 제공 • 피해자의 자녀 및 형제자매 등의 돌봄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

주. 여성가족부(2023). 「2023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정리.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신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신원보호 및 비밀 누설 금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담조사제 등 피해자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호 및 배려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녹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더욱 주의를 요하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상담, 심리치료지원 등은 피해자의 가족까지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해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고, 피해 이전의 일상적 삶을 이어가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체계의 구축⁷⁾

가.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가 상담소, 경찰서, 병원 등 각각의 기관마다 방문하여 사건에 대해 여러 번 진출하고, 피해를 입증하거나 피해자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거쳐야하는 번거로움, 추가적인 피해(2, 3차 피해 등)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지원센터(원스톱지원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정부사업이 착수되기 시작했는데, 2004년 「성폭력방지법」 제18조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기관 설치 운영에 근거를 두고, 정부가 민간기관과 협약하여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가 처음으로 개소하였고, 이후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전국에 39개가 운영 중이다(여성가족부, 2023).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③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해바라기센터는 관련 전문가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성폭력 피해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피해자를 치료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One-Stop)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응급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원이나 경찰뿐 아니라 의료전문가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들의 심신의 안정과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7) 통합적 지원에 대한 정의나 논의는 다양할 수 있는데, 통합지원에 대한 고민은 여성폭력이 젠더기반폭력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 원스톱지원체계가 구축되어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유화정, 2022: 5). 즉 ‘통합지원’은 한 기관에서 모든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의미하기도 하고, 여러 기관을 통해 지원하지만 한 명의 피해자에게 이루어지는 지원이 통합적으로 접근되고 관리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기존의 논의에 동의하면서 ‘통합지원’은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체계적 지원을 핵심 요소로 가지고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중심으로 전제하되, 기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지원체계로 표현하고 구축해 온 피해자 지원체계를 지칭할 때도 통합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해바라기센터는 병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형태로 설립되어 있으며, 병원에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지원에 강점이 있다. 성폭력 증거채취를 위한 응급키트조치, 산부인과/정신건강 의학과/응급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의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상담지원, 수사·법률지원, 심리치료 지원도 이루어진다.

해바라기센터는 3개의 유형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위기 상황의 대응이 중심이 이루는 ‘위기지원형’, 19세미만 아동·청소년 및 지적장애인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지원에 초점을 두는 ‘아동·청소년형’, 위기상황 대처 후 상담 및 치료 등 기타 지원까지 제공하는 ‘통합형’으로 구분된다. 초기에는 성폭력 통합센터로서의 기능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을 포괄하여 지원하고 있다.

해바라기센터의 운영 시간은 유형에 따라 다소 상이한데, 위기지원형과 통합형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아동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표 2-1] 해바라기센터 유형

구분	지원대상	운영시간	지원내용
위기지원형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365일 24시간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아동형	19세미만 아동·청소년 및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월-금, 9시-18시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지원(출장수사지원서비스), 법률지원, 심리지원
통합형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365일 24시간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sp/hrp/sp_hrp_f011.do)

2023년 9월 현재, 전국에 해바라기센터가 40개 운영 중으로 아동·청소년형은 7개, 위기지원형은 16개, 통합형은 15개, 통합거점 1개, 중앙에 1개가 운영 중이다.

[표 2-2] 전국의 해바라기센터 운영 유형 및 현황

(단위: 개)

구분	전체	아동청소년	위기지원	중앙	통합	통합거점
전체	40	7	16	1	15	1
중앙	1			1		
서울	5	1	3		1	
부산	2		1		1	
대구	2	1	1			
인천	3	1	2			
광주	2	1	1			
대전	1				1	
울산	1				1	
경기	6	1	2		2	1
강원	3				3	
충북	2	1	1			
충남	1				1	
전북	3	1	1		1	
전남	2		1		1	
경북	3		2		1	
경남	2		1		1	
제주	1				1	

출처: 여성가족부. (2023). 2023년 해바라기센터 사업 안내. (p7~8)

경기도에는 6개의 해바라기센터가 설립되어 운영 중으로,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경기북동부해바라기센터, 경기해바라기센터,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로서 지역별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설치하였다. 가장 최근에 설치된 해바라기센터는 부천시의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로, 2021년에 설치되었으며, 순천향대 병원에서 위탁운영한다.

[표 2-3] 경기도 해바라기센터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운영주체	설립일	운영시간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통합)	수원시	아주대병원	2006	24시간
경기북동부해바라기센터(위기)	의정부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2007	24시간
경기해바라기센터(아동)	성남시	차병원	2008	주 간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위기)	안산시	단원병원	2013	24시간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통합)	고양시	명지병원	2014	24시간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통합)	부천시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2021	24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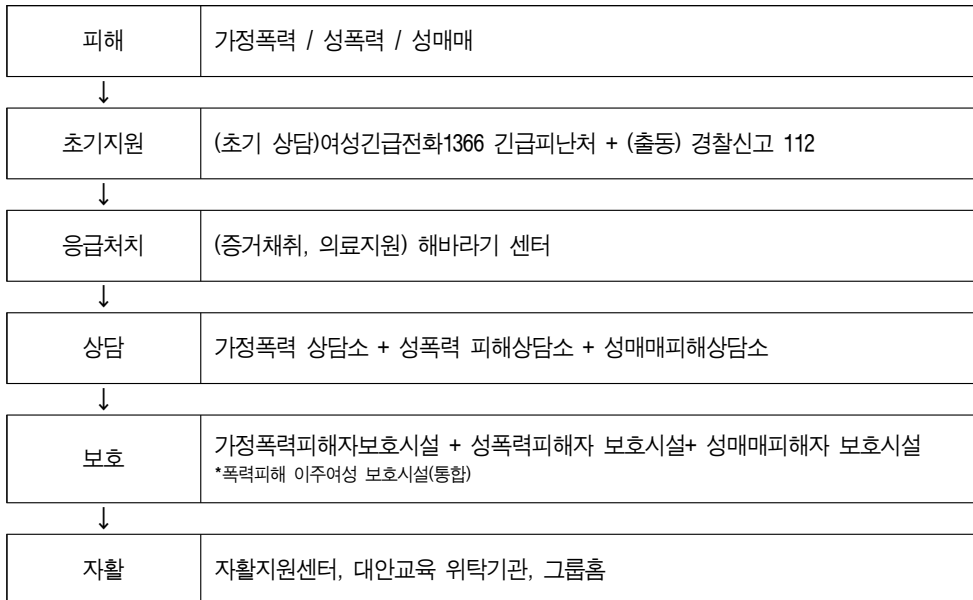
출처: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 (22년 11월 기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로서 해바라기센터가 설립되고 운영되어왔는데, 처음 개소한 2004년부터 약 20년이 되어가는 현재, 해바라기센터 운영의 어려움과 한계점도 지적되고 있다. 해바라기센터를 의료기관에서 위탁운영하면서 성폭력이 갖는 사회정치적 이슈나 성폭력이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맥락보다는 성폭력으로 인한 증상 치료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점에서 문제의식도 제기되었고(박선영 외, 2018), 실질적인 운영의 측면에서는 365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부족으로 피해자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거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운영상의 어려움도 제기된다(이미정 외, 2022).

나. 여성긴급전화 1366: 5대 폭력 통합지원체계(통합솔루션지원단)

여성긴급전화 1366은 초기에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면서 현재에도 「가정폭력처벌법」을 근거로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여성 폭력의 유형이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여성폭력을 포괄하여 지원하고 있다.⁸⁾ 이에 따라 여성긴급전화 1366은 초기 대응의 통합지원체계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모든 형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신고 접수 및 관련기관 연계와 긴급구조를 수행하고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초기 지원이 이루어지고, 증거채취 및 의료지원을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로 연계하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지역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상담소로 연계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기본 축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긴급피난처를 운영하면서 임시적으로 거주할 공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3~4일에서 최대 7일까지 거주할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거주할 공간이 필요한 경우는 중장기 보호시설로 연계하고, 취업 훈련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자활 지원기관 등으로 연계한다.

[그림 3-3]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정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omen1366.kr/?menu=231)

8)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여성폭력 관련 전문가들은 여성긴급전화 1366의 설치 근거를 「여성폭력방지법」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유화정 외, 2022: 73).

여성긴급전화 1366은 위기 상담, 긴급보호 등을 위한 초기지원체계의 중심점으로서 전국에 18개가 운영 중이다. 전국 16개의 시도에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인구 수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2개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표 2-4] 여성긴급전화 1366 설치 및 운영 현황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8	2	1	1	1	1	1	1	2	1	1	1	1	1	1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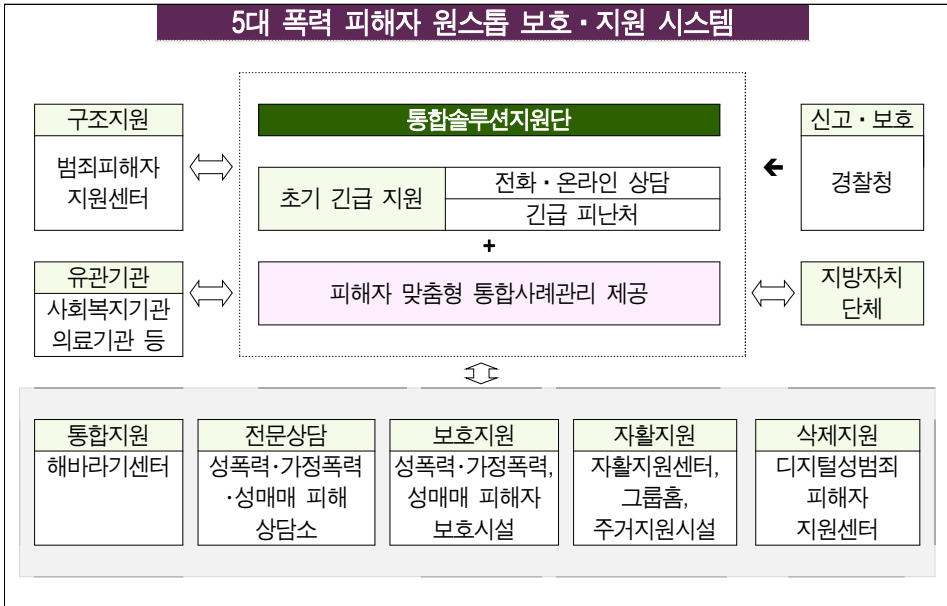
출처. 여성가족부. (2023). 2023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357

지난 4월 26일, 정부(여성가족부)는 ‘5대 폭력’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로서 ‘통합솔루션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는데, 사업 수행기관으로 1366센터를 지정했다. 5대 폭력은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로, 통합솔루션지원단을 통해 5대 폭력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4.26.).

정부는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국정과제(64-6)로 선정해왔고, 국정과제 실현의 일환으로 통합솔루션지원단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여성폭력 대응 정책이 폭력 유형별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통합적 지원의 필요성이 다시 재확인되어왔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등 여성 폭력의 유형이 새롭게 진화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중심의 피해자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여성에게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지원을 여성폭력 피해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왔다.

5대 폭력 피해자 원스톱 보호·지원체계(통합솔루션지원단)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여성폭력 피해 통합사례관리 역량을 갖춘 전담인력 2명을 배치하여, 피해자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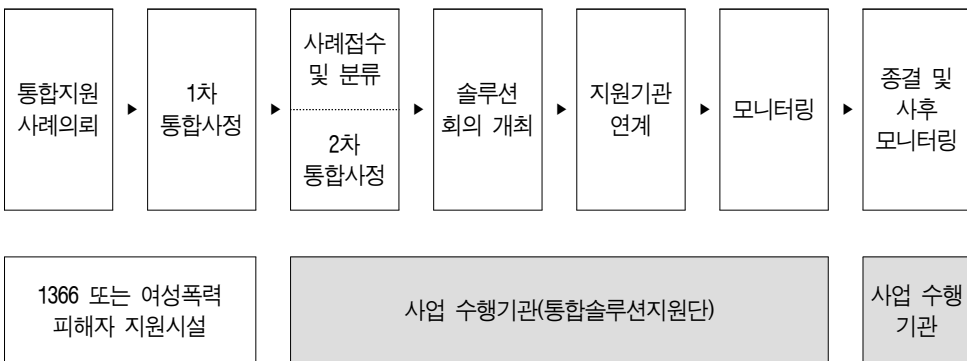
[그림 2-4] 5대 폭력 통합지원 사업체계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4.26.(최종검색일: 2023.9.13.)

통합솔루션지원단은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를 가진 사례를 발굴하여, 사례회의를 통해 사건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경찰 연계를 통해 접수된 사건 가운데 추가 지원 및 지속 지원이 필요한 사례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림 2-5] 여성폭력 피해 통합지원 절차



출처.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이젠센터 리플렛

2023년 10월 기준, 통합솔루션지원단은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 센터와 ‘경기’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 초기 대응, 전문기관으로의 연계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해왔다면, 통합솔루션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여성긴급전화 1366의 기능이 확대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긴급 상담과 긴급보호 등을 주요한 기능으로 하고 있었다면, 통합솔루션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여성긴급전화 1366의 기능이나 지원 범위의 변화가 예상된다.

다.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등장과 재편

1) 서울시의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가정폭력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로서 서울시에서는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8년 4월 서울경찰청과 MOU를 체결하면서 가정폭력 신고 사례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10월에 센터를 개소하여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서울시에서는 2017년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추진해왔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동주민센터에 배치된 공무원(복지플래너)이 가정을 방문하여 피해 가정에 서비스를 안내하고, 위기 가정을 발굴하여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피해가구에 대한 ‘사업적 지원’ 뿐 아니라 ‘복지적 개입’을 결합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김주미 외, 2019: 6).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폭력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경이 협력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왔으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경험을 기반으로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설립했다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고된 사건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통합사례관리사, 경찰(APO:Anti-Abuse Police Officer),⁹⁾ 상담원이 상주하면서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을 즉각적으로 개입하고, 신고사례의 위험성과 재발성 등을 판단하여 사후관리하는 등 가정폭력

9) APO는 확대예방경찰관으로 불리는데, 2014년 3월에 ‘가정폭력전담경찰관’ 138명을 선발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 시초라고 할 수 있으며, 2016년 1월에는 ‘아동학대전담경찰관’을 선발, 2016년 4월에 기존의 ‘가정폭력전담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경찰관’의 역할에 노인과 장애인 학대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가로 211명의 ‘학대예방경찰관’을 선발하면서 확대예방경찰관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상민 외, 2019: 84).

사건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지원하고자 설립했다고 할 수 있다.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2018년 10월 10개구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하였고, 2019년에는 5개의 구에 추가 설치하였고, 2020년 7월에는 10개구에 추가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서울시, 2020).¹⁰⁾ 그리고 2021년 말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30개 경찰서)에서 모두 운영 중이다(경찰청, 2022: 102-103).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상담원, 통합사례관리사, 경찰(APO)이 한 팀을 이루어 한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가정폭력 피해를 지원하고 위기가정 발굴 및 사후 관리 등을 수행하는 구조이다.

[그림 2-6]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조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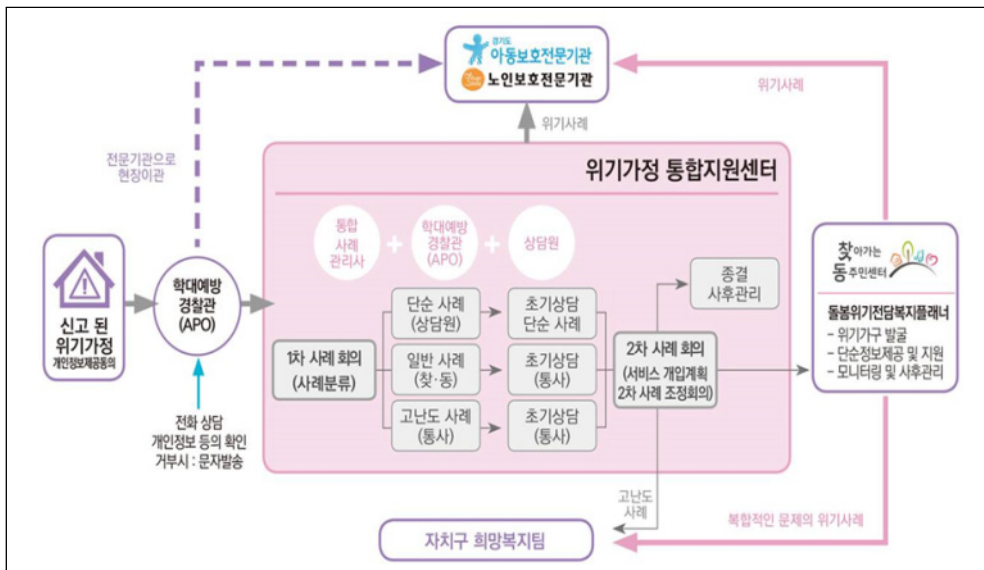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2020.7.17.). 서울시-경찰청, 25개 전 자치구에 가정폭력·학대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보도자료. (p4)

10) 서울시. (2020.7.17.). 서울시-경찰(APO)청, 25개 전 자치구에 가정폭력·학대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보도자료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경찰(APO)과 지자체가 협업으로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가정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 가정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복합적 문제를 가진 가정을 발굴하여 맞춤형 관리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 신고된 가정은 확대예방경찰관(APO)이 1차적인 접촉을 하고, 이후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과 사례회의를 거쳐 사례를 분류하게 된다. 상담원이나 통합사례관리사가 초기 상담을 진행하고, 2차 통합사례회의를 거쳐 적절한 복지지원으로 연계하게 된다.

[그림 2-7]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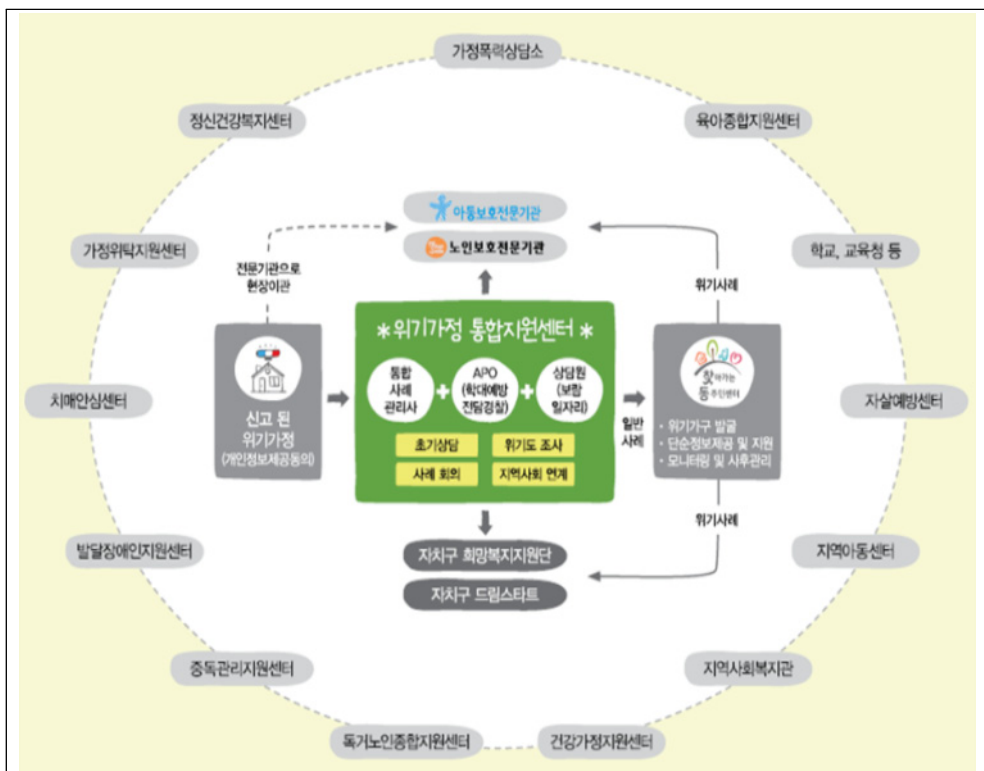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2020.7.17.). 서울시-경찰청, 25개 전 자치구에 가정폭력·학대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보도자료. (p7)

가정폭력은 신고의무자 규정을 포함하고 있듯이 가정폭력을 목격한 타인이나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는데,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기도 하지만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변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학대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정폭력의 경우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과 광범위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조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8]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협력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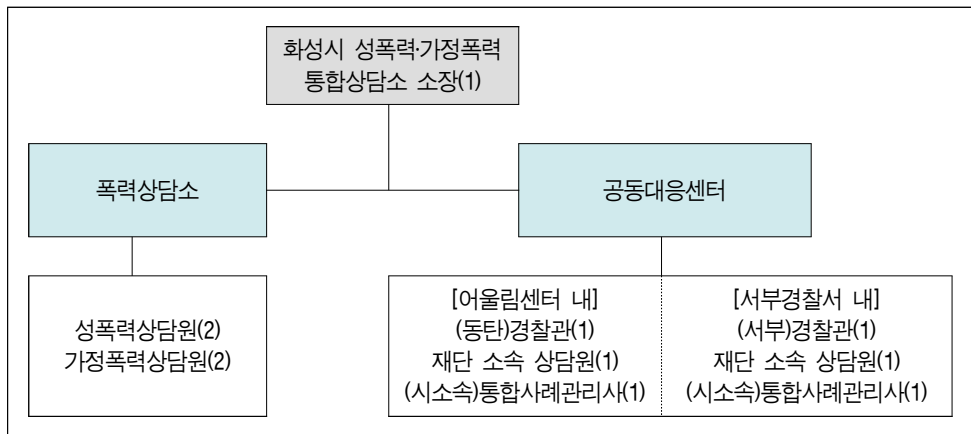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2020.7.17.). 서울시-경찰청, 25개 전 자치구에 가정폭력·학대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보도자료. (p7)

2) 화성시의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화성시에서는 서울시의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벤치마킹하여 공공형 통합상담소를 설립한 바 있다(정혜원, 2021; 김중곤, 2022).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가 가정폭력 통합지원체계라면 화성시는 가정폭력뿐 아니라 성폭력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 경찰이 팀을 이루어 폭력 피해 사건을 논의하고 지원한다는 점은 유사하다. 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는 2019년 10월부터 구축되어 운영 중인데, 통합상담소 아래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내의 폭력 상담소와 공동대응센터가 소속되어 있는 구조이다. 상담원의 경우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위탁을 주어 상담원은 재단 소속 직원이며, 통합사례관리사는 공동대응팀(화성시) 소속이다. 공동대응센터의 경우 동탄지역과 서부지역에 각각 3명이 인력이 배치되어 팀을 이루고 있다.

[그림 2-9] 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조직도



주. 시 ⇨ 화성동탄경찰서: 동탄 호수공원 어울림센터(통합상담소) 내 경찰관 파견 근무

시 ⇨ 화성서부경찰서: 서부경찰서 내 상담원, 통합사례관리사 파견 근무

출처. 화성시 공동대응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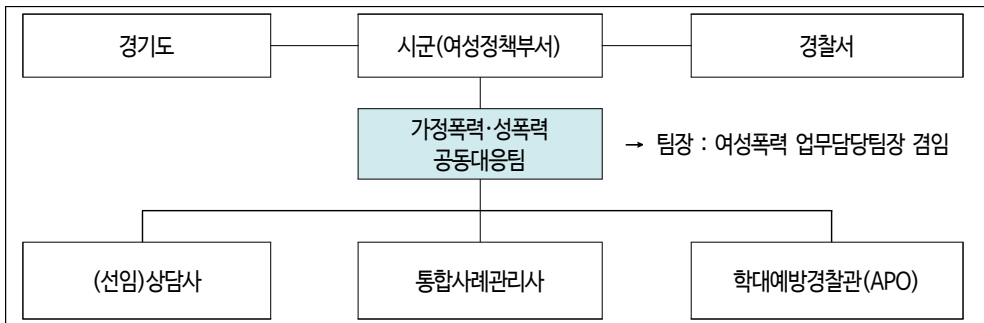
3) 경기도의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¹¹⁾

경기도의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은 공공기반의 상담소인 ‘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와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참조하여 설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적 구성, 주요 기능, 운영체계 등은 화성시의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와 서울시의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은 화성시의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보다 공공성을 강화하여 경기도의 공공자원을 활용하여 공유함으로써 피해자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이다. 또한 서울시의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복지지원체계에서 출발하였다면, 경기도의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은 여성정책과 내의 여성폭력예방팀을 기반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로서의 출발하였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은 경기도, 시군, 경찰(APO)의 협력을 기반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인적 구성은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 APO이며, 시군의 여성폭력 업무 담당팀장이 공동대응팀의 팀장을 겸임하는 구조이다. 팀장이 부재한 경우에는 상담사가 팀장 역할을 대리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상담사가 통합사례관리사보다 직급이 좀 더 높은 데서 기인한다. 상담사와 통합사례관리사 채용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선발하게 된다. 이때 상담사는 ‘라’ 급이며, 통합사례관리사는 ‘마’ 급으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사에게 ‘선임상담사’의 지위를 부여하기도 한다. APO는 해당 시군의 경찰서에서 배치하게 되며, 시군의 경찰서 상황에 따라 공동대응팀 APO의 인력 규모는 상이할 수 있다.

[그림 2-10]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조직체계



출처: 경기도.(2023).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지침. (2차개정판). p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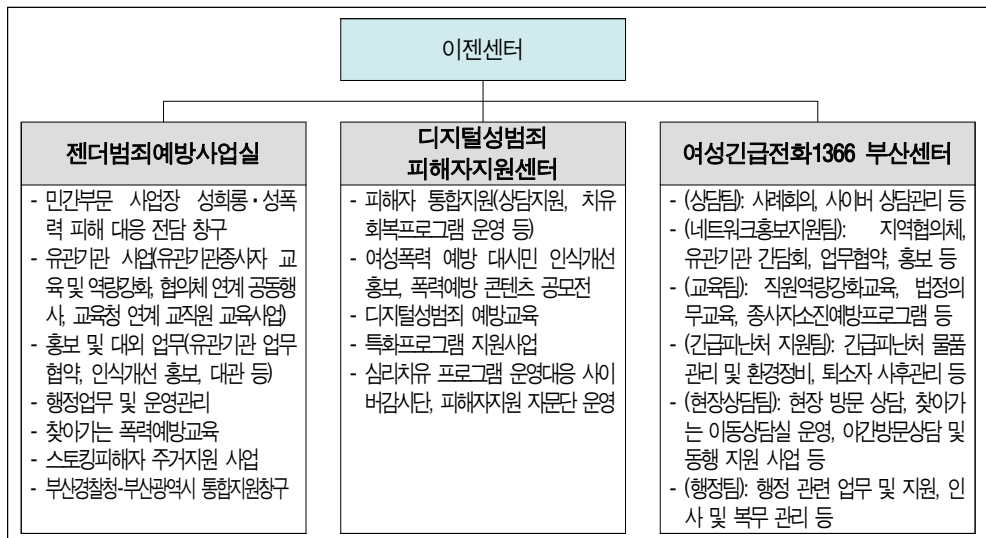
11) 공동대응팀의 구축 배경, 목적, 운영 현황 등에 대해서는 이후의 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4) 부산시의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젠센터)

부산의 경우, 지난 2022년 9월에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합센터로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2021년 2월부터 부산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2021년 8월 센터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21년 12월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운영 사무 위탁 계약, 건물 내부 리모델링, 신규 인력 채용 과정을 거쳐서 9월에 개소하였다.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는 1개의 실과 2개의 센터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젠더범죄예방사업실’에서는 민간부문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과 교육 등을 담당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기관으로서 삭제지원, 상담지원, 수사재판 지원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 및 긴급피난처를 제공해왔는데,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에 통합되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여성가족부의 통합솔루션 지원단의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기존의 긴급위기 개입 뿐 아니라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지원방향을 결정하는 기능까지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림 2-11] 이젠센터 조직도



출처. 이젠 센터(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egen.or.kr/introduce/organ)

3. 소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유형에 따른 개별법이 제정되면서 구축되어왔다. 초기에는 폭력 피해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운영되었고, 점차 자활 및 자립지원 기관이 구축되는 등 피해자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왔다. 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을 기본으로 심층적인 상담이나 치료 지원, 긴급생계비 및 취업지원, 주거 지원 등으로 확대되어왔다.

각각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피해의 회복과 일상적 삶으로 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왔지만, 한 기관에서 모든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거치면서 피해 상황을 여러 번 이야기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다른 기관으로 연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되거나 추가적인 피해(2차 피해, 3차 피해 등)가 발생하고, 긴급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등이 문제로 대두되면서 통합지원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04년 「성폭력방지법」 제18조를 근거로 통합지원체계로서 해바라기센터가 설립되었고, 현재 전국에 39개가 운영 중이다. 가정폭력 지원 및 초기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출발한 여성 긴급전화 1366도 포괄하는 폭력 범위를 확대하면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다. 모든 유형의 폭력을 포괄하여 위기 상담 및 긴급지원을 제공하면서 긴급지원체계로서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이 가시화되고, 여러 유형의 폭력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가 새롭게 변화되거나 재편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기관을 설립하기도 하고, 기존의 피해자 지원체계를 통합하여 하나의 기관으로 구축하기도 한다. 시군 기반의 공공형 상담소로서 화성시 통합상담소가 설립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가정폭력 통합지원체계로서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가 25개의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다. 경기도에서도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경찰 신고 사건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대응체계로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이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부산시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위기상담 및 긴급지원(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통합하거나 새롭게 구축하여 다양한 형태의 여성 폭력을 지원하는 하나의 기관(이젠센터)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능을 강화하면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가 새롭게 구축되거나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Ⅲ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구축과 운영 현황

1.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구축과 기본 구조
2. 공동대응팀 운영 현황
3. 소결

1.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구축과 기본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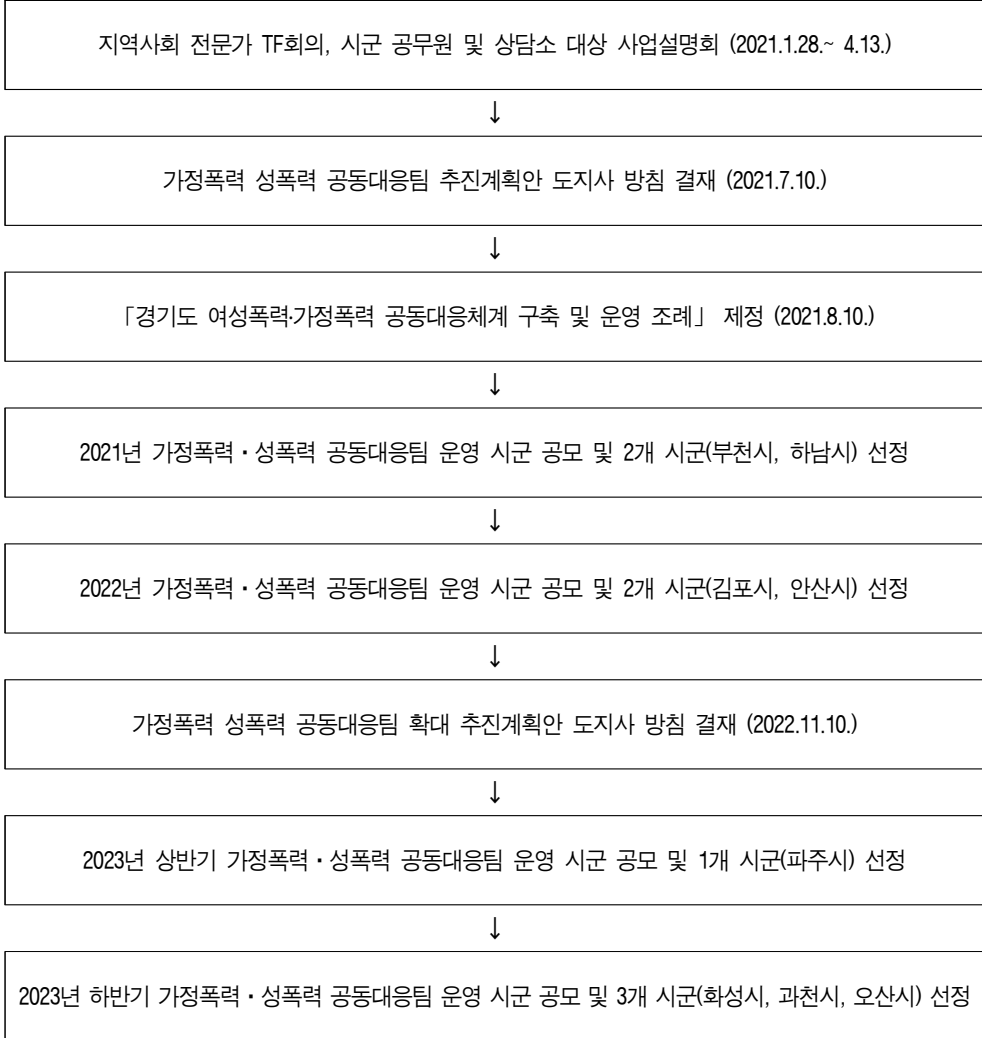
가. 공동대응팀 구축 배경과 추진 과정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다양한 형태로 변이되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에서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폭력 발생 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사건의 재발위험성을 파악하여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성폭력관련법에서는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2021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도가 새롭게 운영되어왔다. 자치경찰제도의 새로운 도입은, 도민의 치안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행정이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과 예방에도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게 되었다. 서울시의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화성시의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하는 센터로서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주요한 협업사례로 간주된다(정혜원, 2021). 경기도의 공동대응팀은 민·관·경이 협력하여 신고된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과 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공동대응팀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은 2021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 지역 사회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시군 공무원, 지역사회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2021년 8월에는 「경기도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도의 공모사업의 형태로 공동대응팀이 출범하게 되었다. 2021년인 첫 해에는 ‘부천시’와 ‘하남시’가 선정되었고, 그 다음 해인 2022년에는 ‘김포시’와 ‘안산시’가 선정되었다. 2023년 상반기에는 ‘과천시’가 선정되었고, 하반기에는 ‘화성시’, ‘과천시’, ‘오산시’가 선정되어 현재 8개의 시군에서 공동대응팀을 구축 및 운영 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1]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구축 과정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2023.10.11. 제공)

나. 공동대응팀의 인적 구성과 주요 담당 업무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은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 학대예방경찰관(APO)으로 구성된다. 학대예방경찰관은 경찰서 내 여성청소년과에 소속된 경찰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사건 등으로 주로 담당해왔던 경찰이라고 할 수 있다. 학대예방경찰관제도는 초기에는 가정폭력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했으나 점차 가정폭력 사건뿐 아니라 학대 전반에 대한 예방 및 사후지원까지 이루어지면서 업무 범위가 확장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이상민 외, 2019: 강동욱, 2022).

‘통합사례관리사’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등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대상자에 대한 욕구파악,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등을 위해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에서 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에 따라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에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동대응팀의 통합사례관리사는 폭력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상황, 가족 상황 등을 파악하여 지원 가능한 복지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상담사’는 폭력 피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상담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성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 상담원의 경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자격 조건을 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거나 ‘공무원으로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이다.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 상담원의 경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서 자격조건을 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시설의 상담원을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방지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다. 이러한 폭력 피해 지원기관의 상담원의 자격 조건을 고려하여 공동대응팀의 상담사를 채용하게 된다.

APO,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PO는 112 신고 사건을 1차적으로 정리하고, 동의한 사건에 대해서는 정리한 내용을 상담사에게 전달한다.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상담사나 통합사례관리사와 가정을 방문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APO가 직접 관리한다.

상담사의 경우는 동의한 사건에 대한 초기 상담을 진행한다. APO가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상담을 진행하여 상담기록지를 작성하고 심층적인 상담이나 기타 다른 복지서비스 등의 연계가 필요한지를 파악하여 이후 절차를 진행한다. 관련 기관에 연계하거나 공동대응팀의 통합사례관리사와 논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통합사례관리사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발굴하거나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공동대응팀에 통합사례관리사가 결합되어 있는 이유는, 폭력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피해자의 삶 전반에서 해결해야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통합사례관리사는 피해 상황뿐 아니라 피해자의 삶 전반의 상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을 발굴하고 복지지원 등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APO,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 모두 각각의 주요한 역할과 임무가 있지만, 사례판정 및 지원방향에 대한 논의 등은 수시로 진행하게 되며, 가정방문 동행 등 서로 협력해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도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은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표 3-1] 공동대응팀 소속 APO,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의 주요 업무

경찰(APO)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2신고 사건 접수 및 처리 - 다음날 APO 시스템에 사건을 입력 - 입력된 사건을 중심으로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와 사례(분류) 회의 - 재발우려가정 관리: 동의한 사례는 상담사에게 전달, 비동의 사례는 직접 관리 - 사례(분류) 회의, 필요 시 추가 회의 -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방문(상담사 또는 통합사례관리사와 동행) - 신고된 사건의 동의 절차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한 사례에 대한 상담 및 상담 기록지 작성 -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 연계 의뢰서 작성 및 공문발송 - 초기 상담 후 통합사례관리사와 지원 방향에 대한 논의 - 사례(분류) 회의, 필요 시 추가 회의 - 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연락이 되지 않을 시 APO와 가정방문 - 대상자 상담 후 경제적 지원 또는 피해자지원 필요시 통합사례관리사와 상담사가 추가 방문 - 기타 행정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지원 및 각종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 재발우려가정 관리 - 피해자 가정(현장)방문 및 동행지원 - 일반(단순) 사례의 경우 통합사례관리사가 초기 상담 진행 - 사례(분류) 회의, 필요 시 추가 회의 - 민간상담소 등 지원 가능한 연계 기관 발굴 - 기타 행정 업무

주. 경기도(2023).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지침」과 본 연구의 서면조사의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함.

다. 공동대응팀의 업무 수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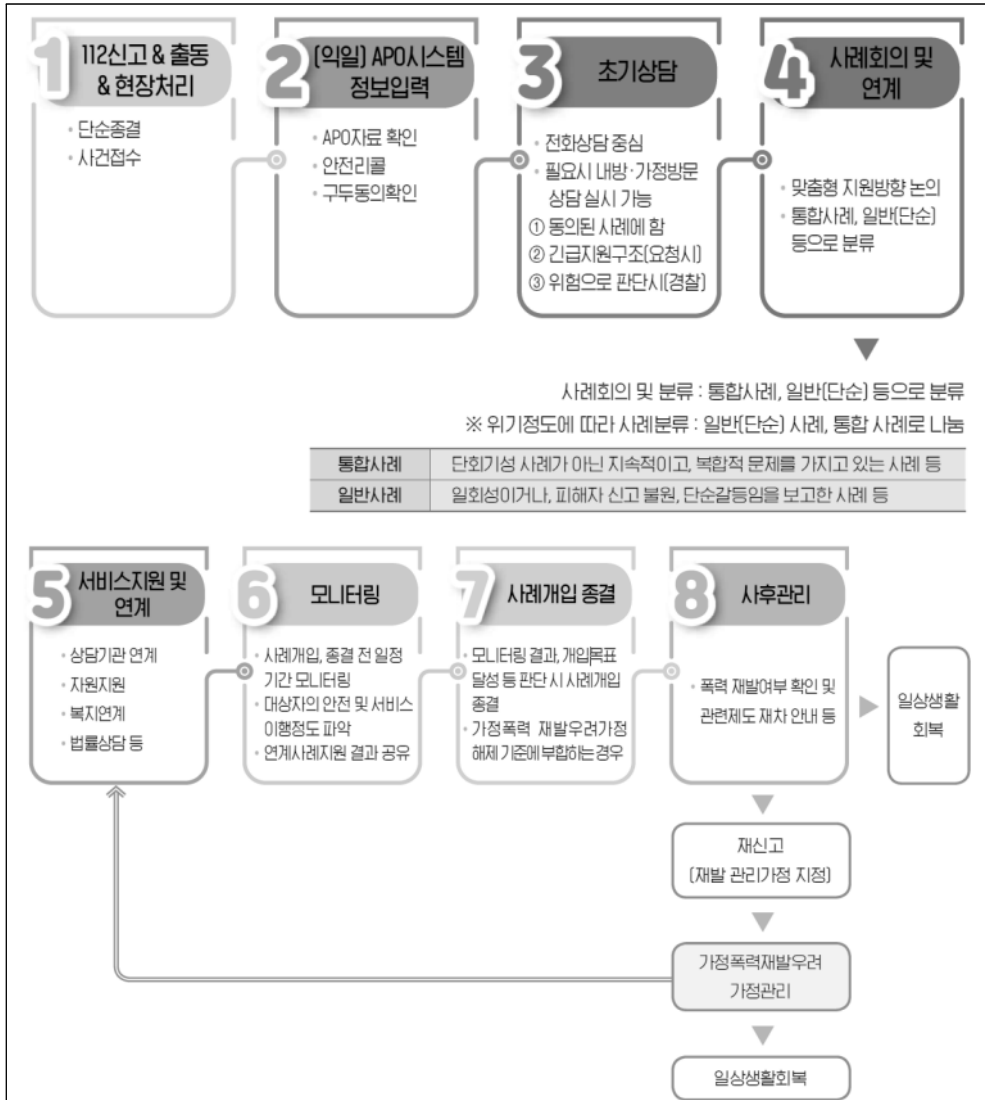
공동대응팀은 경찰에 신고된 사건에 1차적으로 개입하여 적절한 초기 대응을 수행하고, 재발위험을 가진 사례는 사후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 112에 사건이 신고되면,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데 현장 및 전후 상황을 판단하여 현장에서 종결하거나 신고접수를 하게 된다. 신고접수된 사건은 다음날 APO 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입력하고,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 원하는 후속조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안전 리콜). APO 현장 조치에 대한 불만이나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며, 사건 처리절차 및 가정보호사건 임시조치 등 관련 제도에 대해 안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담 등 기타 추가 지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동의한 사례에 한해 공동대응팀의 ‘상담사’ 혹은 ‘통합사례관리사’에게 연결하여 상담을 진행한 후, 공동대응팀 내에서 사례회의를 통해 이후의 지원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동의한 사례의 경우 APO의 초기 대응 일지(메모)를 기반으로 상담사가 초기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상담기록지를 작성한다. 상담사가 상담을 진행하고자 연락을 취할 때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가정방문을 진행하기도 한다. 가정방문은 APO와 상담사나 통합사례관리사가 동행한다. 다만, 동의하지 않은 사례이지만 재발 가능성이 있는 위기가정으로 판단될 경우 APO,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가 가정방문을 시도할 수 있다.

신고 상황, 추가적인 전화상담 시도, 전화상담 결과 등을 기반으로 APO,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사, 팀장 등이 추가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이후 지원방향을 결정한다. 사례회의 시 중요한 것은 사례를 판정하는 것이다. 위기 정도에 따라 ‘일반(단순)사례’, ‘통합사례’로 분류하는데, 일반(단순)사례는 피해가 일회성이거나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거나 단순 갈등으로 보고한 사례이다. 통합사례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례를 의미한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사건이 신고되면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 상황, 재발위험성 등을 판단하게 되는데, 경찰의 1차적 판단만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사례의 판정 및 지원방향을 결정하게 되는(통합)사례회의는 신고된 사건에 좀 더 깊이 있는 이해와 상황 판단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서로 다른 위치의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림 3-2]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지원과정



출처: 경기도, (2023).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지침. (2차개정판). p28.

또한 공동대응팀에서는 법률지원도 제공한다. 법무부의 ‘법률홈닥터제도’를 연계하여 변호사가 1주 혹은 2주에 한 번 공동대응팀에 방문하여 2~3시간 동안 5~6건의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법률홈닥터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

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가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주요한 사업 내용이다. 2023년 8월 기준, 전국에 65명의 변호사가 법률홈닥터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경기도는 12개의 시군(고양 덕양구청, 광명시청, 광주시청, 남양주시청, 구리시청, 동두천시청, 성남시청, 안산시청, 안성시청, 오산시청, 이천시청, 수원시협의회)에서 법률홈닥터 제도를 운영 중이다.

법률홈닥터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농어촌 주민, 저소득 주민, 범죄피해자 등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여건 등으로 법률조력을 받기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범죄피해자’의 경우도 갑자기 경제활동을 중단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관계로부터 분리되어야하는 등 경제상황이 갑자기 변화할 수 있고, 범죄 피해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법률지원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표 3-2] 법률홈닥터 제도+공동대응팀 법률지원

구분	법률홈닥터 제도	공동대응팀 법률지원(법률상담)	
운영기관/운영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 덕양구청, 광명시청, 광주시청, 남양주시청, 구리시청, 동두천시청, 성남시청, 안산시청, 안성시청, 오산시청, 이천시청, 수원시협의회 - 전국 65곳 중, 경기에서 12곳 운영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남, 부천, 김포, 안산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농어촌 주민, 저소득 주민 등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민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상담 희망자 	
상담절차	전화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분 전화상담으로 원하는 시간 예약 후 간단한 공금증 해결, - 절차: 상담신청 서비스 안내⇒상담신청서 작성⇒신청완료(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후부터 예약가능)⇒예약확정(신청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예약확정)⇒상담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상담 과정에서 법률상담에 대한 안내 - 법률상담 희망자에게 일정, 담당변호사 등 안내 - 법률상담 이외에 소송대리, 고소 대리, 민원성 상담 등은 지원하지 않음.
	방문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대면상담으로 원하는 일시 예약 후 내방/출장상담 - 절차: 상담신청 서비스안내⇒상담신청서 작성⇒신청완료⇒예약확정⇒상담완료 * 방문상담은 법률홈닥터 사무실 내방 또는, 복지기관 등 방문하는 출장상담으로 나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대응팀 사무실에 방문상담 혹은 전화상담으로 진행 - 1인당 30분 정도

주1.법률홈닥터제도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lawhomedoctor.moj.go.kr)와 2023년 법률홈닥터 리플릿을 참고함.

주2.공동대응팀의 법률상담은 2022년 공동대응팀 운영시군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함.

2. 공동대응팀 운영 현황

가. 공동대응팀 개소 현황

2023년 8월 현재, 공동대응팀을 운영 중인 시군은 5개이다. 공동대응팀을 가장 먼저 구축한 지역은 ‘부천시’로 2022년 1월 4일 개소하였다. 담당부서는 부천시 여성정책과이며, 공동대응팀은 부천시청 별관에 위치해있다. 인력 규모는 APO 3명, 상담사 3명, 통합사례관리사 2명으로 총 8명이다.

그 다음으로 개소한 지역은 ‘하남시’로, 2022년 2월 4일에 개소하였고, 담당부서는 여성보육과이다. 하남시의 경우 하남시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력 규모는 APO,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가 각각 1명으로 총 3명이다.

세 번째로 개소한 지역은 ‘김포시’로 2022년 8월 12일에 개소하였고, 담당부서는 여성가족과이며, 김포시청 별관에 위치하고 있다. 인력 규모는 하남시와 같이 APO,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가 각각 1명으로 총 3명이다.

그리고 2022년 12월에 ‘안산시’에서 개소하였고, 담당부서는 여성가족과이며, 사무실은 안산 시청 내에 있다. 인력 규모는 APO,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가 각각 2명으로 총 6명이다.

2023년 상반기에는 ‘과주시’가 선정되었고, 실질적인 운영 개시는 9월에 이루어졌다.¹²⁾ 공동대응팀의 담당부서는 여성가족과이며, 현재는 과주 시청 내 별관에 위치하고 있으나 12월에 과주시 외청으로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인력 규모는 APO 1명, 상담사 1명, 통합사례관리사 1명이다.

2023년 하반기에는 ‘화성시’, ‘과천시’, ‘오산시’가 새롭게 선정되었는데, 화성시의 경우 동탄과 서부에 각각 APO 1명, 상담사 1명, 통합사례관리사 1명으로 총 6명의 규모이다. 동탄 공동대응팀은 동탄 7동 어울림센터에 위치하고 있고, 서부 공동대응팀은 남양읍 모두누림센터에 위치하고 있다.

과천시는 담당부서는 가족아동과이며 과천지식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인력규모는 APO 1명, 상담사 2명으로 구성되었다. 오산시는 담당부서는 가족보육과이며 오산AI코팅에듀랩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력규모는 과천시처럼 APO 1명, 상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2) 뉴시스(2023.9.4), “과주시, 과주경찰서와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 (newsis.com/view/?id=NISX20230904_0002437293&clID=10817&pID=14000)(최종검색일: 2023.9.13.)

[표 3-3]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 시군 개요

구분	담당부서	선정 년도	모델형	장소	면적	운영인력 ('23년)	
부천	여성정책과	2022	공공형	부천시 별관 행정타운	66㎡ (20평)	8명	-경찰관 3명 -상담사 3명 -통합사례관리사 2명
하남	여성보육과	2022	공공형	청사 본관(2층) →2024년 1월 여성회관	31㎡ (10평)	3명	-경찰관 1명 -상담사 1명 -통합사례관리사 1명
김포	여성가족과	2022	공공형	김포시 별관 (사우로 39)	60㎡ (18평)	3명	-경찰관 1명 -상담사 1명, -통합사례관리사 1명
안산	여성가족과	2022	공공형	안산시청사 내 2별관	66㎡ (20평)	6명	-경찰관 2명 -상담사 2명 -통합사례관리사 2명
파주	여성가족과	2023	공공형	파주시청내 별관 →12월 파주시 외청 이전	31㎡ (20평)	3명	-경찰관 1명 -상담사 1명 -통합사례관리사 1명
화성	여성가족과	2023	공공형	동탄 공동대응팀 (동탄 7동 어울림센터)	31㎡ (15평)	3명	-경찰관 1명 -상담사 1명 -통합사례관리사 1명
				서부 공동대응팀 (남양읍 모두누리센터)	31㎡ (10평)	3명	-경찰관 1명 -상담사 1명 -통합사례관리사 1명
과천	가족아동과	2023	공공형	과천시식타운 내	31㎡ (20평)	3명	-경찰관 1명 -상담사 2명
오산	가족보육과	2023	공공형	오산시코딩에듀랩 1층	110.14㎡ (34평)	3명	-경찰관 1명 -상담사 2명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 운영사업 개요)

나. 공동대응팀의 운영 예산

공동대응팀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비와 시군비가 3:7로 매칭하여 지원하게 된다. 공동대응팀 운영을 시작하는 첫해에는 사무실, 사무관련 기자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에서 100%(3천 만원) 지원해주고, 운영비는 도와 시군에서 3:7로 배분하여 지원하는 구조이다.

2023년 9월, 현재 공동대응팀을 운영 중인 시군의 총 예산 규모는 다음과 같다. 2022년의 공동대응팀 운영 총 예산은 4개의 시군에 300,000천원이었고, 도비 132,000천원, 시비 168,000천원이었다. 2023년에는 5개의 시군에 1,015,000천원이었고, 도비는 388,500천원, 시비는 626,500천원이었다. 운영 인력도 2022년 총 19명에서 2023년에는 총 28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3-4] 공동대응팀 운영개요

시군	2022년	2023년
운영시군	부천시, 하남시, 김포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김포시, 안산시, 파주시
운영예산	300,000천원 (도비 132,000천원 / 시비 168,000천원)	1,015,000천원 (도비 388,500천원 / 시비 626,500천원)
운영인력	총 19명 (팀장 4명, 상담사 5명, 통합사례관리사 4명, 경찰 6명)	총 28명 (팀장 5명, 상담사 8명, 통합사례관리사 7명, 경찰 8명)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2022년, 2023년 상반기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실적 보고).

설치 지원비는 개소한 첫 해에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과 2024년에 동일하게 지급되지만, 인건비와 운영비는 2024년에는 지원 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는 종사자 1인당 35,000천원을 지원했는데, 2024년에는 종사자 1인당 38,000천원으로 종사자 1인당 인건비 지원액이 3,000천원 증가했다. 인건비는 시군의 상황에 따라 1개소당 2명에서 6명까지 차등지원하게 되며, 운영비의 경우도 시군의 규모, 범죄율, APO의 규모, 종사자 수, 기타 지역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하게 된다.

[표 3-5] 2023~2024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예산 지원 기준

(단위: 천원)

구분	내역	2023	2024	증가	
설치지원	시설환경개선 및 업무기자재(사무용품) 구입 지원	30,000	30,000	-	
운영지원	인건비	2023년 종사자 1인당 35,000천원 2024년 종사자 1인당 38,000천원 (1개소당 2명~6명까지 차등 지원)	70,000 ~210,000	76,000 ~228,000	6,000 ~18,000
	운영비	시군의 규모, 범죄율, 경찰(APO)서 규모와 수, 종사자 수, 기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15,000 ~30,000	18,000 ~55,000	3,000 ~25,000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공동대응팀 사업 설명. 2023.3.6., 2023.10.11.제공)

다. 공동대응팀 운영 실적

1) 지원사례 정리 양식

공동대응팀에 접수된 사례는 다음과 같은 양식에 따라 기록된다. 먼저 사례번호, 접수 일시, 리콜자와 접수자, 의뢰자(신고자), 접수 경로, 폭력 유형, 피해/가해 유형, 사건발생 장소, 피해자, 가해자, 동거 여부 등을 기록하게 된다.

내담자에 대한 정보의 경우 이름, 성별, 연락처, 가정형태, 장애여부, 연령, 혼인여부, 거주지역, 재발관리 등급, 신고 유형, 상담이력을 작성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지원 종결일을 기록한다.

[표 3-6] 공동대응팀 지원사례 정보 입력(일반사항)

구분	일반사항										
	사례번호	접수일시	리콜자&접수자	의뢰자(신고자)	접수경로	폭력유형	피해/가해 유형	사건 발생지	피해자	가해자	동거여부
내담자 명	내담자 정보										사후관리
	성별	연락처	가정형태	장애여부	연령	혼인여부	거주지역	재발관리 가정여부(등급)	신고유형	상담이력	종결일

출처: 경기도. (2023).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지침. (2차개정판). p97.

공동대응팀 지원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작성한 후에는 폭력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를 입력하게 된다. 폭력의 유형으로는 크게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크·데이트폭력, 기타 폭력으로 분류하여 입력한다. ‘성폭력’의 경우는 4개의 세부유형(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언어적 폭력, 기타)으로 분류하여 입력하고, ‘가정폭력’은 6개의 세부유형(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언어적 폭력,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기타)로 분류하여 입력한다. 스토크·데이트폭력은 8개로 분류하여 입력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언어적 폭력, 디지털 폭력, 주거 침입, 성적 학대, 미행 감시, 기타로 구성된다.

[표 3-7] 폭력 유형별 분류 및 입력 정보

각 폭력별 세부유형별 분류	공동(성폭력)				가정폭력(+공동)		데이트·스토킹(+공동)			
	신체적 폭력	정서 폭력	언어 폭력	기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디지털 폭력	주거 침입	성적 학대	미행 감시

출처: 경기도. (2023).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지침, (2차개정판). p97-98.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스토킹 지원대장 재구성.

지원사례별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의 정리 양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례번호를 기입하고 관리일자, 관리시간, 리콜자&담당자, 내담자(신고자, 의뢰자 등), 피해자, 관할경찰서(지역포함), 피해 상태, 지원요청방법(대면, 전화, 문자), 진행 상태를 작성한다. 그리고 지원 내용은 가정방문, 안전확인&심리상담, 수사&법률상담, 기관상담&연계, 주민등록열람제한신청, 긴급 분리&쉼터지원, 진술조력&신뢰관계인 동석, 확인서류 발급, 사회복지정보제공, 구직지원, 임시조치, 기타로 이러한 지원 내용들은 1명의 내담자에게 복수지원될 수 있으며, 1명의 내담자에게 제공된 지원은 모두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표 3-8] 공동대응팀 지원사례별 지원 내용(공동)

사례 번호	관리 일자	관리 시간	리콜자 & 담당자	내담자 (신고자 의뢰자 등)	피해자	관할경찰서				피해상태			지원요청			
						지역	자살 시도	심리 불안 & 우울	상해	기타	대면	전화	문자			

진행상태					지원내용(복수선택)										
불통	전화 종결	문자 종결	사례 진행	가정 방문	안전 확인& 심리 상담	수사 & 법률 상담	기관 상담 & 연계	주민 등록 열람 제한 신청	긴급 분리 & 쉼터 지원	진술 조력& 신뢰 동석	확인 서류 발급	사회 복지 정보 제공	구직 지원	임시 조치 (쉴터 규제 등)	기타

출처: 경기도. (2023).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지침, (2차 개정판). p97.

2) 공동대응팀 운영 시군의 인구 규모

2022년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의 총 인구수는 13,589,432명이며, 세대수는 5,913,694명이다. 이 가운데 남성은 6,839명이고, 여성은 6,750,156명이다.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은 수원시로 1,190,964명이며, 그 다음은 고양시로 1,076,535명이고, 그 다음은 용인시로 1,074,971명이다. 2021년, 2022년에 개소하여 운영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4개 시군의 인구 현황은 다음과 같다.¹³⁾

[표 3-9] 경기도 인구통계

(단위: 명, %)

행정기관	총인구수	세대수	남자 인구수	여자 인구수	남여 비율
경기도	13,589,432	5,913,694	6,839,276	6,750,156	1.01
부천시	790,128	344,135	391,102	399,026	0.98
하남시	326,059	140,415	162,773	163,286	1.00
김포시	484,267	202,189	241,904	242,363	1.00
안산시	641,660	291,091	328,940	312,720	1.05

주.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이 포함된 자료임. 외국인 제외됨.
출처. 행정안전부(2017-2019). 「주민등록인구현황」 웹 DB.

인구 규모에 따라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경찰서의 수도 상이하다. 부천시의 경우 3개의 경찰서(부천소사, 부천 원미, 부천 오정)가 설치되어 있고, 김포시는 1개, 안산시는 2개(안산 단원, 안산 상록), 하남시는 1개의 경찰서가 있다. 이러한 경찰서의 수에 따라 공동대응팀의 인력 규모가 다르게 결정되었고, 지원 실적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 공동대응팀 운영 시군의 지원 실적¹⁴⁾

가) 지원 폭력 유형별 지원 인원

2022년에는 3개의 시군에서 총 3,773명에게 지원했다면, 2023년 상반기에는 4개의 시군에서 총 6,120명에게 지원했다. 시군별로 지원 인원은 차이가 있는데, ‘부천시’의 경우 2022년에는 2,072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상반기에만 2,417명으로 지난해 전체 지원 인원과 유사했다. ‘하남시’의 경우는 2022년에는 1,134명이었고, 2023년 상반기에는 672명으로 상반기

13) 기타 다른 시군의 인구 규모는 [부록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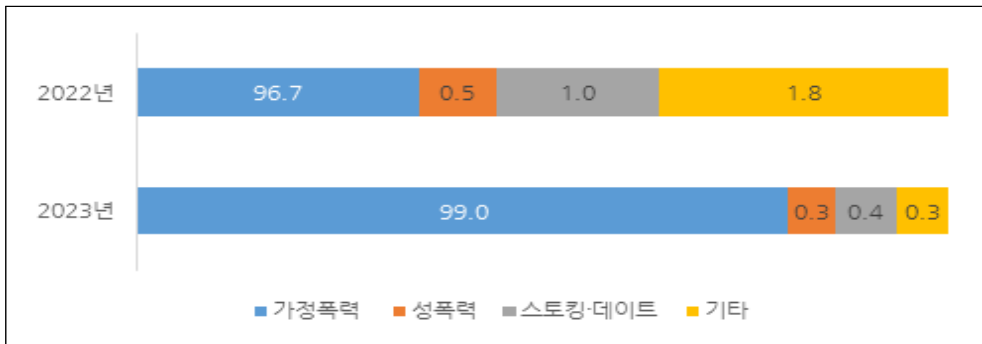
14) 2023년 10월 기준, 공동대응팀 구축 및 운영이 결정된 시군은 8개이지만, 시군별 개소 상황이 상이하여, 2022년은 3개의 시군, 2023년 상반기 기준 4개의 시군의 운영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원실적을 고려했을 때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하면 비슷한 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시’는 2022년에는 567명이었고, 2023년 상반기에만 1,146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안산시’의 경우는 2022년 12월에 개소하여 2022년 실적은 집계가 어려웠으나 2023년 상반기에 1,885명으로 많은 인원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는 지난해의 개소 시점을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지만,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부분의 시군에서 1,000명 이상이 지원받았다고 할 수 있다.

지원사례의 폭력 유형을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데이트, 기타로 분류할 때 2022년에는 ‘가정폭력’의 비중이 96.7%, 2023년 상반기에는 99.0%로 가정폭력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3] 지원사례의 폭력 유형(2022~2023)

(단위: %)



[표 3-10] 지원사례의 폭력 유형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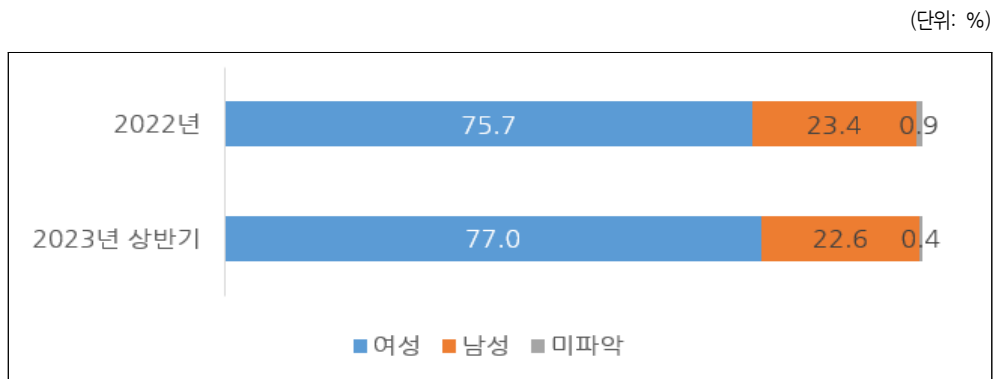
연도	시군	누계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데이트	기타
2022년	계	3,773 (100.0)	3,650 (96.7)	18 (0.5)	38 (1.0)	67 (1.8)
	부천시	2,072	2,056	9	3	4
	하남시	1,134	1,027	9	35	63
	김포시	567	567	0	0	0
2023년 상반기	계	6,120 (100.0)	6,060 (99.0)	18 (0.3)	23 (0.4)	19 (0.3)
	부천시	2,417	2,407	8	1	1
	하남시	672	669	0	2	1
	김포시	1,146	1,124	6	12	4
	안산시	1,885	1,860	4	8	13

주. 기타 신고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과 청소년들의 비행, 일탈 행위, 학교폭력 등으로 가정 내에서 신고된 사건 등임.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2022년, 2023년 상반기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실적 보고).

나) 지원 대상의 특성: 성별, 장애여부, 가정

지원사례의 성별 비율은 2022년에는 전체 지원사례 가운데 ‘여성’ 이 75.7%(2,858명), ‘남성’ 이 23.4%(881명) 수준이었고, 2023년 상반기에는 ‘여성’ 이 77.0%(4,712명), ‘남성’ 이 22.6%(1,386명)이었다. 지원사례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까지도 포함하므로 지원사례의 성별 비율을 피해자의 성별 비율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림 3-4] 지원사례의 성별



[표 3-11] 지원사례의 성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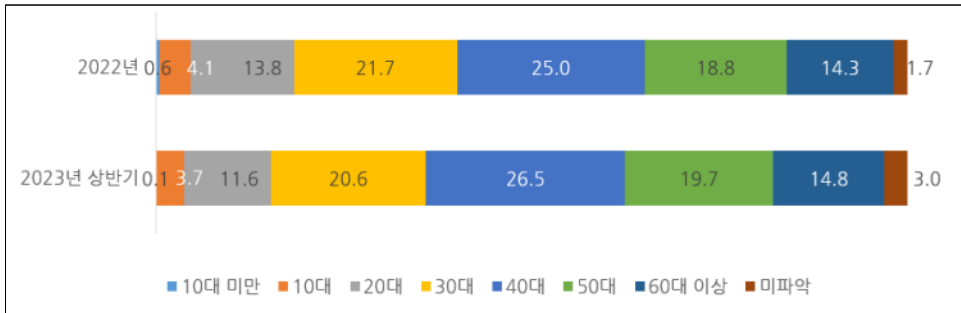
연도	시군	합계	여성	남성	미파악
2022년	계	3,773 (100.0)	2,858 (75.7)	881 (23.4)	34 (0.9)
	부천시	2,072	1,548	522	2
	하남시	1,134	834	268	32
	김포시	567	476	91	0
2023년 상반기	계	6,120 (100.0)	4,712 (77.0)	1,386 (22.6)	22 (0.4)
	부천시	2,417	1,859	558	0
	하남시	672	529	142	1
	김포시	1,146	908	232	6
	안산시	1,885	1,416	454	15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2022년, 2023년 상반기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실적 보고).

지원사례의 연령대 분포를 보면, 2022년에는 전체 지원사례 가운데 ‘40대’ 25.0%(945명), ‘30대’ 21.7%(817명), ‘50대’ 18.8%(709명)의 순으로 나타났고, 2023년 상반기에는 전체 지원사례 가운데 ‘40대’ 26.5%(1,261명), ‘30대’ 20.6%(1,261명), ‘50대’ 19.7%(1,207명)으로 구체적인 비율은 차이가 있었지만 높게 나타난 연령대 순서는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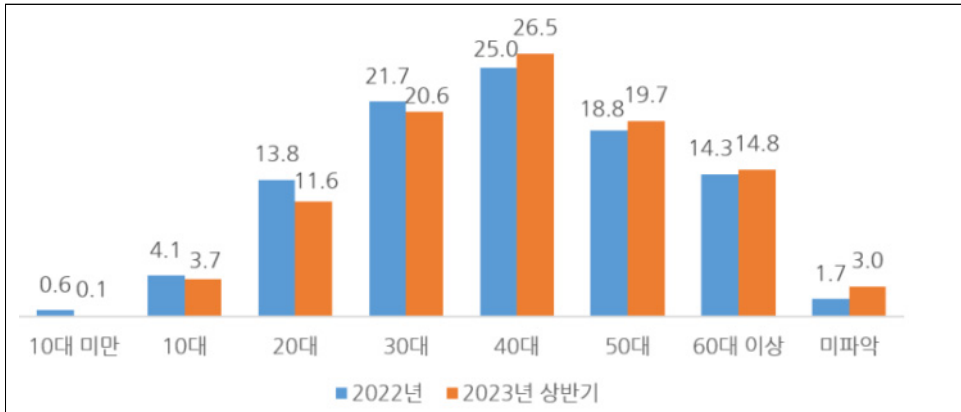
[그림 3-5] 연도별 지원사례의 연령대(2022년과 2023년 상반기)

(단위: %)



[그림 3-6] 지원사례의 연령대별 비교(2022년과 2023년 상반기)

(단위: %)



[표 3-12] 지원사례의 연령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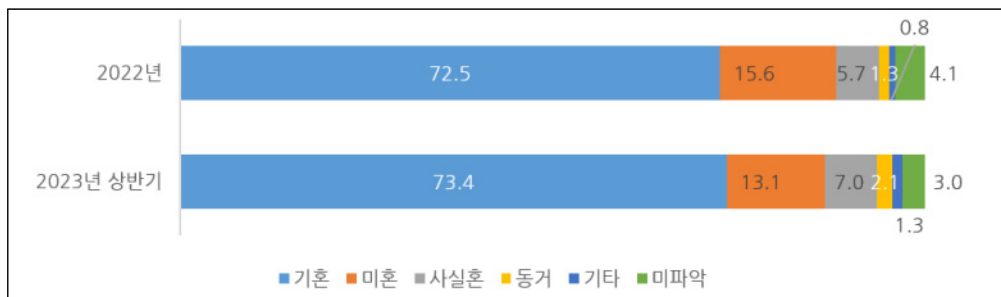
연도	시군	합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미파악
2022년	계	3,773 (100.0)	22 (0.6)	155 (4.1)	519 (13.8)	817 (21.7)	945 (25.0)	709 (18.8)	540 (14.3)	66 (1.7)
	부천시	2,072	5	72	332	418	451	436	347	11
	하남시	1,134	13	70	127	266	317	172	126	43
	김포시	567	4	13	60	133	177	101	67	12
2023년 상반기	계	6,120 (100.0)	4 (0.1)	229 (3.7)	708 (11.6)	1,261 (20.6)	1,622 (26.5)	1,207 (19.7)	906 (14.8)	183 (3.0)
	부천시	2,417	2	112	295	479	561	491	417	60
	하남시	672	0	14	68	184	197	105	93	11
	김포시	1,146	1	39	116	234	354	220	152	30
	안산시	1,885	1	64	229	364	510	391	244	82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2022년, 2023년 상반기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실적 보고).

지원사례의 혼인 상황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전체 지원사례 가운데 ‘기혼’ 72.5%(2,735명), 미혼 15.6%(588명), 사실혼 5.7%(216명)이었고, 2023년 상반기에는 전체 지원사례 가운데 기혼 73.4%(4,493명), 미혼 13.1%(803명), 사실혼 7.0%(428명)으로 기혼, 미혼, 사실혼의 순서인 것을 동일했으나 사실혼의 비율이 5.7%에서 7.0%로 다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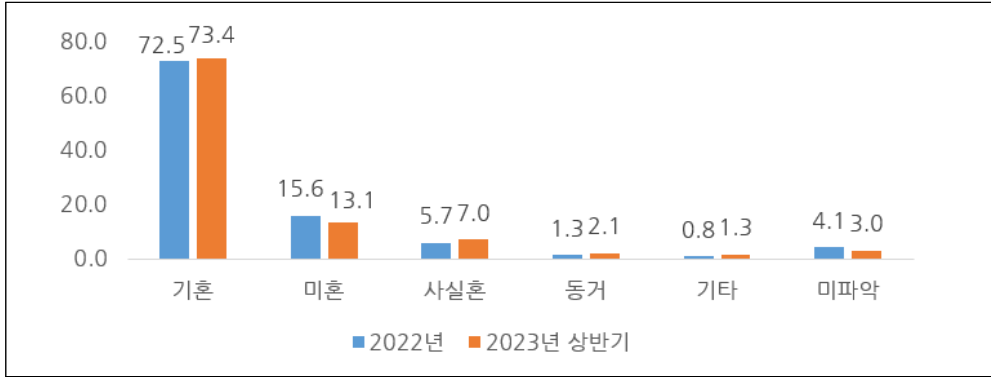
[그림 3-7] 지원사례의 혼인 상황

(단위: %)



[그림 3-8] 지원사례의 혼인 상황

(단위: %)



[표 3-13] 지원사례의 혼인 상황

(단위: 명, %)

연도	시군	합계	기혼	미혼	사실혼	동거	기타	미파악
2022년	계	3,773 (100.0)	2,735 (72.5)	588 (15.6)	216 (5.7)	49 (1.3)	31 (0.8)	154 (4.1)
	부천시	2,072	1,479	360	138	31	10	54
	하남시	1,134	782	192	57	12	11	80
	김포시	567	474	36	21	6	10	20
2023년 상반기	계	6,120 (100.0)	4,493 (73.4)	803 (13.1)	428 (7.0)	129 (2.1)	82 (1.3)	185 (3.0)
	부천시	2,417	1,697	396	211	62	4	47
	하남시	672	566	77	28	1	0	0
	김포시	1,146	876	116	23	14	55	62
	안산시	1,885	1,354	214	166	52	23	76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2022년, 2023년 상반기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실적 보고).

사실혼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가족구성방식의 변화, 성(섹슈얼리티)과 결혼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 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면서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 사건을 접수하거나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는 체크리스트도 새롭게 변화되었다. 이전에는 단계별로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다면, 최근에는 ‘주관적 의사’와 ‘객관적 사실’로 범주화한 후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여 이 가운데 1가지 기준이라도 충족한다면 사실혼 관계로 파악하는 등 사실혼의 인정 범위가 좀 더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표 3-14] 사실혼 여부 판단 체크리스트

구분		내용	
예전 기준	1단계	혼인신고 여부	①예→(법률혼) ②아니오
	2단계	결혼할 의사로 동거하였는지	①예 ②아니오
	3단계	아래 항목에서 2개 이상 해당 시 → 4단계	①3년 이상 동거 ②가해자와 자녀출산 ③집안 행사 참여 ④생활비 공동 사용 ⑤주위에서 부부로 인식
	4단계	다른 법률적 배우자의 존재	①예 ②아니오
	5단계	법률적 배우자와 이혼 여부	①예→(사실혼) ②아니오→(일반사건)
새로운 기준	주관적 의사	①과거 또는 현재 상대방과 결혼 의사로 동거(당사자 중 일방의 의사만 있어도 체크)	
	객관적 사실	②행위자와 상견례·결혼식 ③행위자와 자녀 출산(임신 포함) ④은행, 보험 등 각종 서류상에 배우자로 표시 ⑤제사, 경조사 등 양가 집안 행사 참여 ⑥생활비 공동 사용 ⑦주소지 전입신고 ⑧주변(가족, 지인, 이웃 등)에서 혼인한 사이로 인식 *전체 문항 중 최소 1개 이상 해당시 사실혼 인정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

지원사례의 장애 여부를 살펴보면, 2022년에는 비장애인 비율이 전체 지원사례 가운데 82.7%(3,120명), 2023년 상반기에는 전체 지원사례 가운데 94.7%였다. 비장애인의 지원 비율이 증가한 것은 장애인의 지원비율이 감소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비장애인과 장애인 지원 시 고려해야할 부분이나 연계기관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지원 과정에서 차별화되는 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장애인 지원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3-15] 장애 여부

(단위: 명, %)

연도	시군	합계	장애 없음	지적 장애	신체 장애	정서 장애	정신 장애	발달 장애	복합 장애	기타	미파악
2022년	계	3,773 (100.0)	3,120 (82.7)	23 (0.6)	22 (0.6)	16 (0.4)	32 (0.8)	- (-)	8 (0.2)	30 (0.8)	522 (13.8)
	부천시	2,072	1,904	15	17	13	13	-	3	15	92
	하남시	1,134	857	3	3	1	15	-	5	13	237
	김포시	567	359	5	2	2	4	-	0	2	193
2023년 상반기	계	6,120 (100.0)	5,793 (94.7)	59 (1.0)	45 (0.7)	55 (0.9)	74 (1.2)	5 (0.1)	4 (0.1)	18 (0.3)	67 (1.1)
	부천시	2,417	2,284	25	12	24	29	4	2	0	37
	하남시	672	661	1	2	1	6	0	0	1	0
	김포시	1,146	1,104	9	8	1	16	0	2	2	4
	안산시	1,885	1,774	24	23	29	23	1	0	15	26

주. 2023년 발달장애 구분 신설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2022년, 2023년 상반기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실적 보고).

다) 지원 내용별 건수

공동대응팀의 지원내용은 ‘가정방문’, ‘안전 및 심리지원’, ‘법률상담’, ‘전문기관 연계’, ‘긴급조치 및 지원’, ‘복지지원’, ‘의료지원’, ‘기타’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1명의 신고자/피해자에게 지원된 모든 지원이 중복 체크되도록 하고 있어서 지원 건수와 지원 인원은 일치하지 않는다. 2022년의 지원 내용 현황을 살펴보면, 안전 및 심리지원이 75.0%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기관 연계가 13.9%로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고, 그 다음은 법률상담으로 5.4%였다.

2023년에는 지원내용 항목으로 ‘피해자지원’과 ‘의료지원’이 추가되었으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원은 안전 및 심리지원으로 62.6%였다. 그 다음은 복지지원으로 11.5%, 전문기관 연계가 11.3%로 복지지원과 전문기관 연계지원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은 법률상담(4.8%)과 피해자지원(4.4%)이었다.

[표 3-16] 지원내용

(단위: 건, %)

연도	시군	총계	가정방문	안전 및 심리지원	법률상담	전문기관 연계	긴급조치 및 지원	복지지원	피해자 지원	의료지원	기타
2022년	계	7,419 (100.0)	101 (1.4)	5,567 (75.0)	404 (5.4)	1,030 (13.9)	86 (1.2)	90 (1.2)	-	-	141 (1.9)
	부천시	3,371 (100.0)	50 (1.5)	2,334 (69.2)	198 (5.9)	620 (18.4)	86 (2.6)	44 (1.3)	-	-	39 (1.2)
	하남시	1,402 (100.0)	42 (3.0)	888 (63.3)	152 (10.8)	245 (17.5)	0 (0.0)	46 (3.3)	-	-	29 (2.1)
	김포시	2,646 (100.0)	9 (0.3)	2,345 (88.6)	54 (2.0)	165 (6.2)	0 (0.0)	0 (0.0)	-	-	73 (2.8)
	계	11,116 (100.0)	230 (2.1)	6,957 (62.6)	536 (4.8)	1,257 (11.3)	204 (1.8)	1,281 (11.5)	494 (4.4)	37 (0.3)	120 (1.1)
2023년 상반기	부천시	3,840 (100.0)	71 (1.8)	2,462 (64.1)	126 (3.3)	237 (6.2)	10 (0.3)	832 (21.7)	18 (0.5)	7 (0.2)	77 (2.0)
	하남시	924 (100.0)	48 (5.2)	580 (62.8)	87 (9.4)	107 (11.6)	22 (2.4)	16 (1.7)	56 (6.1)	3 (0.3)	5 (0.5)
	김포시	3,809 (100.0)	90 (2.4)	2,319 (60.9)	230 (6.0)	345 (9.1)	126 (3.3)	370 (9.7)	295 (7.7)	13 (0.3)	21 (0.6)
	안산시	2,543 (100.0)	21 (0.8)	1,596 (62.8)	93 (3.7)	568 (22.3)	46 (1.8)	63 (2.5)	125 (4.9)	14 (0.6)	17 (0.7)
	계	11,116 (100.0)	230 (2.1)	6,957 (62.6)	536 (4.8)	1,257 (11.3)	204 (1.8)	1,281 (11.5)	494 (4.4)	37 (0.3)	12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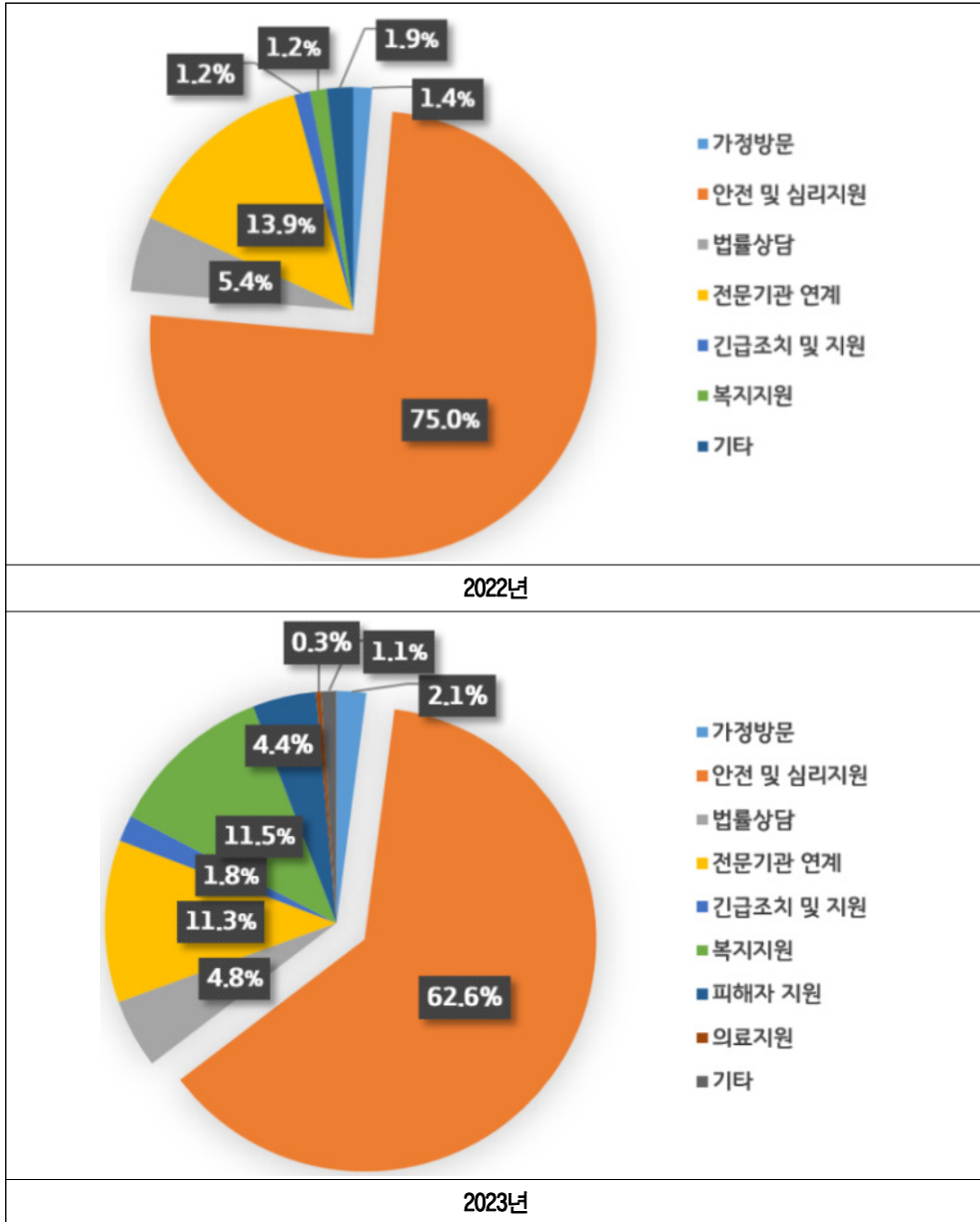
주1. 2023년 '피해자 지원, 의료지원' 구분 신설

주2. 복수제공된 지원임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2022년, 2023년 상반기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실적 보고).

[그림 3-9] 지원내용

(단위: %)



지원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상담은 ‘내방상담’ 과 ‘가정방문’ 이 있는데 내방상담은 공동대응팀이 있는 곳으로 내담자가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상담이며, 가정방문은 공동대응팀이 피해자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상담이다. ‘안전확인&심리상담’ 은 사건 신고 다음날 경찰이 다시 전화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동의여부를 거쳐 동의한 사례에 한해 상담사가 초기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지원’ 은 소송지원까지는 포함하지 않는 법률상담지원을 의미하며, ‘수사상담&지원’ 은 수사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으로 동행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신뢰관계인으로 배석하는 것이다. ‘동행지원’ 은 피해자 및 그 가족과 함께 행정복지센터나 복지관 등을 동행한 경우를 의미하며, ‘피해자지원정보 제공’ 은 주민등록열람제한제도, 자녀의 학교전학지원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을 의미한다. ‘긴급분리&쉼터 지원’ 은 쉼터 입소 관련 정보 및 입소를 연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긴급지원’ 은 긴급물품이나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3-17] 지원내용 목록

지원내용	목록
내방상담	공동대응팀에 방문해서 이루어지는 상담
가정방문	공동대응팀의 담당자들이 피해자의 가정 등으로 찾아가는 상담
안전확인&심리상담	익일 리콜이나 초기 상담 등
기관상담&연계	연계나 지원이 필요한 기관들과의 통화
법률지원&상담	법률 관련 상담이나 지원
수사상담&지원	진술조력, 신뢰관계인 동석 등 수사 지원
동행지원	피해자 및 그 가족과 관련기관에 동행(예: 행정복지센터 동행, 복지관 동행 등)
피해자지원정보제공	주민등록열람제한, 주소이전 지원, 학교전학지원 등의 연관 업무 지원
긴급분리&쉼터지원	쉼터소개, 쉼터입소 관련 사항 등
확인서류발급	상담사실확인서, 상담연계의뢰서 등 서류 발급
사회복지지원&정보제공	복지지원 정보 제공
자활지원&정보제공	구직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소개 등
임시조치&접근금지(범죄피해자안전조치 포함)	스마트워치 지원, CCTV지원, 맞춤형 순찰 등
긴급지원	긴급물품(식비, 다과비, 의류비, 교통비, 돌봄비)등 지원
의료정보 및 지원	의료정보, 입원정보 제공 및 입원지원 등

자료: 경기도(2023),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지침」, p101.

라) 폭력 유형별 특성

(1) 가정폭력

가정폭력의 세부적인 피해 내용으로는 2022년에는 신체적 폭력(32.0%), 언어적 폭력(32.0%), 정서적 폭력(26.6%), 재물손괴(6.1%) 순이었다. 2023년 상반기에는 언어적 폭력(31.3%), 정서적 폭력(30.4%), 신체적 폭력(29.4), 재물 손괴(5.6%)순으로 신체적 폭력에 비해 언어적 폭력이나 정서적 폭력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3-18] 가정폭력 피해 유형 (중복응답)

(단위: 건, %)

연도	시군	합계	신체	정서	언어	경제적 폭력	성적	재물	기타	미파악
2022년	계	6,505 (100.0)	2,079 (32.0)	1,728 (26.6)	2,081 (32.0)	93 (1.4)	7 (0.1)	400 (6.1)	98 (1.5)	19 (0.3)
	부천시	3,224	1,219	626	980	80	3	265	39	12
	하남시	2,610	584	970	947	5	3	72	27	2
	김포시	671	276	132	154	8	1	63	32	5
2023년 상반기	계	10,220 (100.0)	3,007 (29.4)	3,102 (30.4)	3,203 (31.3)	119 (1.2)	21 (0.2)	573 (5.6)	144 (1.4)	51 (0.5)
	부천시	3,667	1,236	992	1,125	7	7	264	10	26
	하남시	1,589	369	590	587	2	1	34	6	0
	김포시	1,198	473	286	237	7	3	111	63	18
	안산시	3,766	929	1,234	1,253	103	10	164	65	7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2022년, 2023년 상반기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실적 보고).

가정폭력의 요인으로는 부부갈등이 2022년에는 48.9%, 2023년 상반기에는 50.4%로 거의 절반 수준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으로 ‘원가족 부모와의 갈등’이나 ‘피해자/신고자의 자녀’와의 갈등으로 2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표 3-19] 가정폭력 요인 (중복응답)

(단위: 건, %)

연도	시군	합계	부부갈등	부모와 자녀갈등	원가족 부모와의 갈등	자녀양육 문제	경제적 문제	간병문제	외도	형제자매 간의 갈등	주취	가타	미따악
2022년	계	5,260 (100.0)	2,571 (48.9)	425 (8.1)	853 (16.2)	-	175 (3.3)	205 (3.9)	-	-	792 (15.1)	224 (4.3)	15 (0.3)
	부천시	3,353	1,508	297	565	-	112	125	-	-	640	103	3
	하남시	1,230	710	69	257	-	26	30	-	-	54	82	2
	김포시	677	353	59	31	-	37	50	-	-	98	39	10
2023년 상반기	계	7,712 (100.0)	3,884 (50.4)	1,240 (16.1)	260 (3.4)	284 (3.7)	293 (3.8)	228 (3.0)	21 (0.3)	231 (3.0)	999 (13.0)	234 (3.0)	38 (0.5)
	부천시	3,224	1,558	572	4	172	135	95	0	196	470	14	8
	하남시	709	467	132	0	26	13	8	6	28	19	9	1
	김포시	1,214	595	107	89	41	39	88	15	7	115	99	19
	인천시	2,565	1,264	429	167	45	106	37	0	0	395	112	10

주. 2023년 ‘자녀양육문제’, ‘외도’, ‘형제자매간의 갈등’ 구분 신설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2022년, 2023년 상반기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실적 보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는 불안·우울이 70~8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신체적인 상해를 입은 경우도 7~10% 수준이었다. 2023년에는 재물손괴를 새롭게 추가하여 정리하고 있는데, 재물손괴의 경우 4.0%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의 유형으로 무기(칼, 물건 등)를 들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하지만, 가정 내의 가구, 전자제품 등을 파손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0] 가정폭력 피해 상태 (중복응답)

(단위: 건, %)

연도	시군	합계	자살 및 시도	불안·우울	상해	재물손괴	기타	미파악
2022년	계	4,197 (100.0)	16 (0.4)	3,475 (82.8)	312 (7.4)	- -	201 (4.8)	193 (4.6)
	부천시	2,632	5	2,225	211	-	182	9
	하남시	1,050	8	966	69	-	5	2
	김포시	515	3	284	32	-	14	182
2023년 상반기	계	6,849 (100.0)	7 (0.1)	5,249 (76.6)	795 (11.6)	276 (4.0)	124 (1.8)	398 (5.8)
	부천시	2,634	0	2,459	105	56	2	12
	하남시	728	1	624	78	25	0	0
	김포시	902	2	431	40	39	37	353
	안산시	2,585	4	1,735	572	156	85	33

주. 2023년 '재물손괴' 구분 신설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2022년, 2023년 상반기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실적 보고).

공동대응팀의 주요한 업무이자 핵심적 업무로 볼 수 있는 사례 판정은 폭력의 재발 가능성을 판단하여 모니터링 함으로써 폭력의 재발을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있다.

경찰은 신고된 사건의 가정폭력의 재발가능성을 파악하여 2단계로 사례를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가정폭력 입건 3회 이상 or 최근 3년간 가해자가 가정폭력으로 구속된 경우가 1회 이상 or 최근 1년간 신고 이력이 3회 이상 or 최근 1년간 피해자의 주취 폭력 피해 경험 3회 이상 or 긴급임시조치 결정 또는 임시조치가 신청된 경우’ 는 ‘위험’ 사례로 판단하여 한 달에 1번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모니터링은 전화를 통해 현재 상황이나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최근 3년간 가정폭력 입건 2회 이상 or 최근 1년간 신고 이력이 2회 이상 or 최근 1년간 피해자의 주취 폭력 피해 경험 2회 이상’ 인 경우 ‘우려’ 사례로 분류한 후 두 달에 1회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가정폭력 재발이 우려되는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최초 모니터링은 ‘10일’ 이내 진행한다.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들은 APO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신

고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단순사례(일회성 신고)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가해자의 위험성(주취, 정신병력, 범죄 전과 이력 등), 행위의 위험성(흉기 휴대, 목 조름, 방화 등), 피해의 심각성(상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A or B 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등급해제 기준은 ① 3개월간 신고이력이 없는 경우, ② 재발우려가정 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해제 결정한 경우, ③ 대상자가 모니터링 거부한 경우이다. 단, A등급 사례가 3개월간 신고이력이 없는 경우 바로 해제하지 않고 B 등급으로 설정하여 관리한 후 다시 3개월간 신고 이력이 없을 경우 해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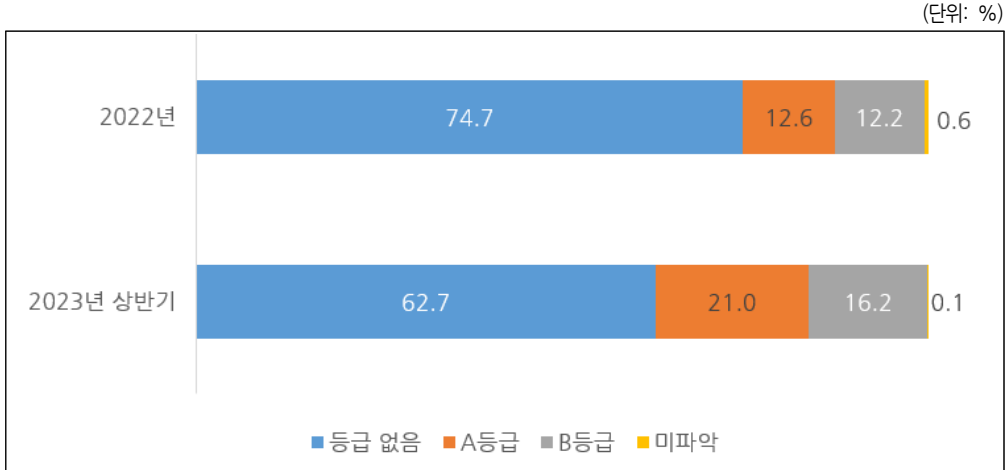
[표 3-21] 경찰의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선정 및 해제 기준

분류	선정기준	모니터링
A(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가정폭력 입건 3회 이상(본건포함) - 최근 3년간 가해자가 가정폭력으로 구속된 전력 1회 이상 - 최근 1년간 신고 이력 3회 이상(동일 건 연속 신고 및 명백한 오인 신고 제외) - 최근 1년간 피해자의 주취 폭력 피해 경험 3회 이상(미신고건 포함) - 긴급임시조치 결정 또는 임시조치 신청된 경우(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 안전조치 포함) 	(예시) 1개월 1회
B(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가정폭력 입건 전력 2회 이상(본건 포함) - 최근 1년간 신고 출동 이력 2회 이상(동일 건 연속 신고 및 명백한 오인 신고 제외) - 최근 1년간 피해자의 주취 폭력 경험 피해 2회 이상(미신고건 포함) 	(예시) 2개월 1회
해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3개월간 신고이력이 없는 경우 (단, A등급은 B등급 격하, 모니터링 후 해제) ② 재발우려가정 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해제 결정한 경우 ③ 대상자가 모니터링 거부한 경우 (명시적 의사 확인 후 해제, 기록 유지하여 신고출동 시 활용) 	

자료: 경기도. (2023).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지침」. p60.

2022년에 신고 건수 가운데 가정폭력 재발위험성 등급별로 분류해보면 ‘등급없음’의 경우가 74.7%(2,818명)였고, A등급은 12.6%(475명), B등급은 12.2%(459명)이었다. 2023년 상반기에는 신고 건수 가운데 ‘등급없음’의 경우가 62.7%(3,838명)였고, A등급은 21.0%(1,285명), B등급은 16.2%(992명)이었다. ‘미과약’ 사례를 제외하고, 2023년 상반기에는 2022년보다 재발가능성 등급을 받았던 사례의 비중이 증가하고, ‘등급없음’의 비율은 감소했다. 이는 ‘초기 신고’ 비율보다 ‘재신고’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한 번 발생한 폭력은 재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신고 사건의 경우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폭력의 재발가능성을 주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림 3-10] 가정폭력 재발위험성 등급별 신고 인원



[표 3-22] 가정폭력 재발위험성 등급별 신고 인원

(단위: 명, %)

연도	시군	합계	등급없음	A등급	B등급	미파악
2022년	계	3,773 (100.0)	2,818 (74.7)	475 (12.6)	459 (12.2)	21 (0.6)
	부천시	2,072	1,609	218	224	21
	하남시	1,134	849	154	131	0
	김포시	567	360	103	104	0
2023년 상반기	계	6,120 (100.0)	3,838 (62.7)	1,285 (21.0)	992 (16.2)	5 (0.1)
	부천시	2,417	1,350	553	509	5
	하남시	672	453	115	104	0
	김포시	1,146	705	235	206	0
	안산시	1,885	1,330	382	173	0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2022년, 2023년 상반기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실적 보고).

2022년의 지원 유형별 지원 건수를 살펴보면, 안전확인&심리 상담이 74.7%(5,555건), 타 기관 상담 연계가 13.8%(1,025건), 수사법률상담이 5.3%(395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23]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중복응답)(2022)

(단위: 건, %)

시군	계		부천시	하남시	김포시
합계	7,434	(100.0)	3,351	1,397	2,686
가정방문	101	(1.4)	50	42	9
안전확인 & 심리상담	5,555	(74.7)	2,322	888	2,345
수사 법률상담	395	(5.3)	194	147	54
기관상담연계	1,025	(13.8)	617	243	165
주민등록열람제한 신청	1	(0.0)	1	0	0
긴급분리 쉼터지원	128	(1.7)	86	2	40
진술조력 신뢰동석	1	(0.0)	0	0	1
확인서류 발급	3	(0.0)	1	1	1
사회복지정보 제공	114	(1.5)	43	46	25
구직지원	14	(0.2)	0	13	1
임시조치(접근금지)	53	(0.7)	11	3	39
기타	44	(0.6)	26	12	6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 (2022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실적 보고)

2023년은 2022년과 지원 내용 분류가 상이했는데, 2023년 상반기 기준, 안전확인&심리 상담 62.8%(6,903건), 사회복지지원&정보제공 11.6%(1,273건), 기관 상담& 연계 11.3%(1,242건) 순이었다.

[표 3-24]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중복응답)(2023)

(단위: 건, %)

시군	계	부천시	하남시	김포시	안산시
합계	10,989 (100.0)	3,823	922	3,717	2,527
내방상담	87 (0.8)	4	7	66	10
가정방문	131 (1.2)	63	41	16	11
안전확인 & 심리상담	6,903 (62.8)	2,459	580	2,278	1,586
기관상담& 연계	1,242 (11.3)	235	107	335	565
법률지원 & 상담	453 (4.1)	113	84	185	71
수사상담 & 지원	57 (0.5)	5	1	32	19
동행지원	23 (0.2)	4	8	4	7
피해자지원 정보제공	487 (4.4)	18	56	288	125
긴급분리 & 쉼터지원	69 (0.6)	6	2	41	20
확인서류 발급	4 (0.0)	0	1	2	1
사회복지 지원 & 정보제공	1,273 (11.6)	832	16	362	63
자활지원 & 정보제공	86 (0.8)	70	4	3	9
임시조치 & 접근금지	57 (0.5)	0	0	42	15
긴급지원	53 (0.5)	0	12	37	4
의료정보 & 지원	37 (0.3)	7	3	13	14
기타	27 (0.2)	7	0	13	7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 (2023년 상반기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실적 보고)

(2) 성폭력

공동대응팀의 지원사례에서 성폭력 사례는 가정폭력 사례에 비해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2022년 전체 지원 건수가 33건이었다면, 2023년 상반기의 지원 건수가 31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적은 수준이지만 다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25] 성폭력 피해 유형 (중복응답)

(단위: 건)

연도	시군	합계	신체폭력	정서폭력	언어폭력	디지털폭력	기타	미파악
2022년	계	33	15	13	2	-	2	1
	부천시	16	7	8	0	-	0	1
	하남시	17	8	5	2	-	2	0
	김포시	0	0	0	0	-	0	0
2023년	계	31	14	6	7	2	2	0
	부천시	8	7	0	0	1	0	0
	하남시	0	0	0	0	0	0	0
	김포시	12	4	3	4	-	1	0
	안산시	11	3	3	3	1	1	

주. 2023년 '디지털폭력' 구분 신설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2022년, 2023년 상반기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실적 보고).

성폭력 피해로 인한 피해자 상태는 2022년에는 자살시도 9건, 불안·우울 8건이었는데, 2023년 상반기에는 불안·우울 16건, 상해 2건으로 불안·우울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2022년에 비해 증가했다.

[표 3-26] 성폭력 피해 상태 (중복응답)

(단위: 건)

연도	시군	합계	자살시도	불안·우울	상해	기타
2022년	계	20	9	8	1	2
	부천시	10	9	1	0	0
	하남시	10	0	7	1	2
	김포시	0	0	0	0	0
2023년	계	19	0	16	2	1
	부천시	8	0	8	0	0
	하남시	0	0	0	0	0
	김포시	6	0	5	0	1
	안산시	5	0	3	2	0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2022년, 2023년 상반기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실적 보고).

성폭력 사례는 여전히 가정폭력 사례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이지만, 2022년 지원 건수(18건)에 비해 2023년 상반기의 지원 건수(55건)가 상당 수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27] 성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중복응답)(2022)

(단위: 건)

시군	계	부천시	하남시	김포시
합계	18	14	4	0
가정방문	0	0	0	0
안전확인 심리상담	12	12	0	0
수사 법률상담	4	0	4	0
기관상담연계	1	1	0	0
주민등록열람제한 신청	0	0	0	0
긴급분리 쉼터지원	0	0	0	0
진술조력 신뢰동석	0	0	0	0
확인서류 발급	0	0	0	0
사회복지정보 제공	1	1	0	0
구직지원	0	0	0	0
임시조치(접근금지)	0	0	0	0
기타	0	0	0	0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2022년, 2023년 상반기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실적 보고).

[표 3-28] 성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중복응답)(2023)

(단위: 건)

시군	계	부천시	하남시	김포시	안산시
합계	55	13	0	36	6
내방상담	10	4	0	6	0
가정방문	0	0	0	0	0
안전확인 & 심리상담	13	1	0	9	3
기관상담& 연계	10	0	0	9	1
법률지원 & 상담	11	8	0	3	0
수사상담 & 지원	6	0	0	4	2
동행지원	0	0	0	0	0
피해자지원 정보제공	3	0	0	3	0
긴급분리 & 쉼터지원	0	0	0	0	0
확인서류 발급	0	0	0	0	0
사회복지 지원 & 정보제공	1	0	0	1	0
자활지원 & 정보제공	0	0	0	0	0
임시조치 & 접근금지	0	0	0	0	0
긴급지원	0	0	0	0	0
의료정보 & 지원	0	0	0	0	0
기타	1	0	0	1	0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2023년 상반기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실적 보고)

(3) 스토킹·데이트폭력

최근 몇 년간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이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진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향상되어왔는데, 공동대응팀의 지원사례 가운데에도 성폭력에 비해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나 스토킹·데이트 폭력의 경우 2022년에는 76건으로 나타났고, 2023년 상반기에는 41건으로 나타났다.

[표 3-29]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유형 (중복응답)

(단위: 건)

연도	시군	합계	신체 폭력	정서 폭력	언어 폭력	디지털 폭력	주거 침입 시군	성적 학대	마행 감시	기타	미파악
2022년	계	76	17	20	20	0	5	0	4	10	0
	부천시	7	1	4	1	0	0	0	0	1	0
	하남시	69	16	16	19	0	5	0	4	9	0
	김포시	0	0	0	0	0	0	0	0	0	0
2023년	계	41	8	16	9	2	3	1	2	0	0
	부천시	3	0	2	1	0	1	0	0	0	0
	하남시	4	0	1	1	0	0	0	2	0	0
	김포시	13	3	7	0	1	1	1	0	0	0
	안산시	20	5	6	7	1	1	0	0	0	0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2022년, 2023년 상반기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실적 보고).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로 인한 피해자 상태는 2022년에는 불안·우울 36건이었는데, 2023년 상반기에는 불안·우울 15건, 상해 3건으로 나타났다.

[표 3-30]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상태 (중복응답)

(단위: 건)

연도	시군	합계	지살시도	불안우울	상해	거주지 변경	연락처 비공개	sns폐쇄	기타	미파악
2022년	계	48	0	36	2	-	-	-	5	5
	부천시	4	0	4	0	-	-	-	0	0
	하남시	44	0	32	2	-	-	-	5	5
	김포시	0	0	0	0	-	-	-	0	0
2023년	계	23	1	15	3	0	0	0	4	0
	부천시	2	0	2	0	0	0	0	0	0
	하남시	2	0	2	0	0	0	0	0	0
	김포시	8	0	5	0	0	0	0	3	0
	안산시	11	1	6	3	0	0	0	1	0

주. 2023년 '거주지 변경, 연락처 비공개, sns폐쇄' 구분 신설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2022년, 2023년 상반기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실적 보고).

스토킹·데이트폭력 사례는 전체 지원 대상 건수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2022년 지원 건수(9건)에 비해 2023년 상반기의 지원 건수(72건)가 상당 수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31] 스톡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중복응답)(2022)

(단위: 건)

시군	계	부천시	하남시	김포시
합계	9	6	3	0
가정방문	0	0	0	0
안전확인 심리상담	0	0	0	0
수사 법률상담	5	4	1	0
기관상담연계	4	2	2	0
주민등록열람제한 신청	0	0	0	0
긴급분리 쉼터지원	0	0	0	0
진술조력 신뢰동석	0	0	0	0
확인서류 발급	0	0	0	0
사회복지정보 제공	0	0	0	0
구직지원	0	0	0	0
임시조치(접근금지)	0	0	0	0
기타	0	0	0	0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 (2022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실적 보고)

[표 3-32] 스톡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중복응답)(2023)

(단위: 건)

시군	계	부천시	하남시	김포시	안산시
합계	72	4	2	56	10
내방상담	2	0	0	2	0
가정방문	0	0	0	0	0
안전확인 & 심리상담	41	2	0	32	7
기관상담& 연계	5	2	0	1	2
법률지원 & 상담	6	0	2	4	0
수사상담 & 지원	3	0	0	2	1
동행지원	0	0	0	0	0
피해자지원 정보제공	4	0	0	4	0
긴급분리 & 쉼터지원	0	0	0	0	0
확인서류 발급	0	0	0	0	0
사회복지 지원 & 정보제공	7	0	0	7	0
자활지원 & 정보제공	0	0	0	0	0
임시조치 & 접근금지	2	0	0	2	0
긴급지원	0	0	0	0	0
의료정보 & 지원	0	0	0	0	0
기타	2	0	0	2	0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2023년 상반기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실적 보고)

4) 협력기관 연계

공동대응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유관 기관은 광범위했다. 가정폭력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상담소 연계 비율이 2022년, 2023년 상반기에 각각 72.8%, 50.8%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정신보건 관련 기관의 연계 비율이 높았다. 2023년 상반기에는 가정폭력 상담소의 연계비율이 다소 감소하였고, 연계하는 기관의 유형이 더 확대되었다. 아동보호기관, 노인상담센터, 장애인 관련기관, 의료 기관을 새롭게 추가하여 분류하였고, 정신보건(12.1%), 가족센터(10.1%), 노인상담센터(5.1%), 장애인 관련기관(1.7%)으로 연계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표 3-33] 협력기관 유형과 연계 건수

(단위: 건)

연도	시군	합계	가정 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보호 시설	가족 센터	정신 보건	행정 기관	아동 보호	청소년 상담 센터	노인 상담	의료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민간 협력	기타 사회
2022년	계	875 (100.0)	637 (72.8)	4 (0.5)	46 (5.3)	27 (3.1)	120 (13.7)	18 (2.1)	- -	1 (0.1)	- -	- -	- -	- -	22 (2.5)
	부천시	595	417	3	44	16	94	12	-	1	-	-	-	-	8
	하남시	222	182	1	0	3	18	6	-	0	-	-	-	-	12
	김포시	58	38	0	2	8	8	0	-	0	-	-	-	-	2
2023년 상반기	계	593 (100.0)	301 (50.8)	11 (1.9)	1 (0.2)	60 (10.1)	72 (12.1)	7 (1.2)	0 (0.0)	15 (2.5)	30 (5.1)	1 (0.2)	10 (1.7)	21 (3.5)	64 (10.8)
	부천시	198	90	2	0	22	32	4	0	1	28	0	4	12	3
	하남시	107	77	0	0	2	22	0	0	4	0	1	0	1	0
	김포시	78	37	3	1	20	3	2	0	0	2	0	3	5	2
	안산시	210	97	6	0	16	15	1	0	10	0	0	3	3	59

주. 2023년 '아동보호, 노인상담, 의료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민간협력' 구분 신설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2022년, 2023년 상반기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실적 보고).

5) 2022년의 각 시군의 공동대응팀 추진 내용 요약¹⁵⁾

가) 부천시

부천시는 공동대응팀이 가장 먼저 개소하고 운영한 지역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대형유통 시설 앞에서 민·관·경이 합동으로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통합 사례회의를 추진하는 등 공동대응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계기관들 사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매주 목요일에 폭력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였고, 사례 지원을 위한 회의(간담회, 내부 통합사례회의, 통합사례회의 등)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지원의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였다.

나) 하남시

경찰(APO)의 현장 출동 후 상담 동의율이 10% 미만이었으나 APO의 리콜 전화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위한 상담 동의율을 39.1%로 높일 수 있었다. 월 2회 지원하던 법률 상담을 월 4회로 확대하여 2022년에 총 37회, 130명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였고, 간담회 5회, 통합 지역 사회 사례회의 3회, 지역 내 상담소 방문 2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다. 공동대응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 G버스 한줄 광고, 뉴스기사, 홍보 영상 제작 및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하였다. 또한 명절 기간에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을 집중 관리하였고, 그 결과 2021년 명절 기간 대비 2022년 신고 건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김포시

여성폭력 피해 지원기관뿐 아니라 청소년 상담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사례회의를 통해 사례를 공유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폭력 재발 우려 가정에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였다.

라) 안산시

2022년 10월 지역의 경찰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12월에 공동대응팀 운영을 시작하였다. 9월, 11월에 각각 APO, 지역의 상담소와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지역 내의 심리상담 기관을 발굴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15) 이 부분은 각 지역(부천, 하남, 김포, 안산) 공동대응팀의 2022년 사업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표 3-34] 2022년 각 시군의 공동대응팀 추진 내용 요약

구분	부천시	하남시	김포시	안산시
사업기간	연중	2022.1-2022.12	2022.3-2022.12	2022.10-12
사업대상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동반가족) 및 가해자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성폭력, 데이트·스토킹 폭력 피해자 등	112 신고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112 신고된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스토킹폭력 피해자 등
추진실적	-초기 상담 및 위기개입 -피해자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전문가 연계 및 복지서비스 지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통합사례관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홍보	-공동대응팀 운영 안정화 -지역사회 협업 성과 -우수사례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구축 및 개소 -지역사회 협업 성과 -우수사례	-공동대응팀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안산단원·상록경찰(APO)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지원연계기관 발굴 -공동대응팀 운영 개시 -공동대응체계 구축 유공 포상
사업성과	-경찰(APO),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 주간 합동 근무로 피해 신고접수 시 신속한 초기 상담 및 개입, 복지서비스 연계 -112신고 피해자에 대한 긴급 대응과 사례 판정으로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기관발굴을 통한 피해자(가족) 지원	-경찰(APO),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 주간 합동 근무로 피해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초기 상담 및 개입, 복지서비스 연계(상담동의율 증가) -112신고 피해자에 대한 긴급 대응과 사례 판정으로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재발 우려가정 관리)	-피해자 관점의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보완 지점을 발굴하여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재발 우려 가정의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가정방문과 내방 상담을 통해 심리적 고통 경감 및 관계 회복 도모	-안산시-안산단원·상록경찰(APO)서간 업무협약 체결
세부 사업 결과	지역사회 협업	-연계기관 간담회 진행 간담회 5회, 통합지역사회 사례회의 3회, 기관방문 2회	-가정폭력 상담소 및 청소년 상담센터와 사례회의 및 상담 계획 수립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사례회의 및 모니터링 협업 -이동보호전문기관과 방문상담 및 통합지원 협업	-유관기관 간담회 진행 학대예방경찰(APO)관 간담회 1회, 지역상담소 간담회 1회
	법률지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피해자 및 가족, 기관 중사자 등	-법률지원 확대: 피해자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사례별 맞춤형 법률지원(월 4회)	-
	기타	-대형유통시설 주변 공동대응팀 홍보활동 진행	-홍보 한줄광고, 영상, 기사, 카드뉴스, 문자, 간행물 등 활용	-

주. 부천시, 하남시, 김포시, 안산시 공동대응팀의 2022년 사업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정리함.

3. 소결

경기도에서는 폭력 피해의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현 피해자 지원체계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공동대응팀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준비과정을 거쳐서 2021년 부천시, 하남시, 2022년 김포시, 안산시, 2023년 상반기에 파주시가 선정되었고, 하반기에는 화성시, 과천시, 오산시가 추가로 선정되어 현재 8개의 시군에서 공동대응팀을 운영 및 운영이 확정된 상황이다. 8개의 시군의 개소 시점, 인력규모, 사무실의 규모나 설치된 장소(시청 내부, 별관, 외부 등)는 시군의 상황에 따라 상이하다.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은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 학대예방경찰관(APO)으로 구성된다. APO는 112 신고 사건을 1차적으로 정리하고, 동의한 사건에 대해서는 정리한 내용을 상담사에게 전달한다. 상담사는 동의한 사건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상담기록지를 작성하고 심층적인 상담이나 기타 다른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연계한다. 통합사례관리사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발굴하거나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폭력 피해자의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뿐 아니라 생계비, 의료비 등 기타 복지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삶 전반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

2022년과 2023년 상반기까지의 공동대응팀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3개의 시군(부천시, 하남시, 김포시)의 2022년 지원 인원은 총 3,773명이었고, 4개의 시군(부천시, 하남시, 김포시, 안산시)의 2023년 상반기 지원 인원은 총 6,120명이었다. 지원 대상의 특성은 성별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3:1 정도로 나타났고, 연령대의 경우는 40대, 30대, 5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원사례의 폭력 유형은 가정폭력이 96~99%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혼인 상황의 경우는 ‘기혼’ 70% 수준, ‘미혼’ 13~15%, ‘사실혼’ 5~7% 수준이었다. 성폭력에 대한 지원은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2022년에 비해 2023년 상반기에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스톡·데이트폭력 지원사례가 성폭력 지원사례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주요 지원 내용은 안전 및 심리지원(60~70%), 전문기관 연계(11~13%), 법률상담(4~5%) 순이었으며, 이 이외에도 긴급조치 및 지원, 복지지원, 가정방문 등이 제공되고 있었다. 지원 폭력의 유형 분류는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스토킹, 기타’로 하고 있었으나 가정폭력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가정폭력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지원 내용, 연계기관 등도 가정폭력을 기반으로 구조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공동대응팀을 구축을 시작하고 운영한 지 2~3년차에 접어들면서 공동대응팀 운영 시군도 8개로 확대되었다. 공동대응팀의 지원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도 확장해나가면서 공동대응팀의 기본체제와 역할 등을 정비해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V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 현황과 과제: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분석
3. 소결

1. 조사 개요

가. 서면조사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이 설치되어 운영 중인 시군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동대응팀 업무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를 위한 질문지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성하였으며, 설문지를 이메일로 전송한 후 회신 받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를 위해 도의 협조를 받았다. 도의 관련 사업 담당자로부터 해당 시군의 업무 담당자의 연락처를 제공받았고, 도의 업무 담당자가 해당 시군의 공동대응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주었다.

조사는 7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했으며,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않은 경우 다시 연락하여 질문지 회신을 요청하였다. 조사를 위한 질문지는 공동대응팀 관련 행정자료, 공동대응팀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관련 연구(김주미 외, 2019; 강은애 외 2020) 등을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공동대응팀의 조직체계, 업무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공동대응팀 소속 인력들이 자신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공동대응팀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른 기관들과는 어떻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질문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1] 주요 조사 내용(서면조사)

구분	내용
공동대응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대응팀 구축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 - 공동대응팀 구축 시 지역사회 반응 등 - 공동대응팀의 강점과 한계 - 공동대응팀의 확대를 위한 방안
공동대응팀 내에서 자신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대응팀 내에서 자신의 주요 업무(기본 업무, 추가되는 업무에 대한 역할 분담 방식 등) - 업무수행 시 어려운 점 -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 - 업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이나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
폭력피해지원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폭력피해 지원 관련 인프라 구축정도 -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방식 - 공동대응팀의 차별화된 특성 및 역할 -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대응팀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해 필요한 부분 - 기타 공동대응팀 운영에 대한 의견

서면조사 참여자는 모두 23명이었다. 직군별로 보면, 경찰관 9명, 상담사 7명, 통합사례관리사 7명이었다. 연령은 20대 1명, 30대 8명, 40대 6명, 50대 6명, 60대 2명으로 20대에서 60대까지 분포되어 있었지만, 30대~50대의 비중이 높았다. 성별은 여성 20명, 남성 3명으로 여성이 다수였다. 직군별 성별 및 연령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2] 서면조사 응답자 특성(개요)

(단위: 명)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23	20	3
연령	20대	1	1	0
	30대	8	6	2
	40대	6	5	1
	50대	6	6	0
	60대	2	2	0
직렬	경찰관	9	6	3
	상담사	7	7	0
	통합사례관리사	7	7	0

[표 4-3] 서면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서면조사 참여자	직렬	성별	경력		연령
			유사기관 근무경력	유사한 업무 수행 경력	
1	경찰관	남성	없음	1년 6개월	40대
2	상담사	여성	2년 6개월	15년	50대
3	상담사	여성	4년 6개월	2년 1개월	40대
4	통합사례관리사	여성	2년	2년	20대
5	통합사례관리사	여성	1년 11개월	9개월	50대
6	상담사	여성	12년 1개월	7년 11개월	60대
7	경찰관	남성	7년 1개월	없음	30대
8	경찰관	여성	없음	없음	30대
9	경찰관	여성	4년 2개월	1년 5개월	30대
10	상담사	여성	10년	18년	60대
11	상담사	여성	10년	4년	50대
12	상담사	여성	15년	7년	50대
13	경찰관	여성	5년	없음	30대
14	경찰관	남성	1년 8개월	1년 8개월	30대
15	통합사례관리사	여성	없음	5년 1개월	50대

서면조사 참여자	직렬	성별	경력		연령
			유사기관 근무경력	유사한 업무 수행 경력	
16	통합사례관리사	여성	10년	10년	30대
17	상담사	여성	3년	3년	50대
18	경찰관	여성	8년 7개월	5년	30대
19	통합사례관리사	여성	2년 7개월	2년 7개월	40대
20	통합사례관리사	여성	9년	2년	40대
21	통합사례관리사	여성	3년 9개월	3년 9개월	40대
22	경찰관	여성	없음	없음	30대
23	경찰관	여성	없음	10월 2개월	40대

나. 면접조사

서면조사는 공동대응팀 소속 인력을 중심으로 진행했다면, 면접조사는 도 및 시군의 공동대응팀 업무 담당자, 공동대응팀 소속 인력, 지역의 여성폭력 및 기타 유관기관 관계자, 공동대응팀의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 등 다양한 위치에서 공동대응팀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면접조사는 7월 6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하였다. 섭외 과정에서 일정이 여러 번 변경되면서 조사 기간이 길어졌고, 시간 및 거리상의 제약으로 대면 면접과 비대면 면접(Zoom 활용한 화상면접)을 병행하였다. 면접조사의 주요 내용은 서면조사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일부 질문은 대상의 지위나 역할에 따라 다르게 구성하였다.

[표 4-4] 주요 조사 내용(면접조사)

구분	내용
공동대응팀 구축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대응팀 구축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 - 공동대응팀 구축 시 지역의 유관기관들의 분위기 - 공동대응팀 구축 시 기대나 우려 등 - 공동대응팀 운영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소속 기관에서의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수행하는 주요 업무 - 공동대응팀과 협력하는 지점 -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
폭력피해지원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폭력피해 지원 관련 인프라 구축정도 - 공동대응팀 구축 이후 변화된 점(지역의 폭력피해지원관련 인프라, 폭력 피해 지원 업무 등) - 공동대응팀에 기대하는 역할이나 지원 범위 등 -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공동대응팀 운영에 대한 의견

면접 참여자는 총 12명이었다. 공동대응팀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4명, 공동대응팀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 2명, 지역의 상담소 및 기타 유관기관의 관계자 6명이었다. 성별은 모두 여성이었고, 연령은 30대 1명, 40대 4명, 50대 5명, 60대 2명이었다.

[표 4-5] 면접조사 참여자 현황

(단위: 명)

면접조사 참여자	직위	성별	공동대응팀/폭력피해 지원 관련 경력		연령	기타
			현 근무지/기관 경력	유사기관 경력		
A	주무관	여성	1년 10개월	18년 9개월	50대	개별
B	주무관	여성	3년 4개월	없음	40대	집단
C	주무관	여성	3년 5개월	7년 9개월	40대	집단
D	주무관	여성	1년	12년 1개월	30대	집단
E	팀장	여성	1년	20년	50대	개별
F	변호사	여성	2년 5개월	6년 3개월	40대	집단
G	변호사	여성	8개월	2년 2개월	40대	집단
H	팀장	여성	14년	없음	50대	개별
I	소장	여성	17년 8개월	없음	50대	집단
J	소장	여성	22년 3개월	없음	60대	집단
K	소장	여성	4년 5개월	1년 3개월	60대	집단
L	소장	여성	7년	20년	50대	집단

2. 조사 결과 분석

가. 공동대응팀 구축과 피해자 지원체계의 확대

1) 경찰 신고 사건에 대한 신속한 개입과 피해자 지원 강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 상황에서 경찰의 신고 사례는 증가해왔고, 신고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나 피해자 지원의 한계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유형의 기관들이 존재하지만 각각의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이 한계가 있고, 폭력 상황에 대한 이해만으로 폭력이 재발할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신고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다음 날 콜백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지원을 안내하는 것은 공동대응팀의 주요한 임무이기도 하다. 동의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개입이 불가하지만, 동의한 사례의 경우 초기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관,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사가 한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신속하게 연계하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음. 가정폭력의 특성상 피해자를 보호하는 임시조치 등 제도에 대하여 생소할 수 있는데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보호체계에 대하여 바로 전달 받을 수 있으며 경찰관 또한 피해자 상담을 더욱 신속히 연결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에 효과적임. (서면조사 참여자 14)

저희는 신고하고, 익일 바로 연락. 무슨 일이 있어도 익일에 연락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전에는 익일 날 연락이 안 되죠. 사건 신고 처리하면 지구대가 나가고, 그 다음 날 APO 시스템에 들어와요. 그럼 경찰은 또 내부 시스템을 거쳐서 자기네들 말로 합심 회의. 수사 과장님, 여청과 과장님 등 여러 명이 모여서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를 보니 딱 경찰이 잘 개입했냐, 안 했냐 그거를 하더라고요. 피해자에게 뭐가 가장 필요한지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 수사관으로서 개입 절차를 잘 지켰는지 이고. 그분들이 보는 게 피해자의 심리나 피해자의 상태보다는, 싸움이 일어났어, 어떻게 잘 해결했어. 그래서 임시 조치한대, 안 한대. 그런 거죠. 경찰서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APO들이 일이 워낙 많으니까. 오늘 모으고, 내일 모으고, 모레 모아서 상담소로 보내죠. 근데 그 보내지는 시점이, 그리고, 상담을 원한다는 사람만 가는 거죠. 근데 대부분 원하지 않는대요. 동의 안 하니까. 상담소도 오자마자 바로 전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주가 가고, 3주가 가고. 그럼 이제 전화해 보면 불통이고. 싸움 난 지가 언젠데 이제 전화하면 그 게임은 끝이고. 그래서 즉시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죠. (면접조사 참여자 A)

공동대응팀을 구축하게 된 좀 더 실질적인 배경으로 ‘경찰의 요청’을 들 수 있다. 경찰에 신고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즉각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데, 경찰 내에서 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과 가까운 곳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상담인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실제로 경찰에서 시군 내부에 상담사를 배치하거나 경찰과 밀착해서 상담 업무를 진행해줄 인력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공동대응팀의 참조점이 되었던 ‘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의 경우도 현재의 형태로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경찰의 요청이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 된다.

현장에서 이해하기는, 화성의 경우 경찰 측의 요청에 의해서, 경찰에서 112에 신고된 상담을 하면서 처음에 그 초기에 대응을 빨리하겠다는 취지였던 걸로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경찰의 예산상 상담사를 두기가 어렵다고 해서, 시의 지원을 경기도나 시의 지원을 받아서 상담사 지원을 받겠다는 게 목적이었으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면접조사 참여자 I)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었고, 경찰 신고사례도 증가하고 경찰에서도 폭력 피해 사건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사건 발생 상황에서 경찰의 사건 판단이나 초기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공동대응팀을 구축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좀 더 빠르게 필요한 조치들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변화하는 정책방향에 대한 지역의 피해자 지원기관들의 불안감

공동대응팀 준비과정에서 지역의 피해자 지원기관 관계자, 시군의 관련 사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공동대응팀의 구축 배경과 필요성, 주요 기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지역에서 오랜 기간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상담소에서는 새롭게 구축되는 피해자 지원체계인 공동대응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동안 경찰과 일정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면서 피해자 지원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었고, 경찰에게 신고된 사례를 연계 받는 데에도 별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다. 지역의 상담소나 보호시설은 자발적으로 상담소를 찾아오거나 보호시설 입소를 문의하는 피해자도 있지만, 경찰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 공동대응팀이 구축될 경우, 공동대응팀을 거쳐서 사례를 연계 받게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피해자 연계과정에서 또 하나

의 절차가 추가되는 형태가 되는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었다. 그리고 지역의 상담소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피해자 지원기관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상담소에서 지원하던 사례가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은 아니었다. 지역의 피해자 지원기관들과 어떠한 점에서 차별성을 갖게 될 것인지,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등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며 반대의견을 표출하기도 한 것이다.

기존에 경찰에서 직접 연계를 받던 기관들이 공동대응팀을 통해 연계를 받게 되면서 초기에 이에 대한 저항이 있었음. (서면조사 참여자 1)

피해자가 다이렉트로 저희한테 연결이 되고 또는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바로 저희한테 연계를 해주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돼서 원만하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동대응팀이 왜 생기나, 콜센터 역할을 하는 곳이 왜 생길까, 그것도 1366처럼 야간에 하는 긴급지원센터도 아니고, 주중에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심층 상담은 안 하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상담을 그대로 흡수해서 하는 거예요. 전혀 업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면접조사 참여자 J)

시청 여성정책과로부터 말이 들렸고, 대체적으로 반대 의견을 계속해서 냈었어요. 그래서 좀 부정적이었고, 옥상옥이 될 거라는 것, 중복된 면도 많을 것이고. 관 주도로 되고 있는. 지역 상담기관의 역할들이, 실적 경쟁이라고 해서 안 되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반대하는 부분들이 많았죠. (면접조사 참여자 K)

지역의 상담소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관들이 설립되면서 기존의 피해자 지원기관들의 설 자리가 점차 줄어들 수 있다는 데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 상담소의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에 시군에서 받던 예산이 감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 상담 업무 등을 통합한 형태의 피해자 지원기관들이 구축되면서 기존의 피해자 지원기관의 운영에도 적지 않은 변화나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쉼터 등 어느 정도 기관들이 있거든요. 지자체가 탄실하지 않은 데서는 도에서는 자꾸 밀고 있는 상황이고. 시비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오는 거죠. 추가 인건비는 시가 7 부담하고 도가 3 부담하는 형태인데, 추가로 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시에서는 죽어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기관이 생기면서 결국은 이렇게 가지치게 되는 부분들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이러면 또 이 분야에 이거만큼 실적 경쟁 같은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피치 못하게 실적이 주는 거에 대한 공포감을 갖게 되고. (중략) 저희 쪽 인력이 보강되는 게 아니라 관 주도의 기관들이 생겨서 예산이 또 들어가고 있으니까 저는 그 예산도 중복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세워진 기관에서 지금까지보다는 좀 다른 방향

으로 효율적으로 좀 배분되거나 좀 역량 강화하는 데로 들어가거나 하는 데로 갔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또 우려하는 거는 이런 게 생기면서 정부의 기초나 여가부 폐지, 이런 폐지 문제 이런 것처럼, 지난번에는 뭐 통폐합 이런 수요 조사까지도 온 적이 있었거든요. (면접조사 참여자 K)

저희가 원하는 건 그런 거죠. 정말 여성 운동을 했었고, 여성주의 시각을 가지고 일을 해서 막 열심히 대응을 했는데, 원스톱이 필요해, 그리고 나니까 해바라기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해바라기를 뽑는데 보니까 상담심리를 전공해야 돼. 병원 밑에다가 생겼어요. 1366은 원래 있었나, 그러다가 또 뭐가 생겨야 돼. 뭐가 생기니까 또 요새 또 스토킹 피해자 지원센터를 만든대요. 자꾸 그러니까 저희는 뭐냐 하면 저희가 자발적으로 생긴 단체잖아요. 저희에게 조금 더 인력을 주거나 예산을 좀 더 해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주면 되는데, 저희는 그냥 업무가 증가가 되면서 인력을 주거나 예산의 증가는 없는 거예요. (면접조사 참여자 I)

변화하는 정책방향, 새롭게 구축되는 피해자 지원체계는 기존에 피해자 지원업무를 수행했던 기관들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기관 운영이나 업무 수행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동대응팀이나 지역의 상담소 등은 모두 ‘피해자 지원’이라는 공통의 목적과 임무를 가지고 있다. 서로 다른 위치, 상황, 경험 등을 가지고 있지만, 폭력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은 같다. 각각이 갖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 지원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공동대응팀의 주요 업무와 강점

1) 민관경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신고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초기 대응

공동대응팀의 가장 큰 강점은 모든 신고사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의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만, 동의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동대응팀에서 빠르게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담소나 보호시설 등에 문을 두드리는 피해자가운데 모든 경우가 경찰 신고를 전제하지는 않으며, 경찰에 신고된 사건의 피해자가 모두 피해자 지원기관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된 모든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일반사례와 통합사례(위험사례)를 분류하여 사례별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은 피해의 재발과 예방을 위해 중요한 일이다.

처음에 근접하는 대상 자체가 다르죠. 저희는 112 신고 사건을 담당하죠. 상담소는 112 신고 사건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찾아오는 자발적 내담자들이죠. 나중에 보면 물론 교집합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112 신고된 사건들이 다 상담소로 가지는 않잖아요. 거기에서 계속 사각이 생긴다. 그래서 이 사각을 최대한 막는 거, 그래서 복합 피해자분들한테는 사실은 또 다르게 여기 상담소는 이 피해자가 발생하면 이 사례를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하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역사회의 거점에서 공동대응팀과 연계하여 처리하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죠. (면접조사 참여자 A)

공동대응팀의 초기 대응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상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담을 통해 피해 상황, 필요한 지원, 후속관리(모니터링)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되는데, 초기 대응을 위한 상담의 범위나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일괄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공동대응팀에서는 초기 상담, 그리고 상황에 따라 2~3회 정도까지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으로 연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의 상담소와 업무의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한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니 초기 상담을 뭐 하러 이렇게 중복적으로 합니까, 그래서 이걸 중복 예산이라는 것을 충분히 계속 저희는 얘기하고 있고. 차라리 심층 상담을 해서 그쪽으로 온 상담은 거기서 마무리하고, 우리가 온 건 또 우리가 하고. 저희는 자발적 내담자도 많지만 또 간혹 또 112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직접으로 오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분리를 해서 차라리 하면 좋겠다, 왜 이렇게 내담자들이 피곤하게 아까 한 얘기 또 하라고 하냐고 그러고. 거기는 어디냐, 그러고. 상담소를 연계하면 시청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도 저희도 또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차라리 거기에 역량을 키워서 심층 상담까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본인들의 역할이 업무가 그게 아니래요. 처음 세팅할 때부터. 초기 상담만 하는 곳이지, 간혹 경찰관이 거기 상주를 하니깐 경찰관이 동행을 요청하면 동행 상담. 그 또한 우리도 하고 있거든요. 경찰관이 요청하면 다시 동행 방문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똑같은 일을 거보다 우리는 조금 더 심층상담을 더 많이 하고 훨씬 상담 사례 건수도 더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과연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또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면접조사 참여자 J)

공동대응팀 내에서도 현재의 초기 상담 시스템에 대해 고민하기도 한다. 자체적인 상담인력과 상담 공간을 보완하여 다른 상담소로 연계하지 않고 심층적인 상담까지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하는데, 이미 피해 상황을 어느 정도 이야기하고 상담사와 피해자 사이의 어느 정도 라포(rapport)가 형성되는 시점에서 다른 기관으로 연계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부담

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문상담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고민은 더 클 수 있다.

자체적인 상담인력과 상담 공간이 필요해 보임. 현재는 1명의 상담사가 일차적인 상담에 그치고 또다시 다른 상담기관으로 연계를 보낸다는 한계가 있음. 상담 받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같은 말을 두, 세 번 중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게 됨. 처음부터 끝까지 상담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되면 다른 상담소로 연계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임. (서면조사 참여자 14)

방문상담 유도를 요즘에 많이 하는 편이에요. 처음에는 많지 않았는데 오시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 있는 분이 있어요. 아이가 케어가 필요하다면 저희는 시터를 불러서 아이를 한 두 시간 정도를 봐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럼 시터 비용을 저희가 지급할 수 있거든요. (면접조사 참여자 D)

공동대응팀의 상담 수준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공동대응팀의 기본적 기능이나 앞으로는 운영방향과 연결되는 문제이다. 공동대응팀이 초기 대응을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상담 범위나 방식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원하는 지원의 내용이나 방식을 가장 우선 시할 때 어떠한 상담 형태가 적절할지를 중심으로 현재의 상담 체계에 대해 앞으로의 방향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2) 법률상담과 공공자원의 활용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는 법률자문이 필요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피해자에게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법무부의 국선변호사 제도나 여성가족부의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이용하여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등을 제공한다. 현재 공동대응팀에서도 법무부의 법률홈닥터 제도를 활용하여 기초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소송지원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초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사건 해결 방식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성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 국선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스마일센터라든가, 해바라기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피해자 보호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같은 경우는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피해자 의사에 의해서 처벌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공백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이분들에게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분들은 가정 안에서 사생활, 그러니까 가정 같은 경우는 사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법권이 이 과정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됐던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공동대응팀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면접조사 참여자 G)

공동대응팀 법률상담의 경우, 1주일에 한 번씩 해당 변호사가 공동대응팀 사무실에 방문해서 2~3시간 정도 상담을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에게 30분 정도의 시간이 할당되는데, 상담사나 통합사례관리사가 피해자의 상황이나 정보를 정리하여 변호사에게 미리 전달하고, 약속한 일시에 변호사와 만나서 법률상담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이혼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혼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 등에 대한 추가적인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이 또 계속 일어나서 추가 상담이 들어온다기보다는 제가 이혼 절차를 안내를 해드리면 실제로 이혼을 진행을 하시면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상담이 들어오기도 해요. (면접조사 참여자 F)

저는 뭐 추가적인 상담을 진행을 한 적은 사실은 여러 번 있기는 있어요. 제가 상담 시작한 지 8개월 정도 되었는데, 가정폭력이 반복이 돼가지고 상담을 요청한 경우는 없었고요. (면접조사 참여자 G)

공동대응팀의 법률상담지원은 지역의 상담소에게도 개방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의 변호사풀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군에서 연계한 변호사 인력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지역의 상담소에서도 반가운 일일 수 있다. 실제로 내담자를 연결하여 법률상담을 받도록 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이나 만족도는 상이했다.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던 경우도 있었고, 짧은 상담 시간, 변호사의 상담방식 등으로 만족도가 낮았던 경우도 있었다.

저희는 흉터는 조금 혜택을 보고 있는 측면이긴 한데, 왜냐하면 이게 지역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에서 솔직히 성평등적이고 깨어 있는 그런 변호사나 법률가를 만나기가 되게 어렵고, 적어도 흉터에 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이거를 저희가 질문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근데 그거는 피해자들이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가, 괜찮았나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괜찮았다. 이게 그래도 좀 많이 들려서. (면접조사 참여자 L)

계속 활용하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또 내담자 중에는 그런 게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조건 연계가 아니라 이런 제도도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 받아보시길 원하신다면 연계해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중략) 보내기는 하는데 상담을 받고 오신 분들의 만족도는 낮아요. 거기서 2차 피해를 겪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똑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아주 짧게 매주 0요일에 30분, 어떤 때는 워낙 많은지 전화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변호사분들이, 이거는 되지도 않아, 이런 거 가지고는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 상처를 받는 거죠. (면접조사 참여자 K)

지자체의 공공자원이기도 한 법률흉터제도도 연계하여 좀 더 많은 피해자 지원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역의 상담소에서도 자문 변호사가 있어서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기관마다 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개별 기관에서 자문변호사를 섭외하고 도움을 받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공동대응팀의 법률상담을 지역의 상담소에 개방한 것은 공공의 자원을 공유하고, 지역의 상담소와 일정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공적 시스템의 접근성과 신속한 복지지원 연계

공동대응팀은 민·관·경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건 발생 상황부터 복지지원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공동대응팀의 통합사례관리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정보시스템)에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보장급여 수급 여부 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지역상담소는 이 사람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상담소에서는 지역 내 주민생활센터의 통사들에게 연락을 취하죠. 공문을 보내서 이 사람에 대한 재산이나 이런 것들 동의를 쓰고 조회해 달라고 보내면, 거기서 보고 조회해서 다시 공문으로 오는 형태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휴가도 있을 수 있고, 주말도 있을 수 있죠. 공동대응팀은 여기서 바로 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욕구 파악이 훨씬 쉽죠. 그래서 행복이음을 쓰는 법, 어떻게 입력하는 지, 이런 것까지 지침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면접조사 참여자 A)

공동대응팀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직접 접근하여 사례대상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지원을 연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찾고 확인해야 하는 일들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 이로 인해 신고자/피해자의 만족감을 높여주기도 한다.

기존 지원 기관은 피해자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보만 제공되어 피해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공동대응팀의 경우 정보 뿐 아니라 동행 및 연계를 통해 직접 지원하며 피해자의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함. (서면조사 참여자 21)

기존 학대예방전담경찰관들이 경찰서에서 해당업무를 수행했을 때는 주로 피해자의 안전확인에서 모니터링이 중요되었다면 공동대응팀에서는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가 함께 근무하고 있기에 해당가정의 근본적인 문제 파악 시, 그 즉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유관기관에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임. 경찰에서는 해당가정의 복지수급 상황이라든지 지자체를 방문한 상담내용까지 확인 할 수 없지만 통합 사례관리사를 통하여 현재 복지수급 상황과 가능한 서비스들을 안내 및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에게도 큰 만족감을 주고 있음. (서면조사 참여자 7)

지역의 상담소 등에서도 피해자의 삶 전반을 파악하여 적절한 복지 지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경기도에서는 ‘긴급복지지원(무한돌봄사업)’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¹⁶⁾ 위기 상황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등이다. 지역의 상담소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파악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내담자들에게 연결해왔지만, 공동대응팀은 이러한 연계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나 절차 등을 조금 단축시켜줄 수 있다는 점이 차별화된 점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 지원 연계도 상담사나 통합사례관리사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지, 지역의 사회복지 인프라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6) 경기도 경기주거복지포털,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무한돌봄사업) (housing.gg.go.kr/html/24404.do) (최종검색일, 2023.9.11.)

4) 사례 판정과 위험사례 관리

사례판정과 위험사례관리는 공동대응팀의 또 하나의 핵심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에 신고된 사건은 다음날 APO 시스템에 모두 입력되고, 신고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1차적으로 사건을 판단하거나 상담사 및 통합사례관리사와 사례회의를 통해 사건의 지원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상담사나 통합사례관리사가 초기 상담을 진행한 후, 필요시에는 다시 내부사례회의를 통해 사후관리 여부를 결정한다.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추가적인 개입(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례로 분류하여 이후 1~2회의 모니터링을 추가하게 된다.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이후의 상황을 다시 확인하고 관련 제도를 다시 안내하게 된다.

기존에는 안전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에서 끝났다면 현재 공동대응팀은 위기지원에 필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실무자(경찰, 사례관리사, 상담사) 구성으로 긴급 안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긴급 지원 뿐 아니라 가구별 문제점 파악, 관계개선, 원인 해결 등으로 폭력의 원인을 찾고 그 해결책에 대한 지원과 제시를 통해 폭력 예방적 접근대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 접근의 기능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함. (서면조사 참여자 20)

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는 폭력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폭력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기본 축으로 한다. 이러한 피해자 지원체계의 기본적 구조에 따라 공동대응팀의 경우도 초기 대응 강화와 위기사례 관리를 중요한 핵심 업무로 설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신고된 사건에 대해 사후관리를 시도하기는 어렵지만, 동의한 사건의 경우 좀 더 깊이 사건에 개입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안전상태를 확인한다는 점은 피해자 보호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5)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 기관 발굴

시군에서 운영하는 팀이라는 점에서 공동대응팀이 유관기관들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데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서 좀 더 믿음을 갖고 협조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대응팀이 연계하고 있는 기관은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 가족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행정기관, 아동보호시설, 노인상담기관, 의료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민간 기관 등으로 다양했다.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지원기관(해바라기센터, 청소년성폭력 상담소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관, 지역의 통합돌봄과,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청의 아동보호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상담센터 등 (서면조사 참여자 5)

그리고 다양한 유관기관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관련 기관의 부족함을 확인하기도 했다. 장애인 피해자의 비율도 적지 않은데, 장애인 관련 지원기관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또한 지원사례의 연령대를 보면 30~40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10대와 20대의 비중도 적지 않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지원에 대한 고민도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관련 시설(쉼터 등)이 부족함. (서면조사 참여자 1, 5, 7, 9)

대상자가 청소년인 경우 청소년 쉼터연계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연계 이외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이 필요함. (서면조사 참여자 10)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아동, 장애인, 쉼터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 기관의 증가가 필요하다 판단됨. (서면조사 참여자 15)

다양한 유형의 기관들과 협력관계를 폭넓게 구축하면서 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민간기관 까지도 확장하기도 한다. 민간 상담소의 경우 유료 상담기관들이 있는데, 유료 기관으로 연계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상담센터 등까지 연계를 확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민간 상담소 등과 MOU를 체결하여 재능기부 형태로 지원을 받고 있기도 한데, 이러한 형태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초기 기관 연계의 경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연계하였음. 차츰 공동대응팀이 자리 잡으면서 민간상담소를 발굴하여 필요 시 연계하고 있음.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민간기관 연계가 필요하며 특히 아동상담,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 유료로 진행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자원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서면조사 참여자 16)

총사 업무에 기관 발굴이 있어요. 기존에 구축이 된 기관이 아니라 새로 민간 상담소나 이런 심리상담소를 발굴하려고 하면 우리가 연계했을 때 따로 지금 현재 보상 체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부를 거의 많이 하세요. (면접조사 참여자 D)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자원 발굴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민간 자원을 좀 많이 발굴을 해놓은 상태이긴 해요. 근데 그게 유지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뭔가 기관이 발굴이 되면 MOU를 맺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라도 MOU를 맺어서 위촉을 하든 뭐 다른 방법으로 뭔가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자원 리스트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구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면접조사 참여자 B)

피해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통합적 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과 연계가 중요하다. 한 기관에서 모든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러한 한계는 공동대응팀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다.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확장해갈 필요가 있는데, 일부 민간 기관의 경우 피해자 개인의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연계가 쉽지 않다. 연계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에 제한할 것인지, 민간영역의 자원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다. 공동대응팀 운영의 실재와 쟁점

1) 가정폭력 중심의 사건 처리 및 연계

공동대응팀을 운영 중인 시군의 지원 실적을 보면, 가정폭력 사건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가정폭력 신고 사건의 비율이 높고, 가정폭력 사건의 재발관리 및 예방 차원에서 APO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APO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초기의 모델들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구축되었기 때문에 가정폭력 사건의 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명칭 자체는 가정폭력 성폭력 공동대응팀이지만 가정폭력이 99%예요. 그리고 APO 자체가 가정폭력 상담이기 때문에, 성폭까지 하게 되면 성폭 경찰관이 또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성폭은 가폭이랑 약간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경찰 내부적으로 종결을 하거나 수사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폭력이 99%라고 보시면 돼요. (면접조사 참여자 D)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 경험이 많고, 가정폭력 관련법을 적용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많기 때문에 가정폭력과 일정한 관련이 있으면 가정폭력 사건으로 규정하여 처리하는 경향도 있다. 데이트폭력으로 접수를 했으나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확인하게 되어 ‘가정폭력’ 사례로 재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 신고 사건 가운데 가정폭력 사건이 다수를 차지하고, 공동대응팀 APO가 가정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가 다수이기도 하지만, 가정폭력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많은 경향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에 ‘사실혼’ 관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가정폭력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증가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에서는 이거를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으로 넣으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폭으로 다 넣어버리세요. 그러면 임시 조치나 이런 것들도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정폭력 사건이 더 늘어나는 거죠. 사실혼 때문에도. (면접조사 참여자 C)

지금까지의 운영 공동대응팀 제도의 운영 상황을 본다면 성폭력은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4건, 7건 수준인데. 그러면 이 이름 자체를 여기서는 삭제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 인력들을 어떻게 갈 것인가. (면접조사 참여자 J)

공동대응팀이 참고한 모델인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나 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의 경우도 가정폭력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스토킹범죄, 디지털성범죄, 데이트폭력 등 폭력의 양상이 변화되고 이에 따라 피해자 지원체계도 새롭게 구축되거나 정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공동대응팀의 지원 대상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이외에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기타 폭력 등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2) 광범위한 지원범위와 앞으로의 방향성

공동대응팀의 처음 출발은 안전 확인 및 기초상담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현재 피해자 지원 내용을 보면 내방상담, 가정방문, 상담기관 연계, 법률상담, 동행지원, 보호시설 연계, 취업기관 연계 등 지원내용이 광범위하다. 지역의 개별 피해자지원기관과 지원 내용이 다소 상이하지만, 초기 대응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 공동대응팀이 경찰,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라는 각자 다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해왔던 직군들이 결합된 팀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넘어서 지원범위가 확장되기도 하는데, 앞으로의 공동대응팀의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데 지원범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법률지원의 경우 공동대응팀은 기초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재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법률구조(소송지원 등)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공동대응팀 지원사례 가운데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병원 입원 치료 절차를 진행한 경우가 있었다. 알콜 의존도가 높았던 어머니의 사례가 있었는데, 공동대응팀에서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해 병원 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입원 치료 절차를 진행하여 치료를 돕기도 했다.

입원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함. 자녀를 방임하는 알콜중독 어머니의 사례가 있었는데, 어머니를 알콜중독 치료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를 지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정신질환 등 입원이 필요한 가정폭력 가해자의 경우도 사례회의나 내부회의 등을 통해 입원치료 절차를 진행함. (서면조사 참여자 1)

의료지원을 포괄한다면 의료지원 연계의 방식이 될 것인지, 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OO시군에서는 공동대응팀에 의료비 예산을 일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존에 상담소에 지급했던 금액 중 일부를 공동대응팀 의료비로 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법률, 의료. 이제 의료도. 의료비 예산이 저희 OO만원인데 시에서 OO만원을 공동대응팀에 주라고 했어요. 공동대응팀에도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받은 건 OO이예요, 근데 우리 OO쓰고, 일부는 공동팀에서 쓸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의료 지원도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도 의료 지원하고 여기도 의료 지원 해. 중복 사업이잖아요. (면접조사 참여자 J)

지원범위는 포괄하는 폭력의 유형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지원이 다수를 이루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제도가 포괄하는 주민등록열람제한, 긴급분리, 자녀나 기타 가족구성원에 대한 지원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동대응팀을 안정적으로 구축해나가는 과정에서 지원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지원사례를 포괄하고 공동대응팀 실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앞서에서도 언급했듯이 다양한 폭력 유형을 포괄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인력, 예산, 운

영방향 등과 연결된 문제이다. 그리고 지원범위뿐 아니라 지원방식까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법률지원의 경우 소송지원까지 확대할 것인지, 현재의 법률상담지원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의료지원의 경우도 연계지원이 아니라 직접 지원까지 고려할 것인지 등 지원범위와 지원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방향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5개의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31개 시군 모두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대응팀 운영 3년차가 되는 시점에서 공동대응팀의 기본적인 기능과 방향성 등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 상담 실적 정리와 사례 공유

공동대응팀의 실적을 정리하고 사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상담 통계 시스템이 아직 갖춰져있지 않기 때문에, 상담사나 통합사례관리사들은 실적 정리 작업 시 일일이 수작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일단은 행정적으로는 통계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사업이 시작된 부분이라, 정보화 시스템 부족으로 인해서 일일이 수작업, 현장에서 수작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면접조사 참여자 A)

중앙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구축이 가장 시급하며, 재발관리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서면조사 참여자 20)

경찰과 공동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서류 및 행정사항 소통에 이원화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음. 향후 일원화된 행정망 등 요구됨. (서면조사 참여자 16)

경찰 APO시스템과 상담 실적 기록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지 않아서 경찰에서 접수한 사례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경찰의 메모에 의존해야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사례회의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각자 기록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회의가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사건에 대한 정보가 종합적으로 파악되지 않거나 서로 충분히 공유되지 않기도 한다. 조사 참여자들은 사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면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가 더 풍부해질 수 있고 업무 수행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한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통합정보시스템의 필요성을 느끼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만 예산을 확보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에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이다.

4) 동의 과정의 어려움과 비동의 사건 처리

추가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신고자/피해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한다. 동의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입이나 조치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가 추후 재신고 되고 다시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될 가능성이 있어도 업무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례에 개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답답하거나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가정폭력 신고 후 사건처리 진행 건은 행정 처리로 연결되지만 사건 처리가 되지 않는 신고 건, 가구가 대부분임. 그에 대해 지원, 상담, 개입 등이 내담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 어떠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폭력의 재발을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재발은 이전의 신고 내용보다 폭력이 점점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음. (서면조사 참여자 20)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담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의 상담소로 연계된 사례 가운데 상담을 위해 전화를 했는데, 상담을 불편해하거나 꼭 해야 하는지 다시 묻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의무로 오시는 느낌에 의무감이 좀 많이 깔려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처음에 전화로 연계 의뢰서를 받고 처음에 전화를 해도, 이거 꼭 해야 돼요, 동의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라고 하면 '동의를 하긴 했는데요. 이거 꼭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기도 하죠. (면접조사 참여자 K)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시 반드시 동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그리고 동의과정에서 암묵적인 강요가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동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도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동의 비율이 신고된 사건의 30~4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발위험성이 있는 가정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¹⁷⁾

경기도에서는 비동의 사건에 대한 처리 방침을 고민해왔고, 개인정보 비동의자 정보관리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자문결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명처리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고, 이에 따라 통계작성 시 가명으로 처리하고 있다.

17) 2022년 운영 시군의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OO시의 경우 이전에는 상담 동의율이 10% 미만이었으나 APO의 리콜 전화를 통해 상담 동의율을 30% 수준으로 높일 수 있었다고 보고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2. 4.]

폭력 피해 상황이나 피해 경험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이며, 피해자 지원은 개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공동대응팀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이에 대한 처리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라. 공동대응팀 운영상의 어려움과 개선방향

1) 관리자의 부재 등 시군별 인력 구조의 차이

공동대응팀의 조직체계 상으로 여성관련업무부서의 팀장이 공동대응팀 팀장을 겸임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군에 따라 팀장이 공동대응팀 업무에 관여하는 정도가 차이가 있다. 공동대응팀 소속 인력은 팀장이나 다른 공무원들과는 다른 공간(별도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공동대응팀 소속 인력이 다른 공무원들과 소통이나 교류를 할 수 있는 물적 환경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팀장 역할을 수행하는 관리자 또한 다른 공간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대응팀 업무에 대한 조정이나 개입, 인력에 대한 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팀장이 공동대응팀 사무실에 자주 찾아와서 업무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하지만, 팀장 고유의 업무가 있고, 공동대응팀의 업무가 팀장의 업무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은 시군도 있어서 팀 내 인력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팀장, 여성보육과의 가족, 여성가족팀장은 있죠. 그런데 그 팀장의 역할에 공동대응팀 업무를 넣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상담사가 공동대응팀 행정 총괄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는 기형학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결제를 올릴 때 상담사가 올리죠. 행정을 받쳐주는 주무관이 없어요. (면접조사 참여자 A)

각 시군마다 관리자 역할을 하는 팀장의 공동대응팀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도도 상이하다. 자주 공동대응팀 사무실에 찾아와 업무 논의를 하고,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동대응팀 업무 전반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관리자뿐 아니라 공동대응팀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주사(주무관)의 여부도 시군마다 차이가 있다.

이분들이 외부에서 채용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원래 이 조직에 있던 분들이 공고를 통해서 이 업무를 하기 위해 채용이 됐고, 경찰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경찰서에서 일하다가 낯선 청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저는 그러면 소속감을 심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공간 자체가 분리되는데 팀장님도 없고 주무관도 그냥 왔다 갔다만 하니까 그게 제대로 자리를 잡을지 그것도 걱정이예요. (면접조사 참여자 D)

업무 관련해서 긴밀하게 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실은 없어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었거든요. 시는 또 바쁘다 보니까 저희는 또 공간도 아예 분리가 돼 있잖아요. 팀장님이나 업무 담당자를 만나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상담소하고도 부딪히는 일들도 있고 그 위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서로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좀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기는 하다, 업무라는 거는 실은 우리가 사업이 계속 확대가 되잖아요. 이 일은 제가 해보니까 하면 할수록 일이 많아요. 근데 내가 하고자 하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일은 무한정 늘어나요. 근데 이제 아직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보이는 한정 내에서만 지금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는 일을 할 게 너무 많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자원도 없고 거기에 대한 서포트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너무 많죠. (면접조사 참여자 C)

이러한 구조적 한계의 보완점으로서 상담사에게 선임상담사직을 부여하면서 어느 정도 관리자의 역할을 부과하고자 하였다. 처음 채용 시 상담사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라’ 급, 통합 사례관리사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마’ 급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공동대응팀 인력 내에서 좀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상담사에게 그 역할을 주게 되는 구조이다.¹⁸⁾ 그리고 공동대응팀을 운영하는 시군 입장에서는 필요로 하는 경력이나 경험에 비해 급여수준 등은 충분하지 않아서 채용 시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18)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직급의 차이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공동대응팀 인력과 상담소 인력의 임금수준이나 신분 상태의 차이에 대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도 한다.

공동대응팀에 조직도를 보면, 상담사가 8급이니까. 상담사를 선임으로 지정했어요. 매뉴얼 상에. 그리고 처음에는 선임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사실은 조직이다 보니까 위계가 필요하다는 문제들이 좀 생겼죠. 체계 자체가 급수가 있으니까. (면접조사 참여자 A)

임기제 채용을 할 때도 상담사가 급이 한 급이 더 높아요. 저희 얘기가 다 도움이 되는 채용을 하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상담사를 채용을 할 때 자격 기준을 보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일 수밖에 없어요. 또 상담학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집 한 채를 팔아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임기제로 뽑으면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 지원을 하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채용이 1차적으로 힘들고요. 통합사례관리사는 상담사보다 급이 한 급이 낮아요. 그리고 자격 기준도 그거에 따라 다르겠죠. 역할을 너무 잘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면접조사 참여자 D)

팀장 역할을 하는 관리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상담사에게 선임 직위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선임상담사라는 직위를 부여하더라도 팀 내 구조에서 선임상담자로서 업무 분담이나 논의 과정에서 권한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선임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공동대응팀 내 인력 구조와 권한 구조는 팀장이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연동되어 있다. 시군의 여성관련부서 팀장이 공동대응팀 총괄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자가 부재한 경우도 있어서 공동대응팀 내 인력들의 업무 처리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상담사에게 좀 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권한을 실행하기에도 어려워 보인다. 업무 수행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각각의 인력들의 업무의 책임 소재나 권한 등을 좀 더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2) 직군별 업무 이해도 및 사건 판단의 차이

직군별로 업무나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상이해서 업무를 협의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공동대응팀 운영 매뉴얼 등에서 경찰,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 각각의 역할 및 주요 업무를 정리해주고 있지만,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업무를 분담하기 어렵거나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 진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업무 분담을 정확하게 정리해줄 관리자가 부재하거나, 이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을 때 담당자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직군별 업무 이해도나 역할에 대한 이해도 상이, 적절한 업무 부담의 어려움. (서면조사 참여자 3)

역할분담이 구분은 되어있으나 실제적으로 상담사와 통합사례관리사 업무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명확히 분담되어지지는 못한 부분이 있지만 협력하여 일처리 하고 있음. 업무를 조율해야하는 상황에서는 관리자가 부재하고, 업무를 조율해야 하는 기준이나 선례가 없어 조율이 쉽지 않음. 실제로 주요 결정은 상담사와 통합사례관리사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팀 내에서 합치된 의견과 업무방식을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실제로 지원방향을 결정하는데 의견차이가 있었고, 경찰과 대응팀간의 협의방식에 아쉬움도 있어서, 좀 더 명확한 기준으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서면조사 참여자 13)

또한 사례 관련 회의를 할 때 팀 내 인력들 간에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들이 상이해서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경찰,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의 각자의 배경과 지원 경험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례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상이할 수 있다. 이를테면 상담사들은 상담을 통한 변화 등에 초점을 둔다면, 사례관리사는 개인의 전체적인 상황에 초점을 두고 필요한 복지적 개입으로의 연계를 좀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이나 판단의 차이는 지원 방향을 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상담사들이 보는 시각하고 사회복지사 이제 사례관리사가 보는 시각이 정말 달라요. 그래서 상담은 대부분 부담감을 느끼더라고요. 이게 상담을 통해서 뭐가 달라질 수 있어 이 사람은 상담이 꼭 필요해, 그런 시각으로 이제 개입이 이거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에 더 포커싱을 두고, 통합사례관리사는 전체적인 걸 봐서 이 사람은 어찌 됐든 우리가 설득을 해서 상담이 필요하다면 이 사람이 거부했다 하더라도 설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끌어오는 작업도 우리는 필요하다, 그걸 우리가 역할을 하는 거다, 그렇게 보는데 이 소장님이 상담소 소장님이 또 컨트롤 하다 보니까 시각이 현저하게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희들이랑 회의를 하면서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고 있어요, 뭐 이런 거에 대한 회의가 계속 나오니까 저희는 지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욕구가 있었고 이제 이 사람의 욕구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 욕구를 끌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먼저 저희가 전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정중히 이 사람을 다른 데 이관을 하던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정말 이거를 사례관리사가 해야 돼 아니면 상담사가 해야 돼 뭐 이런 걸로 아주 같듯이 너무 심했어요. (면접조사 참여자 B)

경기도에서는 공동대응팀 인력들의 전문성이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간담회의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초기 구축 과정에서 도의 사업 담당자가 해당 시군에 직접 방문하여 업무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운영지침 매뉴얼을 제작했다. 그리고 직군별 간담회

를 계획하여, 2023년 4월 6일 상담사를 대상으로 1차 간담회를 진행했고, 2023년 4월 12일 통합 사례관리사를 대상으로 2차 간담회를 진행하는 했다. 간담회를 통해 통합사례발표회, 2023년 워크숍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업데이트된 운영지침을 소개하고 업무 과정에서 어려웠거나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¹⁹⁾ 간담회의 참여자들은 각 시군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 자신의 사례지원 경험을 공유하고, 지원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중요한 정보들을 나눌 수 있어서 실제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 한다.

이러한 직군별 간담회뿐 아니라 모든 직군이 함께 각자의 업무 수행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개인의 경험이나 역량에 따라서 사례를 판단하거나 지원방향을 결정하는 데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전문성이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3) 경찰의 근무형태 및 협조 정도의 차이

공동대응팀이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공동대응팀 구축 과정에서 경찰의 요구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모든 시군의 상황이 동일하지 않으며 공동대응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경찰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동대응팀을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저희 시에서 공동대응팀을 만들게 된 계기가 그전부터 계속 경찰서에서 푸시는 있었지만, 이번 민선8기 때 시장님이 공약 사항으로 있어요. 근데 공동 대응팀이 만들어지려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의 협조가 진짜 중요해요. 경찰이 이거에 대해서 협조적이지 않으면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일단 경찰에서 먼저 푸시가 들어왔는데 시장님이 공약으로 넣어버렸기 때문에 만들 때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선발 주자로서 여기저기서 얘기를 듣다 보면 경찰 쪽에서 협조가 안 돼서 만들고 싶은데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면접조사 참여자 D)

공동대응팀 구축 과정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을 공유했지만, 경찰 조직 내 인사발령 등으로 초기 구축 과정과 현재 경찰 상황이 변화된 경우도 있고, 공동대응팀에 결합하는 형태도 상이했다. 공동대응팀 사무실 내에서 함께 상근하는 경우도 있었고, 소속 경찰서를 본거지로 하여 공동대응팀을 오가면서 근무하는 등 비상근의 형태도 있었다. 초기 사건을 판단하고, 동의된

19)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

사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경찰의 근무방식이나 공동대응팀 업무에 대한 이해도 등이 상이할 때 공동대응팀 업무 수행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경찰이 공동대응팀 사무실에 상근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할 수 있지만, 경찰서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근무할 수도 있다. 비상근 형태로 근무할 경우 공동대응팀 내 업무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나 중요한 결정들을 안정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4)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의 편차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종사자의 전문성이나 역량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박선영 외, 2018; 김정혜 외, 2019; 심선희, 2021). 개별 기관마다 종사자들의 전문성이나 역량이 상이하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의 질과 양의 문제가 대두되어왔기 때문이다.

공동대응팀의 경우도 인력의 전문성이나 역량의 차이가 또 하나의 이슈로 제기되는데, 폭력 피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업무 수행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시군에 따라 상담자나 통합사례관리사의 경력이나 폭력 피해 지원 경험은 상이했는데, 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 상황에 대한 이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위급 상황이나 폭력 피해의 정도는 사건에 따라 상이한데, 초기 상담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는지도 중요하다.

통합사례관리사나 상담사 등이 여성폭력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던 경우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이 있음.
(서면조사 참여자 2)

이게 중간에 통합 사례여서 성폭 피해가 있거나 할 경우는 이게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게 아닐 경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저희 지역 관내에 가폭 상담소로 연결해줘야 되는 거죠. 해바라기센터에 넘기기도 하는 것 같은데, APO나 이런 데서는 우리처럼 세세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긴급 지원을 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 거기서도 물론 지속 상담은 하지만 그냥 좀 모든 걸 좀 잘 들어주고 시간을 가지고 쪽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곳은 지역 상담 기관인데 그거를 공동대응팀에서는 한 번에 그걸로 분리해내지 못하는 거죠. (면접조사 참여자 K)

폭력 피해 지원 경험의 유무가 피해 상황을 이해하고 사례 판단 시 절대적인 요소라고 할 수는 없지만, 폭력 피해 상황에서의 초기 대응 및 빠른 판단과 개입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공동대응팀 내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표준화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3. 소결

공동대응팀이 구축되면서 시군의 피해자 지원체계에 일정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었다. 초기 구축과정에서 지역의 상담소 등에서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피해자 지원기관이 추가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불편함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구축 이후에는 일정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공동대응팀에서 초기 상담을 진행한 후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역의 상담소나 다른 유관기관에 연계하고 있었고, 공동대응팀의 법률상담 지원을 지역의 상담소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도 했다.

공동대응팀의 주요 강점 중 하나는 경찰에 신고된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개입과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에 신고된 사건이 모두 피해자 지원기관으로 연계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상황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추가적인 개입을 통해 문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대응팀이 신고된 사건을 재검토하고 개입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피해 발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중요할 수 있다.

또한 민·관·경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법률홈닥터 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공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주요한 강점이었고, 이러한 공적 자원의 활용은 피해자 지원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었다. 복지지원 연계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나 번거로움을 단축시킬 수 있었고, 피해자들이 스스로 찾아보고 확인해야 하는 일을 감소시켜줄 수 있었다.

공동대응팀이 지원하는 폭력의 유형은 대부분 가정폭력이었다. 가정폭력뿐 아니라 성폭력까지 포괄하는 공동대응팀으로 출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정폭력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동대응팀의 주요한 기능은 초기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었는데, 업무를 수행하면서 초기 대응의 범위나 정도에 대해서 고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원범위나 지원방식의 경우도 일정한 범위나 방식에 제한을 두기보다는 피해자들의 상황이나 요구에 따라 확장되고 있었다. 지원 내용이나 범위는 포괄하는 폭력의 유형과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가정폭력 사건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 사건 지원에 수반되는 지원 내용들로 지원범위가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동대응팀 내부적인 운영에 있어서도 관리자의 역할, 인력의 전문성이나 역량의 편차 등이 있어서 시군마다 상황이 상이했고, 경찰의 근무형태나 협조 정도도 차이가 있었다. 공동대응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공동대응팀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동대응팀 내 인력구조, 관리자 체계, 인력의 역량을 표준화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V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확대 방안

1. 공동대응팀 운영 모델(안)과 쟁점
2. 공동대응팀의 안정적인 구축과 확대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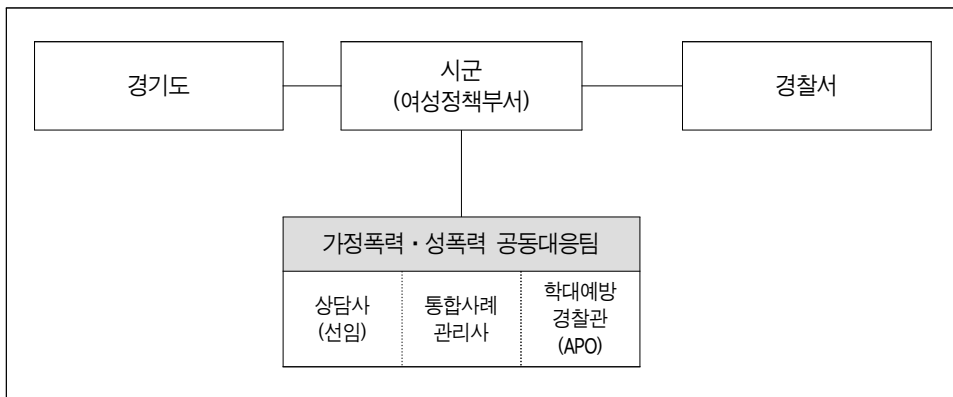
1. 공동대응팀 운영 모델(안)과 쟁점

가. 공동대응팀 운영 모델(안)의 기본 구조와 특성²⁰⁾

1) 공공 기반 모델

공공 기반 모델은 공동대응팀을 기획하면서 설계한 기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시군-경찰서가 수평적 구조로 협력체계를 형성하고, 실질적 운영은 시군에서 하는 형태이다. 2023년 10월 기준, 공동대응팀 구축 및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8개의 시군이 모두 이러한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²¹⁾

[그림 5-1] 공공 기반 모델 조직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가 민간 상담소를 시작으로 구축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형태로 변화되어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는 다수의 민간상담소나 보호시설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구축되는 피해자 지원기관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운영(위탁운영)하는 형태로 구축되면서 피해자 지원기관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경기도의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은 이러한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피해자 지원체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0)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모델 및 시군 선정절차 개선안 안내)를 참조하여 3개의 모델(안)의 기본 구조와 특징 등을 분석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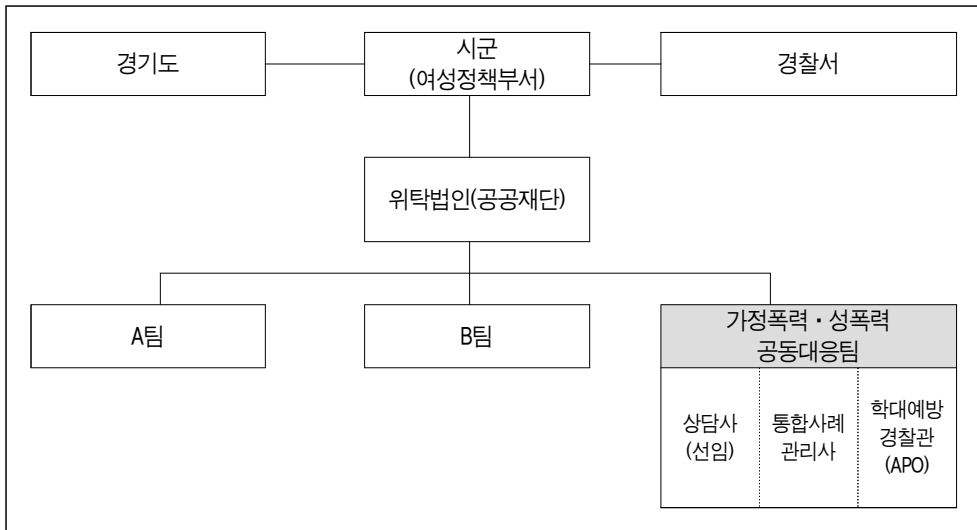
21) 2023년 하반기에 3개의 시군이 추가되어 2023년 10월 기준 8개의 시군에서 운영하게 되었지만, 3개의 시군은 준비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 기반 모델의 실질적인 운영은 시군에서 하게 되면서 상담사나 통합사례관리사 채용은 시군의 기준에 따라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게 되며, 상담사나 통합사례관리사의 신분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된다. 사무실은 청사, 공공기관, 시·군에서 관리하는 건물(가족센터, 행복센터, 복지관, 공공 여성휴게공간) 등에 설치하도록 하며, 공동대응팀 인력은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 경찰관(APO)으로 최소 3명이다. 경찰이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와 함께 상근하는 구조로서 경찰이 상담사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근무한다는 점에서 경찰이 폭력 피해자에 대한 초기 대응의 어려움이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 경찰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내부 사례회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한 논의들을 수시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2) 민관 협력 기반 모델

민관 협력 기반 모델은 공공 기반 모델과 민간 기반 모델을 결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시군-경찰서가 수평적 구조로 협력체계를 형성하는 기본 틀은 동일하고, 공동대응팀의 실질적인 운영은 시군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복지관, 가족센터, 재단, 여성비전센터 등)이 맡는다. 공동대응팀은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하나의 팀으로 위치하게 되는 형태이다.

[그림 5-2] 민관 협력 기반 모델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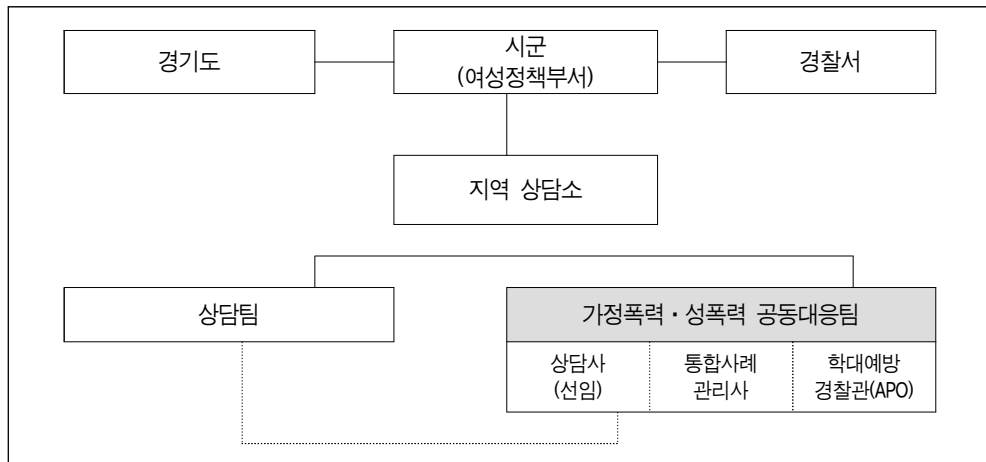
민관 협력 기반 모델은 시군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이 존재하고, 이러한 기관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군에 적합할 수 있다. 민관 협력 기반모델은 여성 폭력 피해 상담소의 업무를 제도권으로 유입하는 형태로 공공형 모델의 이점을 일부 활용할 수 있다.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공공 기반 모델에 비해서는 통합정보시스템 접근성은 제한될 수 있지만, 일부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공 자원에 대한 활용도 가능하다.

공동대응팀 소속 상담사나 통합사례관리사의 신분은 위탁기관의 (계약직) 직원이 되며, 공동대응팀의 총괄책임자는 해당 기관(위탁기관)의 수장이 된다. 공동대응팀의 실질적인 운영이 기관에서 하는 형태로 경찰은 비상근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3) 민간 기반 모델

민간 기반 모델 역시 경기도-시군-경찰서가 수평적 구조로 협력체계를 형성하는 기본 틀은 유사하지만, 실질적인 운영 기관은 시군 내의 상담소라는 점이 차이가 있다. 선정된 상담소 내의 팀으로 공동대응팀이 위치하게 된다.

[그림 5-3] 민간 기반 모델 조직도



지역의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민간 기반 모델에 지원하여 공동대응팀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민간 기반 모델은 해당 시군에 피해자 지원기관으로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담소가 존재하고, 공동대응팀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경우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군마다 상담소의 규모, 상담소 종사자의 역량 등이 상

이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대응팀 운영 역량을 갖춘 상담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상담소에서 공동대응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담 업무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으나 통합사례관리사 인력과 업무가 추가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민간 기반 모델의 경우도 공동대응팀의 사업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운영비 지원으로 상담소에서 피해자 지원비를 직접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피해자 교통비, 의복비, 다과비(식비), 긴급생활용품비 등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경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다.

민간 기반 모델의 공동대응팀 상담사나 통합사례관리사의 신분은 해당 상담소의 직원이 되며, 기존에 시비로 채용된 인력이 있는 경우 추가 채용 과정 없이 상담소 내 인력을 공동대응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경찰은 비상근하는 형태가 된다. 운영 인력과 구조는 기존의 공동대응팀의 인력구성과 같고, 종사자 총괄 관리는 상담소의 소장이 맡는다. 공동대응팀을 운영하는 상담소의 경우, 공동대응팀 운영과 관련된 워크숍, 통합사례발표회, 역량강화교육 등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상담소는 도 및 시군의 지도 점검과 평가를 받게 되며,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기관의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

나. 3개의 모델(안) 비교 및 쟁점

경기도에서는 지난 2~3년간의 공동대응팀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시군의 상황을 고려하여 공동대응팀 운영 모델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시군-경찰서’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APO,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가 한 팀을 이루어 업무를 수행한다는 기본 구조는 동일하지만, 시군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현황 및 시군의 상황 등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운영 주체 및 운영 방식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3개의 기본 모델안을 고안하고 있는데, 각각의 모델안의 기본 구조와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5-1] 경기도 공동대응팀 운영 모델(안)

구 분	공공 기반 모델	민·관 협력 기반 모델	민간 기반 모델
사업 운영 주체	- 시·군 (여성폭력사업 담당과)	- 시·군에서 운영 또는 위탁관리하는 기관(복지관, 가족센터, 재단, 여성비전센터 등)	- 지역의 상담소
주요 업무	- 112 신고사건 - 일반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업무	- 112 신고사건 - 지역사회 솔루션 전담	- 112 신고사건
장소	- 청사, 공공기관, 시·군에서 관리하는 건물(가족센터, 행복센터, 복지관, 공공여성공간 등)	- 위탁 관리하는 기관이 사용하는 공간	- 상담소 내
인력 구성 및 규모	- 상담사 1명 - 통합관리사 1명 - 경찰 1명(상근)	- 상담사 1명 - 통합사례관리사 1명 - 경찰 1명(비상근)	- 상담사 1명 - 통합사례관리사 1명 - 경찰 1명(비상근)
※ 시군 상황, 범죄발생률, 경찰서 수 등에 따라 인력은 차등 지원되며, 직군별 종사자 수도 변경가능			
행복이음 정보시스템	- 접근 가능(통합사례관리사가 사용)	- 접근 가능(통합사례관리사가 사용)	- 접근 불가(공동대응팀 거점센터에서 열람지원)
종사자 채용 및 관리	-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 공무원, 기간제 등 정원(외)인력	- 위탁 관리하는 기관의 정원(외) 인력	- 상담소 인력(계약직) ※ 업무지시 시군, 도에서 직접 수행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 참조

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업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 기반 모델’의 공동대응팀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이용자들에게 좀 더 많은 신뢰감을 줄 수 있고, 공공자원에 접근 가능하다는 점은 공공 기반 모델의 강점이다. 타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동대응팀 운영 방식을 다양화하면서, 공동대응팀의 지원 대상도 확대될 수 있다. 향후 공동대응팀은 112이 신고 사건뿐 아니라 ‘일반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의 기능을 추가하여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상담기관으로서 지원 사례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신고 사건 이외의 사례까지도 확장하여 지원하게 될 경우, 인력의 규모나 상담의 범위 등에 대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담의 경우 피해자 지원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담 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공공 기반의 상담기관이라는 점은 피해자/이용자에게 기본적인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지만, 이는 그만큼 상담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공공 기반 모델이 갖는 강점을 최대화하면서 공동대응팀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군차원에서 꾸준히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민관 협력 기반 모델’은 112신고 사건뿐 아니라 지역의 ‘통합솔루션’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 ‘여성긴급전화 1366 경기센터’에서 여성가족부의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시범사업(통합솔루션지원단)’ 운영 중이다. 연계지원 기반의 여성긴급전화 1366이 통합솔루션 기능을 추가하면서 피해자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 기관에서 주도하는 피해자 지원기관과 민간 주도의 피해자 지원기관의 지원방식은 상이할 수 있다. 피해자를 지원해 온 경험의 유무나 정도, 피해 상황에 대한 이해나 접근 방식, 피해자 지원 시 중점을 두는 요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물적 환경과 자원 등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방향과 시군의 운영 방향이 상이하여 갈등이 발생하거나 기관의 본래의 업무도 병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화성시의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가 이러한 모델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었는데, 상담사의 소속이 위탁기관(재단)이 되면서 상담사는 공동대응팀 업무 이외에 기관의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구조가 되었던 것이다. 민관 협력 기반 모델의 경우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설계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도 및 해당 시군, 기관의 공동대응팀 운영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입장과 상황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하면서 공동 대응팀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대응팀 사무실의 위치도 중요할 수 있다. 관리자나 행정 지원 공무원 등은 공동 대응팀 소속 인력과 다른 공간에 위치하거나 거리 상으로 멀리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기도 했다. 민·관 협력 기반 모델의 경우, 시군의 청사와 더 거리가 있는 곳에 위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공동대응팀 운영 및 관리 선정에 있어서 위탁기관의 위치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간 기반 모델’은 기존의 피해자 지원기관의 지원 경험과 상담소의 역할을 공동대응팀으로 흡수하여 가용 인력이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공동대응팀 소속 상담사와 통합사례관리사 채용 시 일정한 자격조건이 있지만, 시군마다 공동대응팀 소속 인력의 전문성이나 피해자 지원 경험은 상이할 수 있다. 이는 공동대응팀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 역량을 표준화하고 향상시키는데 일정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지역의 상담소 내의 인력도 개인마다 역량 차이가 적지 않지만, 상담소 내에서 피해자 지원 경험을 어느 정도 축적한 인력을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 어느 정도 숙련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은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공동대응팀을 구축하게 되는 상담소는 기존에 상담소에서 지원하던 상담이나 기타 지원에 112신고 사건이 추가되는 형태이다. 지금도 공동대응팀 연계를 통해 112 신고 사건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경우 112신고 사건과 직접적으로 상담소에 유입되는 사례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할 것인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공동대응팀의 안정적인 구축과 확대 방안

가. 시군의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운영모델안 도입

공동대응팀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시군별 상황, 공동대응팀 운영 현황 등이 상이했다. 인구 규모, 경찰 신고 건수도 다르지만, 무엇보다 지역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및 기타 사회복지관련 기관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²²⁾ 이러한 시군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서 경기도에서도 공동대응팀 운영 방식을 다양하게 열어두고 있다. 2023년 하반기에 공동대응팀을 추가적으로 구축할 시군을 공모하면서 공공 기반 모델, 민관 협력 기반 모델, 민간 기반 모델을 제시한 바 있지만, 그 이외에도 시군의 상황을 고려해서 시군에서 제시하는 운영모델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공공 기반의 피해자 지원체계로서 공공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공동대응팀의 주요한 강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강점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식이 공동대응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점을 기반으로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피해자 지원기관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동대응팀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제시한 3개의 모델안을 좀 더 세분화하여 모델안을 구체화해볼 수 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나 해바라기센터가 설치된 시군의 경우, 이러한 지원체계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형태로 공동대응팀을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22)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은 상이하다. 경기도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기관이 8개소(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2개소 + 해바라기센터 6개소)이며, 31개 시군의 피해자 지원기관은 총 95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31개 시군의 피해자 지원기관 현황은 도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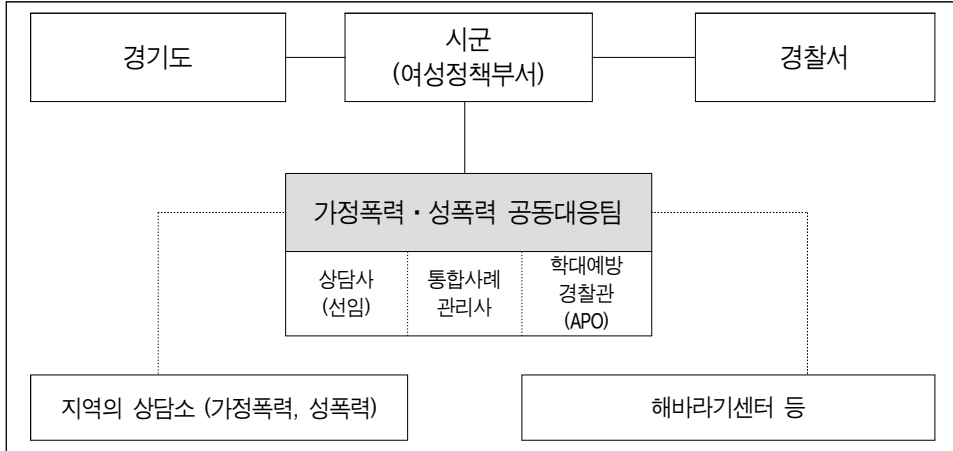
[참고 표 1]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총계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보호시설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 보호시설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전체	95	41	13	27	4	12
남부	67	32	12	16	2	8
북부	28	9	1	11	2	4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 (2023.10.12. 제공)

[그림 5-4] 공공기반 모델(안): 지역의 피해자지원기관의 허브(hub)



나. 지원하는 폭력 유형을 특화한 공동대응팀 인력 구성

공동대응팀의 기능 및 역할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대응팀에서 지원하는 폭력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어떠한 폭력까지 포괄할 것인지는 공동대응팀의 운영 방향, 지원 범위, 인력 구성 등과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공동대응팀 구축을 위해 제정된 조례에는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제로 되어있다. 가정폭력을 명시하고 있긴 하지만 ‘여성폭력’이 포함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 전반을 다루는 공동대응체제로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동대응팀은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²³⁾ 지금까지 운영 실적을 보면 ‘가정폭력’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가정폭력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경기도 내 2개의 경찰청과 44개의 경찰서에 신고된 건수는 107,085건이었고, 이 가운데 가정폭력 70,061건(65.4%), 성폭력 9,774건(9.1%), 데이트폭력 19,726건(18.4%), 스토킹 7,524건(7.0%)이었다.²⁴⁾ 경찰 신고 사건 가운데 가정폭력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공동대응팀

23) 서울시의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소나무센터’로 센터의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폭력 피해자 및 당사자들이 센터를 이용하는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도 피해자들이 공동대응팀을 이용하는데 부담감을 낮추기 위해 공모를 통해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이라는 명칭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4) 2022년 경기도 31개 시군의 폭력 신고 사건 수는 다음과 같다.

의 APO가 이동학대를 포함하는 가정폭력담당 경찰관으로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사건에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갖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초기대응이나 지원방식 등은 다를 수 있고, 현재의 공동대응팀 구조는 가정폭력 사건의 초기 대응에 좀 더 적절하게 설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유형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한 명의 피해자에게 하나의 유형의 폭력이 발생하기보다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특정 폭력 유형으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공동대응팀의 기능을 안정화하거나 확대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 현재 공동대응팀에서 지원하는 폭력의 유형은 대부분 가정폭력에 집중되어 있지만, 법률지원 사례 가운데 20대 사례 중에는 스토킹이나 디지털 성폭력 비중이 10~20% 수준을 차지한다는 시군도 있었다.²⁵⁾ 또한 앞서 언급한대로 경찰 신고 사건 가운데 가정폭력 이외에 성폭력, 스토킹 등의 비율도 적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공동대응팀의 지원 폭력 유형을 검토하고, 특정 폭력 유형에 특화된 형태로 시군마다 공동대응팀 인력 구성 등을 차별화할 수 있다.

[참고 표 2] 2022년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경찰신고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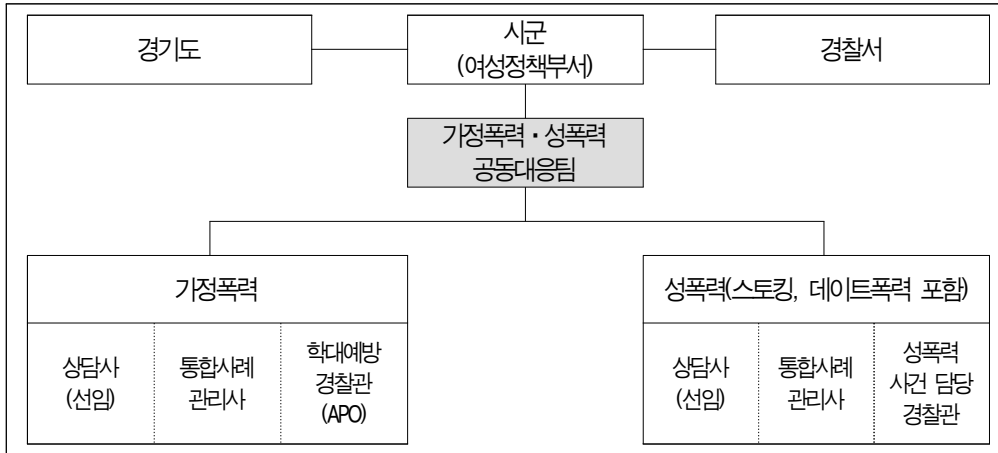
(단위: 건수, %)

구분	전체 (2청,44개소)	전체 (44개소)	미설치 (34개소)	설치 (10개소)
계	107,085 (100.0)	104,856 (100.0)	74,231 (100.0)	30,625 (100.0)
가정폭력	70,061 (65.4)	68,364 (65.2)	48,362 (65.2)	20,002 (65.3)
성폭력	9,774 (9.1)	9,774 (9.3)	7,007 (9.4)	2,767 (9.0)
데이트폭력	19,726 (18.4)	19,382 (18.5)	13,652 (18.4)	5,730 (18.7)
스토킹	7,524 (7.0)	7,336 (7.0)	5,210 (7.0)	2,126 (6.9)

주. 본 통계에서 '설치한 시군'은 화성, 김포, 하남, 파주를 의미함.
자료: 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

25) 공동대응팀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한 변호사는 20대 상담사례 가운데 10~20%는 디지털 성폭력 사례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림 5-5] 폭력 유형별 팀 구축(안)



시군마다 신고 사건 가운데 가정폭력, 성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고 사건의 유형을 검토하고, 공동대응팀의 성폭력 등의 폭력에 대한 대응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구조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공동대응팀의 인력 구조를 APO 경찰 이외의 성폭력 사건 담당 경찰관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APO 2명, 상담사 2명, 통합사례관리자 2명인 시군의 경우, 성폭력 전담 경찰관 1명, 성폭력 상담사 1명, 통합사례관리사 1명으로 1팀을 구성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APO,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가 각각 1명의 경우에도 지역의 신고사건 현황이나 피해자지원기관 현황에 따라서 성폭력 사건의 비중을 높여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성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등의 초기 대응에도 중심을 둘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각 시군의 신고 상황, 지역사회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현황 등을 고려해서 공동대응팀의 지원 폭력의 범위를 특화하는 형태로, 시군마다 공동대응팀의 인력 구조나 지원 범위를 차별화할 수 있다.

시군의 상황이나 특성도 상이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 지원에 더 집중하는 방향이 적합한 시군이 있을 수 있고, 좀 더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포괄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체계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 적합한 시군도 있을 수 있다. 시군의 상황에 따라 공동대응팀 운영모델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공동대응팀에서 지원 가능한 폭력의 유형도 시군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 상담사나 통합사례관리사의 폭력 사건 지원 경험 및 전문성, 경찰서 내 신고

사건 가운데 가정폭력 이외의 여성폭력 신고 사건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공동대응팀 내 팀을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 공동대응팀 인력규모의 확대 및 안정화

공동대응팀의 기본 조직체계는 시군의 ‘여성 관련 부서’²⁶⁾ 팀장이 공동대응팀 팀장을 겸임하는 체계로 설계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시군에 따라 담당 부서 팀장의 공동대응팀에 대한 관심이나 공동대응팀에 관여하는 정도(역할 수행)는 차이가 있었다. 시군에 따라 공동대응팀의 업무가 팀장의 업무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무엇보다 공동대응팀은 시군의 다른 부서와 다른 공간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공동대응팀 내 소속 공무원이 타 부서의 공무원과 연대감을 갖거나 교류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팀장의 경우도 공동대응팀 사무실 내에서 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동대응팀 소속 인력과 일상적인 접촉이나 대면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팀장님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기도 하지만, 팀장의 경우도 고유의 업무가 있어서 공동대응팀 업무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상황이기도 했다.

공동대응팀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뿐 아니라 공동대응팀 업무에 대한 행정지원을 수행하는 행정주사의 경우도 시군마다 차이가 있었다. 행정업무를 지원해주는 별도의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공동대응팀 내에서 행정처리까지 다 수행해야 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었다. 팀장 부재 시 상담사에게 (중간)관리자급의 역할을 주고자 했지만, 시군마다 상담사의 경력, 공동대응팀 입사 시기, 임기제공무원의 직급 등이 상이해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기 쉽지 않았다.

경찰의 경우도 상근하는 경우와 비상근하는 경우가 혼재했다. 공동대응팀의 구축과 운영 과정에서 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경찰에 신고된 사건을 기반으로 공동대응팀의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대응팀 업무가 안정적으로 수행되고, 폭력피해자 지원체계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공동대응팀 인력 구조를 좀 더 안정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여성관련부서의 팀장이 공동대응팀 업무의 총괄책임자라는 점을 명확히 명시하고, 공동대응팀 업무의 총괄책임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한다. 공동대응팀 소속 팀원들의 경우에도

26) 시군에 따라 공동대응팀을 총괄하는 부서는 여성정책과, 여성보육과, 여성가족과 등으로 차이가 있다.

업무 범위, 책임 소재, 권한 등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라. 초기 대응 및 지원 범위의 기준 정비

경기도 공동대응팀은 초기 상담, 전문기관 연계, 복지지원 등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통합형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경찰에 신고된 사건 가운데 상담 등의 지원에 대한 동의 의사를 표현한 경우 공동대응팀으로 이관되어 초기 상담 및 추가적인 지원을 위한 사례로서 지원대상이 된다.

지난 3년간 공동대응팀의 운영 실적을 보면, 지원 범위는 매우 광범위했다. ‘안전 및 심리지원’ 이 전체 지원 건수 가운데 60~70% 수준을 차지했지만, 전문기관 연계, 가정방문, 복지지원, 법률상담 등 기존의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진행하던 지원 내용과 유사했다. 특히 2023년에는 실적 분류 및 정리 시 ‘피해자 지원’, ‘의료지원’ 항목을 추가하고 있는데, 법률지원뿐 아니라 의료지원까지 진행하면서 지역의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 등에서 진행되는 피해자 지원범위와 더 가까워졌다. 다만 상담의 경우 초기 상담만을 진행하거나 법률지원의 경우 법률상담만을 진행한다는 점 등 지원내용별 세부적인 지원범위나 방식은 상이했다. 상담지원의 경우, 공동대응팀 내 상담사 중에는 초기 상담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지속상담 혹은 심층상담의 필요성을 느끼기도 했고, 상담을 2~3회까지 지속하는 경우도 있었다. 초기 대응 시 상담의 범위, 상담 시 파악해야 하는 상황, 지속 상담의 여부 등 상담지원의 경우도 지원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고 갈등하게 될 수 있다.

공동대응팀의 지원 범위는 공동대응팀이 앞으로 어떠한 기능을 하는 피해자 지원기관(지원체계)로서 자리를 잡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피해자 지원기관으로서 지역의 상담소와 어떠한 차별성을 갖게 될 것인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2023년 하반기에 여성가족부에서 여성긴급전화 1366에 통합솔루션지원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하면서 여성긴급전화의 기능과 역할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여성가족부의 통합솔루션지원단은 경기도의 공동대응팀과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부산시의 여성폭력종합지원센터의 설립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가 변화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젠더폭력통합지원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지형이 변화하는 가

운데,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의 기능 및 역할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곧 공동대응팀의 초기 대응과 지원 범위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의료지원의 경우, 일부 시군에서는 공동대응팀에 의료비 예산을 일부 배분하여 공동대응팀에서 직접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의료지원까지 포함한다고 할 때 의료지원의 방식(직접지원 등)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마. (통합)사례회의 체계화 및 전문성 강화

공동대응팀의 핵심 기능은 초기 대응을 강화하여 사례를 사정/판정한 후 통합적 사례관리가 필요한 사례를 발굴하고 사후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이 신고 상황에서 경찰이 현장에서 사건의 위험성이나 재발가능성을 판단하기도 하지만, 공동대응팀 내에서 사례회의를 거쳐 좀 더 깊이있게 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지원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사례회의를 통해 상담부터 복지지원까지 피해자의 상황 전반을 이해하고 파악하여, 피해자의 상황을 개선시키고 피해회복을 지원하게 되는데, 피해자 지원과정에서 지원방향을 설정하는 사례회의는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사례회의는 내부 인력들이 진행하는 ‘(내부)사례회의’와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사례회의’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내부사례회의는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좀 더 큰 규모의 통합사례회의는 1년에 3-4회 정도 진행한다고 할 수 있으며, 공동대응팀의 경우도 시군에 따라 사례회의의 주기, 형식 등은 상이했다. 사례회의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대응팀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피해 상황에 대한 이해, 피해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 등을 판단하는 것은, 피해자의 삶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례회의 주체들의 역량과 관점이 중요하다. 어떠한 기관이나 인력의 편차는 존재할 수 있는데, 공동대응팀 내 팀원들 개개인의 경험과 역량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전문성을 어느 정도 표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폭력피해 지원업무 담당자들은 폭력 피해의 유형, 피/가해의 특성, 피해지원의 방향, 관련 법과 제도 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이 요구되기도 한다. 공동대응팀 인력이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자료 제공 등의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공동대응팀 운영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은 도 및 시군의 공동대

응팀 운영 담당자나 관리자가 주체가 되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바. 지원사례 기록과 관리의 지속 및 체계화

업무 담당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의 구축은, 피해자 지원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피해자 지원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피해자 관련 정보가 종합적으로 파악되지 않거나 충분히 공유되지 않을 때 지원의 방향,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공동대응팀 업무 수행에서 경찰의 APO시스템과 관내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어서 이를 연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APO시스템과 상담 실적 기록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지 않아서 경찰에서 전달받은 사례에 대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례회의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한 사례에 대한 정보가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계시스템을 개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에서도 통계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후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 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현재의 지원사례 정리 방식을 그대로 준용할 것인지도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활용하거나 공유하기 전에는 반드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폭력 피해 상황과 같은 정보 등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일 수 있고, 이러한 정보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때 또 다른 피해(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기록된 자료(종이문서, 파일 등)는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례를 연계할 때 불필요한 개인 정보가 공유되거나 전달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상담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초기 상담과정에서 파악할 정보들을 기록하여 전달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할 것인지, 연계지원 시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연계 상황 이외에도 후속관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공동대응팀 내 인력들이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례관리자의 정보 전반에 대해서, 보관 장소, 보관 기간, 접근 권한 등에 대해서 원칙을 세우고, 이

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

사. 지역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과 협력 관계 강화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성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이 대두되면서 각각의 폭력 유형에 맞는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피해자 지원기관들이 구축되고 있다. 이는 폭력의 유형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의 구축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지역의 피해자 지원기관 등에서는 관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체계가 통합되고 재편되는 구조로 인식되면서 새롭게 구축되는 기관들에 대해 불편함 감정을 드러내기도 한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초기에는 민간 기반의 상담소로부터 출발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변화되어왔다. 초기에 여성운동 기반으로 단체를 설립하여 운영해 온 기관부터 보호와 시혜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시작해 온 기관까지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 지원기관들이 존재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피해자 지원기관은 인력, 예산, 공간 확보 등에서 좀 더 안정적인 기반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피해자 지원 업무를 공적 영역으로 유입하고 공공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복지지원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피해자 지원 방식이 민간 기관에서 수행해 온 피해자 지원방식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폭력 피해 상담은 일반적인 심리 상담뿐 아니라 여성주의 상담이라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면서 여성폭력이 갖는 고유한 특성과 폭력 피해 발생 구조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이루어졌다. 피해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상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등이 상담의 방향이나 내용에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었다. 사회복지지원과 결합하면서 상담의 비중과 관점이 변화될 수 있고, 피해 상황보다는 피해자의 복합적인 상황을 도식적으로 파악하여 복지지원에 더 주목할 수도 있다.

새롭게 구축되는 피해자 지원기관들은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고 기존의 피해자 지원의 공백을 메우고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의 상담소 등에서 처음에 공동대응팀 구축 시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공동대응팀 구축 이후 여러 측면에서 협력하고 있었다. 공동대응팀의 경우도 다양한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공동대응팀의 업무를 위해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한다. 이를 테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기관의 관계자들이 만나서 각 기관의 세부적인 사업 내용

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유관기관의 유형별로 협력 체계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 공동대응팀의 협력 기관은 폭력피해지원뿐 아니라 정신건강관련기관, 아동·청소년 및 노인 관련 시설, 취업지원기관 등 광범위했다. 공동대응팀은 피해자의 복합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 상황까지 파악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게 되므로 연계기관의 유형과 범위를 더 확대될 수 있다.

피해자 지원기관과 연계방식에 대해서도 좀 더 세분화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공동대응팀이 지원하는 폭력의 유형 가운데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비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폭력 상담소와 성폭력 상담소의 협력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공동대응팀 구축 이후 가정폭력 상담소와 성폭력 상담소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협력 방식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문헌자료

- 강동욱. (2022).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관한 제언: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법학평론**, 120, 67-106.
- 강은애, 조선아. (2020).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성과관리 학술용역**.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경기도. (2021.9.15.). **2021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시군 선정 공고문**
- 경기도. (2023). **경기도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
- 경기도 여성정책과. (2022). **2022년 가정폭력 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 실적 보고** (내부자료)
- 경기도 여성정책과. (2023). **2023년 상반기 가정폭력 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 실적 보고** (내부자료)
- 경기도 여성정책과. (2023.4.)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지침**. (2차 개정판).
- 경찰청. (2022). **2022 경찰백서**.
- 김주미, 허미화. (2019)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매뉴얼 개발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중곤. (2022). 가정폭력 통합대응의 방향과 전략 : 미국과 유럽의 가족정의센터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41(3), 169-189.
- 박선영, 박복순, 김정혜, 송치선, 심선희, 이운진. (2018).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신상숙. (2008). 제도화 과정과 갈등적 협력의 동학: 한국의 반(反) 성폭력운동과 국가정책. **한국여성학**, 24(1), 83-119.
- 신준섭. (2015). 성폭력 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과 사회서비스직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의 협력 활동에 대한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치안논총**, 32, 145-268.
- 여성가족부. (2023). **2023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 원혜옥. (202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기관 협업체계 및 정보공유에 대한 고찰. **피해자학연구**, 29(1), 49-80.
- 유정민. (2020). **통합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성폭력 상담원들의 일 경험연구**. 해바라기센터

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유화정, 박은순. (2022). **5대 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미정, 홍세은, 정다은, 이인선. (2022). **해바라기센터 운영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상민, 김보람. (2019). 학대예방경찰관 (APO) 의 직무요구 및 직무자원이 보직이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직무소진과 직무열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8(3), 83-114.

이현숙, 정춘숙. (1999). **아내구티추방운동사**.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국여성의전화 엮음. 한울 아카데미.

정혜원. (2021).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협력 방안 연구-여성폭력방지 업무를 중심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신문기사

경기도 열린도지사실. (2023.1.9.). **경기도, ‘변화의 중심 기획의 경기’ 실현할 민선 8기 공약 확정**. 보도자료.

뉴스스 (2023.9.4.). **파주시, 파주경찰서와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

서울시. (2020.7.17.). **서울시-경찰(APO)청, 25개 전 자치구에 가정폭력·학대 위기가정 통합 지원센터**. 보도자료.

홈페이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이젠 센터 홈페이지(www.egen.or.kr/introduce/organ)

경기도 경기주거복지포털. (housing.gg.go.kr/html/24404.do)

부록

1. 서면조사지
2. 경기도 인구통계(2022)

[부록 1] 서면조사지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업무 담당자 의견조사

안녕하세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심선의입니다. 저의 재단에서는 경기도의 제안으로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 및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공동대응팀의 업무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비밀 보장됩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 빠짐없이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구에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년 7월

문의: 심선의(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031-220-3912)

황나리(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원: 031-220-3983), hikaling@gwff.kr

조사기간: 2023.7.3.(월)~12일(수)

[응답자 특성]

2023년 7월 기준

■ 지역	
■ 직군/직렬	<input type="checkbox"/> 상담사 <input type="checkbox"/> 사례관리사 <input type="checkbox"/> 경찰 <input type="checkbox"/> 기타(적어주십시오:)
■ 성별	<input type="checkbox"/> 여성 <input type="checkbox"/> 남성
■ 공동대응팀 입사일/업무시작일	년 월
■ 관련 경력(공동대응팀 입사 이전 경력을 의미합니다)	년 개월(유사기관의 근무기간)
	년 개월(유사업무를 해온 기간)
■ 연령	<input type="checkbox"/> 20대 <input type="checkbox"/> 30대 <input type="checkbox"/> 40대 <input type="checkbox"/> 50대 <input type="checkbox"/> 60대 이상
■ 관련 자격증이나 교육 경험	

[공동대응팀 업무 및 운영 관련 의견]

1. 공동대응팀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1-1. 공동대응팀이 구축된다는 정보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 들으셨는지요?

2. 현재 하시는 업무는 무엇인지요? (주요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2-1.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업무구분이나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업무를 조율해야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협의하거나 분담하는지 등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3. 지역의 여성폭력 대응을 위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지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수, 지원기관의 역량, 시군의 관련 사업 추진 상황 등)

3-1. 지역의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계신지요? (현재 주로 연계하거나 협력하는 기관, 현재는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필요한 협력 기관은 어떠한 유형의 기관인지 등)

4. 공동대응팀이 기존의 피해자 지원기관과 차별화된 특성이나 역할 등은 무엇일까요? (현재 혹은 이후의 방향성 등에 대해서 의견주세요)

5. 현재 업무 수행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역사회의 반응, 필요한 정보나 협력체계의 부족 등)

6. 공동대응팀에서 일하고 있는 업무 담당자로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지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업무 관련해서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 관련자료 등은 어떻게 수집하는지, 앞으로 필요한 교육이나 지원이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7. 우리 공동대응팀의 성공적인 사례나 성과가 있다면 무엇이 있으며 어떤 측면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시는지요? (성공적인 부분뿐 아니라 한계가 있는 점을 이야기해주셔도 좋습니다.)

[부록 2] 경기도 인구통계(2022)

(단위: 명, %)

행정기관	총인구수	세대수	남자 인구수	여자 인구수	남여 비율
경기도	13,589,432	5,913,694	6,839,276	6,750,156	1.01
수원시	1,190,964	528,482	599,619	591,345	1.01
성남시	922,518	408,195	456,882	465,636	0.98
의정부시	463,724	208,352	228,107	235,617	0.97
안양시	548,228	227,475	270,878	277,350	0.98
부천시	790,128	344,135	391,102	399,026	0.98
광명시	287,945	118,493	141,632	146,313	0.97
평택시	578,529	271,362	303,283	275,246	1.10
동두천시	91,546	43,973	45,673	45,873	1.00
안산시	641,660	291,091	328,940	312,720	1.05
고양시	1,076,535	461,459	525,741	550,794	0.95
과천시	78,137	28,726	38,416	39,721	0.97
구리시	188,701	80,424	93,442	95,259	0.98
남양주시	737,353	304,288	366,261	371,092	0.99
오산시	229,849	103,552	119,646	110,203	1.09
시흥시	512,912	223,534	267,861	245,051	1.09
군포시	266,213	113,878	132,165	134,048	0.99
의왕시	160,221	64,839	79,417	80,804	0.98
하남시	326,059	140,415	162,773	163,286	1.00
용인시	1,074,971	432,151	533,323	541,648	0.98
파주시	495,315	218,264	251,334	243,981	1.03
이천시	222,721	102,618	115,925	106,796	1.09
안성시	188,842	89,951	97,581	91,261	1.07
김포시	484,267	202,189	241,904	242,363	1.00
화성시	910,814	387,820	473,507	437,307	1.08
광주시	391,462	170,497	199,707	191,755	1.04
양주시	243,432	106,361	123,173	120,259	1.02
포천시	146,701	73,438	77,707	68,994	1.13
여주시	113,150	53,946	57,567	55,583	1.04
연천군	42,062	21,858	22,113	19,949	1.11
가평군	62,150	32,140	32,102	30,048	1.07
양평군	122,323	59,788	61,495	60,828	1.01

주.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이 포함된 자료임. 외국인 제외됨.
출처. 행정안전부. (2022). 주민등록인구현황. 웹 DB.